

생명·협동운동의 이론과 실천

모심과 살림

12^호

2018년 하반기

(사)모심과살림연구소는

생명의 세계관과 협동적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과 사회,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되는 지혜를 탐구하고자 200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생명·협동운동에 대한 연구 조사와 세미나 및 포럼, 관련 연구자 및 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모심과살림 12호 2018년 하반기

등록번호 서초, 사00065

발행인 황도근

기획자문 구현지 김동숙 김이경 박지은 오단이 홍덕화

기획 김현 박제선 임채도 정규호

편집 김현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designstudio.dadarm@gmail.com

인쇄 세진인쇄

펴낸날 2018년 7월 16일

펴낸곳 (사)모심과살림연구소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 서초월드 3층

www.mosim.or.kr mosim@hansalim.or.kr 02-6931-3604

책값은 8천원입니다.

목차

모심의 눈	뜨거운 사회, 차가운 사회 ! 임채도	4
기획1	평화의 시대, 남북 농업협력의 길	
	인터뷰 '평화의 제도화'로 가는 경제 협력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16
	한반도 농업공동체, 가슴 설레는 상상 ! 장경호	31
	사진으로 보는 한살림 통일농업의 꿈 ! 편집부	46
해외시선	'판문점 선언'과 촛불 시민 혁명 ! 아오야기 준이치	50
기획2	살림운동과 여성주의	
	생협운동과 여성주의 ! 박임성아	63
	좌담 미투운동이 불러온 질문 ! 로시오빠, 링링, 석탄이, 여름, 좋은날	76
이슈	사회적경제기본법 - 필요와 절실함이 간과한 것들 ! 이보아	90
현장	호혜금융 한살림펀딩의 의미와 과제 ! 박종찬	109
	GMO에 잠 못 이루는 밤 ! 장순철	117
	기후변화와 초고령화 - 농업·농촌에서 길을 찾다 ! 박지은	131
기획3	다른 세상을 위한 대안, 다른 삶을 위한 질문	141
	'비비르 비엔', 참된 삶의 철학 ! 김신양	146
	지구라는 공유지에서 잘 살기 위한 커먼즈 사용법 ! 허남혁	153
	4대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 김현우	161
연구자의 시선	동아시아 '삶의 정치'를 찾아서 ! 백연재	167
기고	관찰글쓰기를 하는 이유 ! 유영희	182
영화	밀어내지도 밀려나지도 않는 삶을 꿈꾸며 ! 김유미	192
현장(단신)	한살림재단 생명밥차 ! 이선미	202
	누구든 와서 무엇이든 배워가는 학교 ! 황진영	205

뜨거운 사회, 차가운 사회

임채도 모심과살림연구소 소장

한살림과 남북평화의 시대

촛불항쟁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단순한 정권교체 이상의 커다란 구조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18년 상반기 동안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대 사건은 아무래도 4.27 과 5.26 두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이후 10여 년간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 등 교류협력사업의 전면 중단, 미국과 UN의 대북제재, 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개성공단 폐쇄 등 바늘 하나 꽃을 틈 없는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그런 10년간의 대립과 갈등이 올해 상반기 북의 지도자 김정은의 신년사를 필두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남북과 북미간 정상회담 등 숨가쁜 상황전개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단계로 급진전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지탱해 왔던 모든

결박들이 일순간 테이블 위에서 한꺼번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올해 가을에는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9월 UN총회에서 한반도 냉전질서의 당사자들이 평화와 공존번영을 선언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장애와 우여곡절이 없지 않겠으나 선부른 낙관도 비관도 멀리하고, 지금부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평화의 흐름을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모두가 각성해야 할 때다.

사실 분단과 통일 문제는 한살림에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1989년 발표된 <한살림선언>은 민족의 분단을 “산업문명의 비극적 운명이 집약적으로 연출된 무대”로 규정한다. 지난 세기의 단선적 진화론, 기계론적 생명관이 낳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자연 그대로의 한반도를 기하학적 선으로 끊어놓음으로써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인 우리 민족을 기계적 구조와 질서의 반생명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살림선언>은 이 민족의 비극적 운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민족 내부의 생명운동과 이를 둘러싼 외적 환경이 공진화(共進化)하면서 일정한 분기점을 넘기면 자기한계를 초월하는 새롭고 높은 질서로 나아간다고 본다. 이 새롭고 높은 질서는 우리 민족만의 재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 모든 민족, 전 인류, 전 생태계가 한 형제, 한 동포, 한 생명이라는 문명적 각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운동은 생명운동, 문명 전환운동으로 합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살림선언의 기본입장이다.

<모심과 살림>은 우리 사회가 실로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는 이번 호에서 “평화의 시대, 남북 농업협력의 길”이라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1990년대 중반 북의 연이은 흉작과 ‘대기근 사태’ 이후 이남

의 농업, 농민단체를 비롯 각계 시민사회가 발기하여 주도해온 남북의 농업협력사업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의 산업기반이 많이 바뀌었지만 같은 땅,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농업은 민족감정이나 정서, 문화적 동질성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분야이며, 나아가 남북협력의 현실적·기능적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의 실효성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영역이기도 하다. 북의 입장에서는 GDP의 약 25%를 차지하고 전체 인구의 1/3이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농림어업 분야의 발전 없이 “경제와 인민생활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영농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남측의 지원만큼 효과가 높은 것은 없다. 남측도 국내 쌀의 수급 불안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고 농업협력을 포괄적인 경제협력으로 확대하여 평화로운 한반도 상황을 만드는 데 남북농업협력이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기획특집 인터뷰에 응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공단의 기업지원과 운영실무를 총괄했고 폐쇄된 이후에는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헌신해 왔던 2세대 북한학자이자 자타가 인정하는 남북경협 전문가다. 인터뷰에서 흥미롭게도 김진향 이사장은 한살림의 대북협력사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남측에서 자본의 논리가 아닌 협동조합의 원리를 가진 단위가 남북 경협에 참여한다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에서 중요한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은 개방형 경제체제로의 전환 국면에서 발생할 충격을 완화하고 북측 경제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을 수 있고, 남측의 생협 등 사회적경제 진영으로서는 시장과 협동운동의 공존모델을 소개하고 개발만능/성장만능의 실패한 ‘근대화’가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이 공존번영하는

성찰적 현대화를 한반도 전 범위에서 실현해나가는 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남북 농업협력사업을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천해온 장경호 녀름연구소 소장은 남북관계의 단계별 발전에 조응하여 민족 농업 공동체 실현을 위한 농업협력의 단계별 발전전략에 입각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개성과 금강산지구에서 있었던 남북 공동영농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화해협력단계에서 남북연합단계로 나아가는 현단계에서 남북 식량교역, 통일 밥상나눔운동 등 상호보완적인 남북 농업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는 이 시점에서 한살림이 펼치고 있는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지향도 이제 생산과 소비의 경계를 넘어 민족의 건강한 밥상을 지키고, 남과 북의 자연과 농업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며, 모든 생명들이 평등하고 존중받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실천적 과제를 받아 안게 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페미니즘, 그리고 공감과 치유의 힘

촛불항쟁 이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페미니즘이다. 미국에서 유색인종 여성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고발을 위해 해시태그를 달고 시작된 미투(#Me too)운동이 2018년 1월 한국에서 한 여성 검사의 성폭력 피해 발언을 계기로 문화계, 정치계, 학계 등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연출가, 영화감독, 시

인, 교수, 도지사, 유명 연예인들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폭로와 고발에서 시작해 최근에는 ‘홍익대 누드모델 몰카사건’을 계기로 서울 대학로에서 여성인권 주제의 단일 집회로는 최대 규모의 여성시위가 전개되기도 했다.

최근의 페미니즘 운동은 몇 가지 점에서 과거 한국의 ‘여성해방운동’과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과거 주로 진보진영의 인텔리 여성들이 여성운동의 주체가 되었다면 지금은 ‘여성일반’으로 대중화되었다는 점이다.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주최한 ‘불편한 용기’는 인터넷 카페와 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자발적 네트워킹그룹이다. 둘째, 운동의 슬로건은 전통적 페미니즘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신체 노출 차별금지’, ‘임신중지 합법화’, ‘성차별적 수사 반대’, ‘불법촬영 처벌’ 등 여성들이 겪는 구체적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와 저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점차 기업, 언론, 경찰, 청와대 등 성차별적이며 남성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셋째, 이 운동은 2016년 촛불항쟁의 연속선상에 놓여있으면서 동시에 촛불항쟁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연속적이라는 의미는 촛불항쟁 승리 속에서 확인한 공화국의 원리, 평등한 시민권리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라는 측면이다. 또한 단절적이라는 의미는 이 운동이 단순히 ‘갑질’이나 ‘성폭력’에 대한 피해고발이 아니며, 촛불항쟁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거나 수렴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고착화된 성차별 구조가 낳은 문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운동은 촛불항쟁의 안내를 받았지만 그 방향과 목표는 완전히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제 막 출발한 이 새로운 여성운동은 거대한 남성중심의 권력 체계는 물론, 미시적 사회권력, 기득권화되어 체제 내로 포섭된 제도권 페미니즘과의 구별 짓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를 정립해 나갈 것이다.

물론 그 미래가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외적으로는 일부 남성 집단의 혐오적 시각에서부터 좌/우, 보수/진보의 기성 권력의 관점이 착종되면서 좌절을 강요받을 수 있고, 내적으로 운동 목표와 방향을 둘러싼 갈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균열, 운동의 확장성과 순수성 논란, 참여 주체의 피동성 등으로 곡절을 겪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성차별적 권력 구조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이 땅 절반의 여성이 ‘인격살인’을 당하는 현실이 있는 한, 좌절은 극복되고 곡절은 치유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모심과 살림>은 남북농업협력에 이어 “살림운동과 여성주의”라는 제목으로 두 편의 특색 있는 글을 묶었다. 먼저 “생협운동과 여성주의” 원고에서 박임성아 선생은 생활협동조합과 여성주의는 활동과 조직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보고, 특히 주부들이 실제 생협 활동 경험을 통해 주체적 여성활동가로 성장하며 여성주의 리더십을 습득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그는 ‘생협운동 안에서 여성주의는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보다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생협 조직의 특성상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환경, 농업 문제라는 활동 주제만큼이나 여성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의식적 노력은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조합원 교육 등을 통해 여성주의를 생협 조직, 문화, 운동에 뿌리내리는 노력을 강조한다.

“미투운동이 불러온 질문 - 한살림 실무자들이 말하는 살림의 조직문화” 좌담회는 한살림연합과 회원생협의 1년~15년차 여성/남성 실무자 5명이 나누는 대화를 기록했다. 익명의 실무자들은 “한살림에서는 공개적인 미투발언이 없었어. 그런데 그런 발언이 있어야 정상이고 그게 가능한 곳이 더 열려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한살림이) 농업운동, 사회운동으로서의 진보적인 면이 있다면 조직문

화에서는 확실히 보수적이고 아직 가부장적인 모습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권한이 있거나 연차 등이 많은 남성들이 선후배 형동생 관계로 일을 풀어가려는 태도”, “논쟁을 꺼려하는 문화”, “지역경험도 많고 아는 사람이 많은” 남성 선배와 일하는 여성 실무자의 어려움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문화가 없는 반면...(중략)... 평등한 것 같지만 공동체가 주는 무서운 면”이나 “후진적이고 올드”한 느낌(?)까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한편 한살림이 “보수적인 문화에 더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고, 다른 조직들에 비하면 대체로 선하고 배려하려 애쓰는 마음”도 많고, “오래된 조직일수록 어떤 고착화된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점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변하고자 할 때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긍정적 요소로 이해하기도 했다. 또 “훌륭한 리더 한 명에게 맡기지 말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여러 모임들을 만들어간다면 진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살림운동이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들이 여성주의에서 제기하는 변화의 흐름과 잘 만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알려진 바대로, 미투운동은 2006년 미국 여성 인권운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13세의 여아로부터 잔인한 성폭력 경험을 들었을 때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후 겨우 “나도 그래Me, too”라고 대답한 데서 출발했다. 성폭력 피해자나 차별피해 장애인, 고문 피해자 등과 같은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폭력과 차별로 인해 받은 가장 큰 피해가 가까운 가족과 이웃 공동체로부터의 격리와 거리두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에 대한 불신과 정체성 파괴이기 때문이다. 인권피해자들에게는 어떤 전문가보다 같은 피해자들과의 연대와 정서 나누기가 중요한 치유자 역할을 한다(물론 매우 정성 어린 준비와 개입이 필

요하다).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가해자, 가해 권력 앞에서 피해자들은 사건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사건을 덮음으로써 극단의 수치심과 죄책감,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도피는 일회적인 망각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은 평생에 걸쳐 수시로 출현하는 재연과 재경험, 과도한 각성상태, 회피반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미투운동에서 촉발된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이 주목할 부분도 치유의 영역이다. 미투라는 한마디 말은 어떤 수완 좋은 전문가의 한마디 조언보다 큰 공감과 치유의 울림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 성폭력은 결코 용기 있는 소수 피해자들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내부 조직에 대한 성찰과 경청할 수 있는 열린 자세가 준비되어야 한다. 공감과 이해를 통한 상처의 치유는 새로운 여성주의 운동을 더 확장시키고 강하게 단련시킬 것이다.

차가운 사회와 뜨거운 사회

구조주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Claude Levi-Strauss는, 변화보다는 사회를 그대로 유지·지속시키는 데 더 큰 관심이 있는 사회를 ‘차가운 사회’라고 부른다. 이는 사회적 무질서 entropy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역사의 시계가 멈추어버린 듯한, 마치 원시 부족 사회처럼 “자신의 초기 상태를 무한히 유지하는 사회”다. 그리고 반대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내부 온도의 차이가 큰 사회”를 ‘뜨거운 사회’로 구분한다. 뜨거운 사회는 사회적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무질서와 질서의 대립이 격화되는 사회이다. 그 속에서 인간은 심리적·사

회적 갈등과 정치적 투쟁 속에 고통받게 된다. 사회의 공통분모로서 문화가 설 자리는 점차 축소되고 도덕적·사회적 가치나 조화와 합의라는 사회적 연결고리는 파괴된다.

차가운 사회는 비록 기술적·경제적 수준이 낮지만 그 속의 인간은 자연세계와의 관계에서 더 편안하고 충만한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문화 아래에 있고, 문화 위에는 초자연성이 존재한다. 인간은 정령이나 토tem과 같은 초자연적 존재와의 교감 속에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전일성을 경험하게 된다. 반대로 뜨거운 사회는 막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높은 성장을 달성하지만 그 내부의 인간은 성과와 경쟁에 지치고 신경증과 불안이 부풀어오르는 상태가 되어간다. 의사결정에서도 차가운 사회는 조화와 합의를 전제로 만장일치를 추구하고, 뜨거운 사회는 효율성 원칙 아래 다수결이 지배적이다.

그리 보면 우리 사회는 매우 뜨거운 사회이다. 반공과 안보를 앞세운 권위주의적 지배질서와 남성중심의 불평등한 성권력 질서가 강력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촛불항쟁과 페미니스트들의 전복의 에너지가 공존하고 있다. 역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진보할 것이라는 믿음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더 많은 편리와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과학기술혁명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한쪽에 있고, 동시에 소득불평등, 양극화, 실업대란 앞에서 적당히 우려하고 적당히 분노할 줄도 안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제도 아래 소수의 복종과 희생은 당연하다는 것도 상식이 된 지 오래다. 그렇게 소득 3만불 시대가 왔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눈앞에 열렸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소득불평등이 미국 다

음으로 극심한 나라다. 지표상으로 이미 지속가능한 사회라 하기 어렵다. 상태가 이러함에도 최저임금 1만원에 나라 전체가 망할 듯이 우려하고 반발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 뜨거운 사회의 온도를 조금 낮추면 어떨까? 그를 위해서는 첫째, 문화의 힘을 경제와 생산 영역에도 적용해야 한다. 문화는 인간이 자연을 개조하면서 형성한 정신적·물질적 총화라 한다. 경제와 생산 영역도 당연히 문화의 장에서 합의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생산과 경제의 영역에서 뜨거운 사회는 필요보다 경쟁과 생존이 더 큰 목표가 되고, 자연의 한계보다 욕망의 무한성에 의존하게 된다. 욕망을 향한 무한경쟁은 무절제한 자원의 동원과 낭비로 이어지고 결국 지속불가능이라는 반문화적 결과를 낳는다. 지속가능한 경제, 생명을 위한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인간, 인간-자연이 하나의 생명고리라는 총체성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경제와 생산이 마치 문화, 정치, 성적 지배질서와 무관한 듯 특혜를 베풀었던 시대와 단절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과제다.

둘째, 인간은 문화를 통해 개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만이 가지는 심리적·사회적 도덕성과 미덕을 길러낼 수 있다. 뜨거운 사회, 경쟁의 문화가 낳은 것 중 하나가 독단성, 아집, 자기중심성이다. 계몽된 자기이해Enlightened self-interest는 자아와 타자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은 자기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윤리적 발견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개인 이익을 달성하지만 장기적으로 자기파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기이해가 아니라 자기분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경쟁, 승패, 생산, 이윤만으로 동기화되는 것이 아니며 자기와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 타자와의 가까움proximité, 도덕적 만족감, 같이 하는 노동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안다.

앞서 언급한 레비 스트로스가 든 사례 중에 뉴기니 한 원주민 부

족의 축구 이야기가 있다. 원래 선교사가 와서 부족민에게 가르친 축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승패가 확인될 때까지 시합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족은 룰을 바꾸어 승패가 균형이 이를 때까지 축구경기를 계속했다. 경기하는 두 집단 간에 승패가 같아지고 승자와 패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경기를 마쳤다. 경쟁과 승패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협동의 즐거움과 미덕은 서늘한 성찰의 그늘을 제공한다.

셋째, 국가와 관료행정체제에 의존하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연대는 느리지만 공고하다. 국가와 관료행정체제는 다수결 위임민주주의의 결과인데 다수결 민주주의는 뜨거운 사회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현대 국민국가 수준에서 다수결 위임민주주의의 불가피성을 용인한다고 해서 이를 마치 보편적 당위인 것처럼 여기고 모든 하위 공동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책임할뿐더러 민주주의의 발전에 유해하기까지 하다. 특히 협동조합에서는 - 무임승차자free-rider를 제외하고 - 공동의 대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동조합에서 위임과 다수결에 이르기까지 상호이해와 공동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만장일치를 위한 차가운 노력은 조롱받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다수결의 꽃방석 위에 걸터앉아 국가와 관료행정체제의 효율성에 자기운명을 맡기는 어리석음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 

평화의 시대, 남북 농업협력의 길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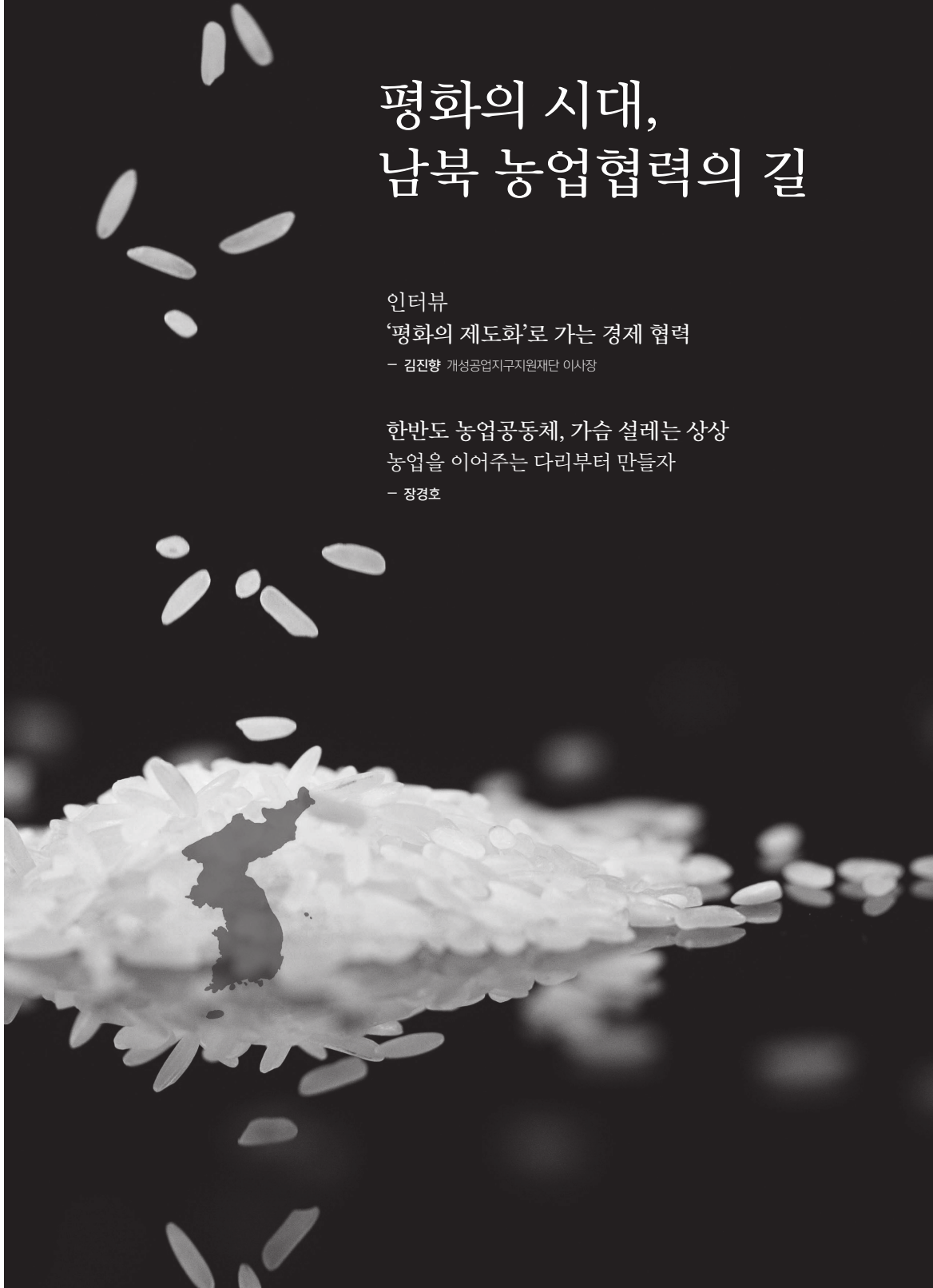
‘평화의 제도화’로 가는 경제 협력

-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한반도 농업공동체, 가슴 설레는 상상

농업을 이어주는 다리부터 만들자

- 장경호



인터뷰

‘평화의 제도화’로 가는 경제 협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진향 이사장은 북한·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로 참여정부 시절 5년간 대북정책을 수립, 집행했으며 이후 개성공단에서 4년간 대북협상을 담당했다. 그가 들려준 개성공단에서의 경험과 이후 전망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삶, 남북관계 및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 펼쳐질 다방면의 교류사업 가운데 생명·협동운동 차원에서의 참여와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진행·정리 | 임채도, 김현

최근 급변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대중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고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달라진 듯하다. 현장과 연단에서도 변화를 느끼실 것 같다.

불과 지난해에 군사적 긴장, 일촉즉발 위기까지 갔었음을 떠올리면 1월 1일 북측의 신년사로부터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가는 모습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게 당연하다. 관심도 자연히 높아지고 있다. 북에 대해 덧씌워져 있던 이미지를 한 커풀 벗겨내면서 실체를 보려는 노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분단체제가 가리고 있는 북측의 실제적 모습과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 북한 체제와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70년 분단체제가 공짜가 아니듯이 여전히 언론 보도와 토론 내용들이 냉전적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현상과 분석의 간극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알려주는 채널이 기존 언론매체뿐 아니라 인터넷방송 등을 비롯해 보다 다양해진 것 같다. 대중들의 관심과 호기심이 말씀하신 대로 실체를 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가 하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다. 개성공단에 오랫동안 관여해온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개성공단 재개도 가시화 되고 있는데.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가 큰 틀에서 합의된 만큼 이후에 다가올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영

역으로 경제협력의 고도화가 남아 있다. 평화협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신뢰관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향후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불가역적 신뢰관계로 가져가는 데 남은 것은 경제협력일 것이다. 중국-대만 관계를 봐도 그렇다. 경제협력이 고도화될수록 평화체제를 실질적으로 묶어내는 물리적 장치로 역할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많은 기업들은 북측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 소위 돈이 된다는 걸 안다. 북측도 2011년부터 실질적 경제개혁 조치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고, 경제특구 설치와 외국인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2007년 10.4 선언에 남북 경제협력의 여러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남측의 투자를 원하고 있다. 서로의 상황이 맞물려 있는 거다.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오셨다. 공단의 정상화와 향후 확대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달라.

우리가 개성공단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퍼주기’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남북 경협 전체를 그렇게 보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개성공단은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남북이 윈윈하는 곳이다. 자본주의적 계산에 따르면 수치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퍼오는 곳이다. 시작도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어야 하는 거다. 북측의 입장도 그렇다. 우리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 왔는데 연말이면 2년 10개월이 된다.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고,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실버타임을 올 연말까지로 본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측을 경제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건 우리

만이 아니다. 중국, 싱가포르, 미국까지, 다들 북측을 무풍지대로 여기고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본다. 싱가포르 경우 SOC 인프라 투자, 원산국제관광특구 등 약 22조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중국은 최근에 국가가 나서서 북측에 들어갈 것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가 지난 40년간 경제개혁을 해왔기 때문에 북측의 변화를 잘 알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경제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 해변가에 콘도 건물이 들어서는 게 현실이 될 거라고 말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가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기 때문에 우대조건을 받을 거라는 낙관도 있지만, 시기가 중요하다. SOC를 비롯해 상호 관심사와 필요 속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유엔이나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우리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상당수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아니라 이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닫은 것이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제재가 있었는데, 그것을 준수하면서도 공단을 열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량 현금 문제의 경우, 엄격하게 따져서 2013년 조항이지만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을 현물로 대신 주는 방법이 있다. 1년 총 임금인 800억 원어치의 경공업 제품이나 SOC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은 임금과 교환되는 개념이지만 북측 사람들은 최근까지도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다는 인식이 없다. 국가가 나에게 맡긴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는 나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그 임금을 다른 식으로 지급하고 북측이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하면 된다. 다른 사



항들도 엄밀히 따진다면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최초 목적은 평화의 제도화이고 그를 위해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평화가 51, 경제가 49이다. 단 한 개 기업이 운영된다고 해도 평화의 제도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 번영은 자연히 뒤따르는 것이다.

현재 100만 평 규모인데 최초 합의에 비해 현저히 작은 규모다. 정상화 이후에 애초 계획대로 갈 수 있다고 보는가?

최초 합의했던 규모는 공단 8백만 평, 배후도시 1천2백만 평으로, 남측으로 치면 창원공단과 창원시를 합한 규모다. 2003년에 첫삽을 뜨고 약 10년 정도를 예상했는데, 중간에 동결되고 신규 투자가 막히면서 1단계 100만 평에서도 공장이 들어선 부지는 38%밖에 안 된다. 분양은 다 됐지만 못 들어오고, 나머지는 버려진 땅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2천만 평 전체를 계획했을 때는 최소 3천~5천 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5백억에서 1천억 달러 규모다. 다시 재개될 경우 기존 125개 제조업 기업 대부분이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입주기업들도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규 업체들의 문의도 하루 3~40통 정도 온다. 주로 기존 개성공단 기업의 협력 업체들이라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



2단계인 250만 평은 이미 구획이 되어있다. 남북의 기존 합의를 철저히 실천한다는 게 판문점 선언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해주 경제특구를 비롯해 다른 경제특구 개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시간 문제라고 본다. 11년간 못 지킨 합의를 늦게나마 실천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금 북측에서 원하는 것은 단순 개성공단의 재개가 아니라 경제협력의 고도화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개성공단은 사실 국제공단이다. 남북 경제협상 상징인 1호 특구이지 만 개성공업지구법을 보면 해외 자본도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현재는 100% 원부자재가 들어가서 100% 완제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측의 원부자재를 써서 남쪽으로 들여올 수도 있고 우리 원부자재로 북측에서 만들어서 북측에 내다 팔 수도 있다. 현금 거래가 아닌 자원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모든 게 자유롭게 가능한 곳이다. 개성공단을 거점으로, 공단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북측의 기업소에 계약관계를 맺어서 재하청을 줄 수도 있다, 사실 초기에는 그걸 했다, 실질적 경제협력의 산실로서 무엇이든 다 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 하지 말라는 제약이 아니라.

두 번째는 단순 봉제 임가공 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산업도 들어오라는 거다. 북측 입장에서는 남측 시장경제 시스템과

공단 운영 노하우 등을 배워야 하는데 현재는 기술력이 담보되는 업종이 없고 단순 조립, 봉제만 있다. 그 외에 민수 산업의 기술적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첨단산업도 들어왔으면 하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 20-30년 전부터 못 하는 한계기업, 단순 노동집약적 사업들만 들어갔다. 저임금만 보고 간 거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남북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체를 경협의 고도화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현재는 미국의 경제 봉쇄로 인해 첨단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이 들어가기 힘든 여건이다. 북측의 실질적인 경제개혁, 개방을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다.

이제 사람 이야기로 넘어가보자. <개성공단 사람들>에 실린 개성공단 남측 주재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남북의 문화, 인식 차이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을 ‘작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공간’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 전반적으로 남측 주재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북측의 변화로는 경제적 개선, 물질적 욕구와 외형적 변화 등이 주로 이야기되는데, 개인적으로 함께 일한 북측 사람들의 태도나 가치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궁금하다.

일단 보편적으로 착하다. 공동체윤리와 도덕의식이 높다. 흔히 집단주의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고 그들은 고도의 공동체사회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를 따로 보려고 하는 반면에, 그들은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고 그 개인은 공동체를 위해 굉장한 헌신성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는 그 사회 속에서의 윤리, 도덕이고 가치 규범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도무지 발현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우리 사회

가 급속한 근대화 과정, 천민자본주의 속에서 개인화, 파편화되다 보니 많이 잃어버렸던 공동체성을 그들은 여전히 갖고 있는데, 그게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다.

물질과 정신을 대하는 태도에도 차이가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상황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게 당연시된다. 사람의 노동도 임금과 가치로 교환되는 돈이다. 시간도 돈이다. 투입 대비 산출, 생산성 개념 등 철저한 자본적·물질적 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규범인 반면 북측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돈이 목적이 아니다. 일례로, 당신들이 진짜 열심히 하면 내가 월급을 더 주겠다라는 제안이 그들에게는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은 북측에서도 경제개혁 조치 속에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개성공단 초기에 그런 접근은 백전백패였다. 내가 임금을 주는 사장이다, 하는 식의 태도는 엄청난 실수다. 그들에게는 ‘사장 선생’이나 자신이나 이 기업을 위해 똑같이 일하는 존재다. 사회적 일, 사회적 임무를 공식적으로 내 개인이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차이들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와 다툼이 생기는데, 한 1년 지나면 서로를 배운다. 그들이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남측 사람들은 모든 게 돈이죠?” 생산성 따지고, 납기에 맞춰야 하고, 모든 성과는 1년 매출액으로 얘기되니까. 그런데 북측은 노동 자체가 목적이다. 노동 강도와 정량 자체도 굉장히 약하다. 처음에 일 시키면 우리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두 명이 한다. 남측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고 그들은 진짜 다들 한결같이 미친 듯이 일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일하냐고 한다. 우린 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놀라워한다. 이런 게 일적인 다름이다.

정서적인 다름도 있다. 한 부서에서 같이 앉아서 일하는데 그들은 자기 일이 끝나면 반드시 나에게 와서 “부장 선생님, 내 일이 끝났습

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는다. 왜 도와주려고 할까? 그들에겐 개념상 내 일과 네 일이 없다. 공동체의 일이고, 전체의 일이다. 우리는 도와준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쉬라고 하는데, 그럼 그들은 의아해하거나 서운해하기도 한다. 우리는 누가 날 도와주면 내가 무언가 도와야 할 것 같은 ‘기브애편테이크’ 문화가 있지만 그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브애편테이크를 아주 계산적인 행위로 보고 별로 안 좋아한다.

서비스 개념도 마찬가지다. 해프닝을 소개하자면,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다. 옷 찾으러 와서 계산할 때 거스름돈이 없으면 옆에 편의점이 있으니 환전해오면 되는데 직접 가서 바꿔오라고 하는 거다. 그들의 문화와 인식을 잘 모르면 ‘날 무시하냐’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고객이 왕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그게 없고 서비스라는 개념 자체도 다르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상하고 다툼도 생기는데, 차츰 서로 알아간다.

또한 철저히 원칙적으로, 1+1은 2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다. 가령 ‘융통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를 확실히 하라는 식이다. 전반적으로 계획이라는 틀에서 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개성공단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초코파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는 간접인건비로, 노동보호물자의 개념에 들어간다. 우리 기업들이 주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초코파이 두 개를 주고, 저녁에 두 시간 연장근무를 할 경우 초코파이 두 개를

준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물자였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북측 근로자들은 남측에서의 기준만큼 일을 못 따라온다. 남측에서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다들 하루에 이만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못 한다고 한다. 그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타임으로 일해 본 적이 없다. 평균주의 같은 게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낮다.

우선은 ‘잘 먹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게 주다 보니 초코파이가 개성공단의 상징 같은 게 되었다. 많을 땐 한 달에 6백만 개가 들어갔다. 소위 ‘초코파이제’라는 게 있어서 모아서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상자 단위로 환금성이 있으니까, 장마당에도 팔고 물물교환도 한다. 먹는 방법도 다양하다. 따뜻한 물에 타서 먹거나, 커피를 뭉개 타서 같이 먹기도 한다. 친해지면 우리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브랜드별로 종류도 다양한데, 처음에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것으로 주다가 한 회사에서 조금 차별성을 주려고 다른 제품을 쫓더니 머지않아 다 바뀌었다. 맛은 바로 알지 않나.(웃음) 맛뿐 아니라 차별에도 민감하다. 처음엔 일의 대가로서 무엇을 받는 것 자체를 민망해했는데 나중에는 노동보호물자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그들도 변화해 가는 거다.

자연스럽게 서로 변화가 생겨갈 텐데, 그럼에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예컨대 노동에 대한 관점 등 근본적인 규범은 변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북측의 현재 변화들을 크게 보면, 우선 국가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근간에 시장화를 접목시키고 있다. 일정

부분 자율성을 주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국가가 설정해둔 계획 생산량을 다 달성하면 나머지 잔여 시간에 대해서는 기업별, 개인별로 알아서 하라는 거다. 어떤 기업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기업 성원들끼리 나눌 수 있고, 개인은 퇴근하고 난 자투리 시간에 자기 노동을 팔 수 있다. 사람의 노동을 판다는 개념이 생겨나고 있다. 2013년 이후 변화들이다.

생산성도 따지기 시작했다. 초기만 해도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왜 굳이 그래야 하는가, 그냥 한 달에 몇 개를 만들어야 하는지만 얘기해 달라고 했다. 하다 보면 더 늘 수도 있지 않나고 하면 못 한다고, 정해주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쉬든지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효율성, 생산성 개념을 배우면서 물질적 인센티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경쟁도 붙이게 됐다. 가령 처음에는 500명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100명씩 반을 나눠서 경쟁을 시키면 진짜 싫어했다. 생산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면 전체를 다 같이 줘야지 왜 이쪽만 주느냐고, 기본 체제를 흔드는 거라고 보고 거부감이 있었다. 4-5년 지났을 때는 분반별로 많이 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똑같이 나눠 가기도 하고.

이런 변화들을 포함해서 북측의 전체적인 경제개혁 조치들이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다. 무조건적인 시장화는 아니고 시장화를 제한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 민중간 삶과 생명을 나누는 상징으로서 한살림에서는 통일농업, 통일밥상에 관심을 가지고 작게나마 조합원,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경제협력 국면에서 농업, 먹거리 분야에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일반 기업, 자본이 아닌 협동조합의 참여가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북측 경제의 변화 속에서 가령 사회적경제를 남북 경험 속에 녹여낼 수 있다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북측도 나름대로 시장화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자본의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여러 대안적인 실험을 하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품공장을 협동조합운동의 가치와 방식으로 운영한다거나, 북측의 파트너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로서 협동조합이 북측과 결합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북측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 이해시킨다면 노동의 동기 부여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가령 어느 지역의 협동농장과 MOU를 맺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대해 철저히 품질관리를 하고 해당 원부자재로 개성에서 가공해서 남쪽으로 가져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남측의 경공업 제품으로 교환한다든지, 꼭 돈이 거래되지 않아도 된다.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니라 협의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게 가능해진다.

북측에서도 돈이 결부되면서 점차 제도화가 엄격해지고 있지만 기존 사회법제도를 보면 굉장히 느슨하고 법제화의 수준이 미약하다. 우리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되어 있는 반면 북측은 큰 범주에서 이것 이것 빼고 다 하라는 식이다. 만나서 취지를 전달하고 협의하면서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상상력을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농업교류의 경우 여타 제조업 등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그전까지는 비료, 비닐하우스, 농자재 등 부족 물자를 공급하는 중심이었다면 북한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농업이 상당 부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

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우선은 북한 농업의 현실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화학비료를 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는 남측의 유기농업 단체가 친환경농업의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는 일 등도 필요할 것 같다.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루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쪽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농림 분야는 북측의 경제개발 전략과 물류,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개성과 해주 쪽이 좋을 것이다. 내륙 쪽은 전투에 대비해 도로를 거의 발달시키지 않았다. 앞으로 SOC를 하겠지만 초기 지점은 해안가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일대에서 먼저 소규모로 시작해서 키울 수 있다. 개성시 인민위원회를 통해 그 지역의 협동농장과 협의한다거나, 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포괄적 농업 협력으로 시작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남측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무소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명, 환경, 생태를 키워드로 DMZ 쪽에도 참여하면 좋겠다. 통일 경제특구와 연결시킨다고 하는데 단순히 관광만 할 게 아니라 평야 지대에서 친환경 영농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통일부나 정부는 이십수 년 전 만들었던 남북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여전히 정부가 장악해서 통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나.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알아서 다 할 수 있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로, 양성화될 수 있도록 풀어놓는 게 맞다고 본다. 교류협력법 개정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북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한 교류가 시작된다면 경제적·문화적으로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북한에 대한 이해, 무지의 탈피, 상호 인정을 주로 강조하고 계신다.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데 대한 염원이 크지만, 통일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견해에도 변화가 있고 다양해지는 것 같다. 가령 평화를 원하지만 그게 꼭 통일이여야 하는가라는 물음도 있다.

우선은 통일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잘 모르는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노태우정부에서 발표해서 29년간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 지위에서 내려와본 적이 없다. 1단계가 화해협력의 단계로, 남과 북이 상호 존중하고 체제를 인정하면서 사회문화 교류, 경제협력 심화,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종전 선언,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 완성체가 분단체제에 상응하는 평화체제로, 전쟁의 위기가 완벽하게 사라진 상황이다. 2단계가 남북 연합인데, 양 정부가 기존의 모든 권한들을 그대로 가지면서 상위에 남북 정상회의, 각료회의, 평의회 등 세 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통일 문제를 전담시키는 거다. 각각 단계마다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그 이후에 완전한 통일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이제는 하나로 합쳐도 되겠다, 휴전선을 허물고 체제와 제도를 하나로 만들 수 있겠다고 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 과정은 곧 오랜 평화의 과정이다. 하루아침에 도둑처럼 새벽처럼 찾아온다는 그런 통일은 없다. 흡수통일 내지는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관념 속에 있는데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통일을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이미 판문점 선언을 거치며 그러한 평화의 시대에 진입했다. 평화가

통일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평화가 더욱 더 고도화되는 과정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건,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서 비롯하는 생활 양식이나 가치 규범이나 사고방식, 역사인식 등 여러 많은 다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호존중이다. 다문화를 다양성의 관점에서 상식적 규범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 다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이분법적 흑백논리로 보지 않으려는 상식적 마음이면 충분히 이미 평화이고 그 마음으로 통일까지 간다고 본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통해 이미 이러한 통일 방안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잘 모른다. 통일교육을 안 하기 때문이다. 분단체제는 동질성 교육을 하지 않고 이질성 교육, 분단체제 심화 교육을 한다.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고 토대인데,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평화의 오랜 과정으로 존재하는 통일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한반도 농업공동체, 가슴 설레는 상상

농업을 이어주는 다리부터 만들자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겸임교수.

「남북 농업협력의 목표와 단계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통일농수산사업단 정책실장으로 있으며 금강산지역 공동영농사업(2004~2008) 및 개성지역 공동영농사업(2007~2008)을 담당한 바 있다.

jkh1223@chol.com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다

가히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다. 작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에 이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및 싱가포르선언으로 바야흐로 한반도에 서서히 평화가 깃들고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미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유엔, EU유럽연합 등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으며, 교황까지 나서서 한반도 평화를 축원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의 상징과도 같았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미국도 북한을 상대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등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를 위한 단계별 동시행동조치도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난 70년간 서로 적대관계에 있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상호 신뢰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빠른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판문점 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 진전의 ‘속도’를 강조했기에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은 농업협력을 포함하여 남북경협 의 재개에도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시민사회 그리고 농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의 교류협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지난 4월 21일 북한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고, 향후에는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와 인민생활 분야에 집중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농업협력을 비롯하여 남북경협이 단순히 예전 햇볕 정책 당시의 수준으로 복원되는 것을 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경협과 농업협력의 속도와 범위가 훨씬 더 파격적으로 규모 있게 진행될 가능성 또

한 매우 높아졌다는 관측도 있다. 아직 남북농업협력의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의 진전은 필연적으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본격 추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을 지향하면서 정치군사적 분야는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라는 부분을 통해 농업협력을 포함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도 명시함으로써 향후 남북농업협력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남북농업협력 시대를 대비하여 농민들이 꿈꾸었던 통일농업, 한반도 농업공동체에 대해 보다 대담하고 진전된 구상을 담은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남북농업협력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남북농업협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남북 농업협력의 큰 그림을 구상하는 것은 파격적이고 대담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적이고 무원칙한 구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큰 그림을 구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접근방법 또한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 농업협력의 실현가능한 접근방법에는 무엇보다 남북 농업협력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특

수성에 의해 규정되는 농업협력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유행했던 ‘통일대박’ 주장과 같이 한때의 환상과 몽상으로 그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6.15공동선언(2000년)과 10.4선언(2007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에도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호 공존하는 경우를 선택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하위개념으로 진행되는 남북 농업협력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기본원칙을 벗어나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의해 규정되는 농업협력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상호 체제의 인정과 존중 원칙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상대방 체제의 인정,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 상대방 내정에 대한 불간섭 등이 합의사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흡수통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합의이며, 남북의 양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상호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겠다는 합의이다. 6.15공동선언(2000년)과 10.4선언(2007년)은 이러한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다. 이 합의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보수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는 ‘흡수통일’은 남북의 합의를 위반하는 주장이고, 또한 합의를 파기 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상대방 체제의 인정과 존중 및 공존에 관한 합의는 국 가간 통합이론 가운데 통합의 형태로서 단일한amalgamated 체제보 다는 복합적인(다원적인)pluralistic 체제를 적용한 사례로,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합(다원) 체제의 경우 남북이 각각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강요나 유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본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남북농업협력에 적용할 경우, 중요한 것은 농업협력을 통해 상대방 체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체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농업협력에 접근해야 실현가능하다는 점이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남북 농업협력의 첫 번째 특징이다.

둘째, 단계적 발전전략 접근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완전한 통합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평화공존단계 → 낮은 수준의 연방제 → 높은 수준의 연방제 등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은 남북연합단계와 낮은 수준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예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남북관계는 화해협력단계 혹은 평화공존단계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예상되는 남북관계의 ‘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화해협력단계 혹은 평화공존단계의 재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연합제 혹은 낮은 연방제’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 합의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국내에서 거론되어 왔던 ‘통일비용’ 논의는 대부분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흡수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남북관계의 단계적 발전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의 ‘경제적 편익 및 비용’ 논의는 사실상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남북 모두 단계적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간 통합이론 가운데 통합의 과정으로서 기능주의적 접근functionalism보다는 연방주의적 접근federalism을 선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는 정부당국간 합의를 통해 마련되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당국간 합의 및 제도화가 남북관계를 점차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단계적 발전이라는 특징을 농업협력에 적용할 경우, 남북 농업협력도 남북관계의 발전단계에 조응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예상되는 화해협력단계 혹은 평화공존단계의 재개에서 실현가능한 남북 농업협력에 관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과 아울러 그 이후의 남북연합단계 혹은 낮은 연방제 단계에서의 농업협력으로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나가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 농업협력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관계의 완전한 통합에 조응하는 경제공동체 및 농업공동체 실현이 경제협력과 농업협력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남북관계의 단계별 발전에 조응하여 농업공동체 실현을 위한 농업협력의 단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현 시기 농업협력에 대한 구상은 화해협력단계 혹은 평화공존단계에서 정부당국간 비상설 협의기구가 중요하게 협의할 수 있는 농업협력 과제뿐만 아니라 남북연합단계 혹은 낮은 연방제 단계에서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가 협의·시행할 수 있는 농업협력으로의 진전을 염두에 두고 함께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남북 농업협력의 두 번째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하여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의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갖는다.

셋째, 기능적 협력으로서의 상대적 자율성 발휘

일반적으로 남북 농업협력은 “농민·농업·농촌과 연관하여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협력은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하위개념에 해당한다. 농업협력은 기능적 협력의 일환으로서 정치군사적 분야에 비해 상대적 자율성을 갖지만 그 자율성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에 따라 단계별 농업협력의 목표와 방향, 내용과 규모, 속도와 범위 등이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예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화해협력단계 혹은 평화공존단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남북 농업협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의 적대적 남북관계로 회귀하면서 완전히 중단되었던 현실로부터, 기능적 협력으로서 농업협력이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직접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협력이 갖고 있는 장점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경제교류협력의 한 분야로서 기능적 협력에 해당하는 농업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여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농업협력의 진전 과정이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 수준에 의해 규정을 받게 되지만, 특정 시기에는 농업협력이라는 기능적 협력의 확대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06년 10월에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시기에 대북 쌀 차관 및 이산가족 상봉 등과 같은 기능적 협력을 통해 2007년 2.13 합의로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10.4선언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던 사례도 있다.

이처럼 기능적 협력으로서 농업협력이 갖는 상대적 자율성을 발휘함으로써 일시적인 남북관계의 긴장 및 경색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윤활유 혹은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남북 농업협력의 세 번째 특징이다.

농업협력, 한반도 공동체를 향한 다리를 놓아야

이상과 같은 농업협력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남북농업협력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상해 볼 수 있을까? 아마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기초로 수많은 농업협력 방안과 과제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지난 70년간 분단된 상태로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남과 북의 농업이 미래에 농업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몇 가지 구상을 소개한다. 농업협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에 농업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생각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남북 식량교역으로 쌀을 나누자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은 쌀을 중심으로 한 남북 식량 교역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이기도 하다.

연간 약 40만 톤에 달하는 쌀의 의무수입물량TRQ을 고려할 때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쌀의 수급안정을 이루는 것은 농업 분야의 핵심 과제이다. 쌀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은 변동 직접지불제도와 같은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큰 손실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쌀 재배면적의 일부가 타작물 재배로 전환되어 전반적으로 밭작물의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 재배면적의 안정화를 통한 수급안정은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전체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의 안정에도 관건이 되는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쌀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식량교역은 훌륭한 대안이다. 쌀 공급과잉 해소 및 수급 안정, 정부의 재고관리 부담 및 변동직불금 지출 부담 대폭 감소,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남북 식량교역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듯이 국내 쌀을 북으로 보내고 북한

의 다른 농산물이나 식품 혹은 광물자원을 받는 방식이다. 교역 품목과 물량 그리고 가격을 당국 간 협상으로 정하고, 민족 내부 교역으로서 국영무역 방식을 준용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량 교역은 북한의 필요성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FAO/WFP 등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대략 503~517만 톤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91~94% 정도의 식량자급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보다 식량 사정이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지난 2016년 국가경제발전전략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식량 자급 실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북한의 농업정책은 곡물 위주의 식량 생산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축산, 과수, 채소, 특작 등 다양한 농업생산을 강조하는 질적인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 같은 긴급구호 혹은 인도적 지원으로서 식량 지원 방식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크게 낮춘다.

하지만 전반적인 식량 사정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1식량(주식)인 쌀의 생산·공급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편이다. 논 면적이 약 56만 ha 정도로 쌀 자급에 필요한 재배면적을 더 늘리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쌀과 교역을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도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 쌀, 콩, 옥수수 등을 수입하기보다는 우리의 쌀과 자신들의 농산물, 식품, 지하자원 등을 거래하는 호혜성 남북교역은 지난 2007년 합의한 10.4선언의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남북의 식량 교역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식량 교역의 규모를 확대하고, 교역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남북 민족의 식량 주권을 위한 공동협력으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이라는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어 미래 한반도 농업공동체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농업협력지구에서 농사도 함께 지어보자

남북이 함께 농사짓는 공동영농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이 금강산 및 개성 지역에서 했던 남북공동영농사업,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기도가 평양 인근 당곡리협동농장에서 했던 농업협력사업,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경남도가 평양 인근 장교리협동농장에서 했던 농업협력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직접적인 식량 지원보다는 북한의 자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영농기반 강화, 농업기술 개선, 농장소득 증대 등과 같은 농업개발협력 차원에서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벼농사, 밭작물, 과수, 시설원예, 축산 등 다양한 분야별 교류협력이 진행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해당 사업들이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과 지식은 남북 양측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히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협력했던 분야별 전문 인력도 양측에 모두 있다. 그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력을 다시 활용하면 농업개발협력을 재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성과 금강산 그리고 평양은 남북관계의 조건 아래 가장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다. 개성공단 재개와 연계하고, 예전 개성 지역 공동영농사업의 경험을 되살리면 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계하고, 예전 금강산 지역 공동영농사업의 경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지역을 (가칭)남북농업협력지구로 지정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에 준하는 수준의 통행, 통신, 통관을 정부 당국이 합의한다

면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욱 큰 규모로 남북 공동 농업개발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평양 인근 지역에서의 농업개발협력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와 같은 농업개발협력은 다른 분야의 경제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개성 지역 농업개발협력의 성과로 농업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이 지역에서 유희 농업노동력이 발생하는데, 이 유희노동력이 경제협력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농업개발협력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개성공단 내 식당의 식재료로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협력과 농업협력의 상호보완적 선순환 관계는 금강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개성 지역 농업개발협력의 성과를 개성-해주-사리원을 잇는 서부권 농업협력 벨트로, 금강산 지역의 성과를 금강산-세포-원산을 잇는 동부권 농업협력의 벨트로 확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농업협력이 서로 연계하여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남북 정부 당국이 공동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한반도의 작부체계를 재구성할 수도 있고, 한반도의 농산물생산 지도를 다시금 그릴 수도 있다. 식량을 비롯하여 농업생산에서 남북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민족 내부 간 거래를 통해 교역함으로써 상호보완적 농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보완성을 지속해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곧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농업생산에서의 역할분담뿐만 아니라 후방산업인 영농자재 산업의 공동투자협력, 전방산업인 유통 및 가공 분야에서 상호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 경작지로 밥상과 마음을 잇자

우리가 지금 그려볼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은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통일 경작지를 매개로 남북 동포의 마음을 밥상에 이어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남북 농업교류협력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 이전까지 활발하게 이어져 오던 농민교류와 농업협력이 2009년부터 모두 중단된 상태로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추운 겨울을 지내왔다. 하지만 교류가 중단된 10년 동안에도 농민들은 그냥 두 손 놓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민사회와 십시일반으로 전국 곳곳에 통일 쌀 경작지를 조성하여 따뜻한 봄날 평화와 통일의 나비가 되어 다시 힘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약 47개 지역에 조성된 통일 쌀 경작지에서 농민과 시민이 함께 모내기도 하고 벼베기도 하면서 남북이 다시 교류하는 날을 준비해 온 것이다.

이러한 통일 쌀 경작지를 민간이 주도하는 밥상 나눔으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남북 식량교역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정책적 과제라고 한다면, 통일 쌀 경작지를 통한 밥상 나눔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농민과 시민 등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으로서 남북이 서로의 쌀과 농산물을 나누어 밥상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통일 쌀 경작지에서 수확한 쌀을 북한으로 보내고,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을 상상해보자. 전국 곳곳에 조성된 통일 쌀 경작지 주변의 시민, 학생, 어린이 등이 함께 모내기도 하고, 벼를 같이 베기도 하며, 메뚜기와 잠자리

를 잡는 것과 같이 통일 쌀 경작지를 매개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참여와 체험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디딤돌을 놓는 데 기여하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보내온 농산물이나 특산물로 농민과 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이웃들이 함께 밥상을 차려 나눈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비록 남북의 모든 동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통일 쌀 경작지를 매개로 밥상을 잇고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통일 경작지를 매개로 한 남북의 밥상 나눔은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는 민간 통일운동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생각과 실천이 국민의 일상과 의식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는 순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식량교역과 민간 차원의 통일 쌀 교류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민족 공동의 식량주권과 밥상공동체를 향한 역사적인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농업은 한반도 농업공동체를 이루는 것

남북의 식량교역을 (가칭)남북공동식량계획으로 이어가는 것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농업을 이어주는 커다란 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하여 농업협력 벨트를 확대하는 것도 또 다른 다리를 만들어 서로의 농업을 이어주는 것과 같다. 또한 전국 곳곳에 통일 경작지를 조성하여 남북의 동포가 먹거리를 매개로 하여 서로의 마음을 밥상으로 이어주는 것도 분단을 극복하

고 공동체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농업을 이어주는 다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농업협력이다. 나아가 농업 분야에서 서로 이어진 다리를 통해 남과 북이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호보완적인 연계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수록 양측 농업의 보완적인 관계가 확대된다.

이와 같이 남과 북의 농업 사이에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확대될수록 남북을 아우르는 한반도 농업공동체도 점점 더 그 모습이 뚜렷해질 것이다. 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의 식량주권, 새로운 농업지도와 작부체계, 농업생산과 영농자재 및 유통·가공 분야의 역할분담과 내부교역이 확대될수록 상호보완적 농업구조가 뿌리를 내리면서 농업공동체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통일 농업이 아닐까. 

사진으로 보는 한살림 통일농업의 꿈

정리 | 편집부

2005년 5월 26~28일, 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주관한 ‘삼일포협동 조합 통일 모내기 행사’에 한살림 대표단을 비롯하여 농민·농업 단체·기관의 관계자, 대학생 등 110여 명이 참여했다. 이후 한살림에서는 조직 차원에서 본격적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학습을 시작했다.



삼일포협동조합 통일 모내기 행사 2005. 5. 27



한살림 통일농업 세미나 2005. 10. 6

10월 6일~8일 한살림 통일농업 연수.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통일 농업 세미나에서는 ‘삼일포협동농장 영농협력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통일농수산물사업단 이병호 사무총장의 주제강연에 이어 한살림에서 통일농업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인지와 그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통일농수산물사업단 주관 ‘삼일포 통일 벼베기 행사’에 참가했다.



삼일포협동조합 통일 벼베기 행사 2005. 10. 7

뒤이어 11월에는 ‘한살림 통일농업 정책간담회’를 열고 통일농업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함께 남북 농업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으나, 이후 진전된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그 뒤로도 통일밥상의 의미에 공감하는 생산자, 조합원들의 마음이 모여 대북 통일쌀 보내기,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 등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한살림 통일농업 정책 간담회 2005. 11. 22



우리생명쌀지킴이 기금 통일쌀 전달 2006. 5. 19



한살림 DMZ평화농장 손모내기 행사 2016. 5. 21

2014년 8월에는 한살림DMZ평화농장을 창립, DMZ 지역에 한살림 생산농지를 조성했다. 친환경 생산기반을 넓히고 임진강의 생태를 보존하는 의미에 더해, 조합원들과의 도농교류 활동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더 가깝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판문점 선언’과 촛불 시민 혁명 ‘한반도식 통일’의 길을 생각하다

|| 일본 <아젠다 프로젝트>에서 발간하는 사회문제를 생각하는 계간지 『아젠다 AGENDA - 미래를 위한 과제』 제 61호(2018년 여름)의 글을 번역 게재합니다. 해외의 시선에서, 남북관계와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그리고 평화 구축의 전망을 촛불 시민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하는 글입니다. - 편집자 주

아오야기 준이치

번역가이자 시민운동가.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부산대학교에서 일본관련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일본 센다이의 <코리아문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편저로는 『피폭자 차별을 넘어 살아간다 - 한국 원폭피해자 2세 김형률』이 있고, 역서로 『한국민주화2.0』,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이 있다.

번역 | 권웅

한살림연합 연대협력팀. 한국과 일본, 한국어와 일본어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

smoky.kwon@gmail.com

들어가며

2018년 4월 27일, 드디어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그날이 왔다. 당일 모습은 전 세계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고 한국 국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지켜봤다고 한다. 나도 얼마 전 한국에 있던 4일 동안 거리 온갖 곳에서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를 보았는데, 한국에서 재회했던 친구들의 밝은 표정과 귀국 후 일본의 미지근한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와 비슷하게 한국에 다녀온 재일 유학생도 흥분으로 들뜬 한국인과 지금도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일본인의 모습이 대조적이었다고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상과 평가 호감도는 15% 미만에서 65% 전후로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반면 일본에서는 10% 정도의 변화뿐이었다. 어찌 되었든 한일 양국 사회의 이 차이를 의식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 위에 있는 “한반도식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의의

4월 27일 당일,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떠오른다. 먼저 판문점에 있는 남북경계선 상에서의 악수로 시작하여, 두 정상은 손을 잡고 경계선을 오가면서 미소를 띠고 답소한다. 이어서 회담 장소인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새로운 역사는 지금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적었다. 오전 중에 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 각각 점심을 먹고, 오후에 기념식수를 마친

후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다리 위 벤치에서 정상 둘만의 대화를 나눈 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고 전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어서 두 정상의 부인과 여동생인 김여정 씨도 함께한 만찬회에서도 여러 생각과 논의가 오갔고, 시종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의 인기 가요를 들으면서 회담의 성공을 서로 축하했다. 회식 후 ‘평화의 집’ 자체를 대형 스크린으로 삼아 당일 영상을 두 정상이 확인하고, 김 위원장 일행은 이별을 아쉬워하며 귀로 향했다. 첫 악수로부터 딱 12시간이 지난 오후 9시 반쯤이었다.

먼저 ‘판문점 선언’의 요지를 정리해보자. 서두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다. 그리고 남북은 제1항에서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고, 제2항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제3항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제1항에서 ①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기존 남북 선언과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②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며, ③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고, ④각계각층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며, ⑤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의 재회 등을 협의하고, ⑥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2항에서는 ①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②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고, ③국방부장관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한다. 제3항에서는 ①불가침 합의를 준수하고 ②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여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고 ③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3자(남·북·미) 또는 4자(+중)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며 ④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함을 공동의 목표로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의와 직접 통화를 통해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 진지하게 논의하여 신뢰를 굳건히 하고, 올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

앞서 회담의 준비회의에서는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3월 21일)이 눈을 끈다. 여기에는 오랜 기간에 걸친 평화공존을 염두에 둔 유연하면서도 완만한 통일 방식의 구상이 담겨 있으며, 이 “한반도식 통일” 구상을 제창한 백낙청은 그 특징으로서 ‘점진적, 단계적, 시민참가형’이라는 세 가지를 들었다.¹⁾

이 제3회 남북정상회담은 앞선 두 번(2000년 6월과 2007년 10월)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특색을 갖는가. 가장 큰 차이로서 당시 김대중 정권은 3년차, 노무현 정권은 5년차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시기적으로 정권 후반이나 말기였다기보다는 정권 기반 자체가 약체화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 첫 해, 앞선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이끈 촛불혁명에서 1년 반의 시점으로, 정권 기반이 강력하기 때문에 향후 몇 차례 더 왕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남북 양 정상의 관계가 긴밀할뿐더러 국제 환경도 남북 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양 정상은 노벨 평화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

1) 『한국 민주화 2.0』, 이와나미서점, 2012년, 203~209쪽. (『2013년체제 만들기』(백낙청, 참비, 2012)의 역사)

이며, 유엔과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평가도 지극히 높다. 사실 작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전쟁 직전의 위기를 감지했던 국제 사회는, 이를 반전시킨 공로자로서 양 정상을 평가하고 있다. 운 좋게도 평창 올림픽이 절호의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2020년 동경, 2022년 베이징으로 연이어 동아시아 삼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점도 큰 의미다. 또한 좋은 나쁜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이단자의 등장도 ‘시대의 전환’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 어찌 되었든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미·중국을 끌어들이고 또한 국제 사회와도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로 향해 가는 환경을 정비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바탕에는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한국 사회의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촛불혁명 전야였던 2016년 가을, 박근혜 정권하의 한국 사회 상황은 오늘날 아베 정권하의 일본 사회와 매우 비슷했다. 즉 사회 전체가 반복 감정과 폐쇄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 등이 여론을 조작하는 반동적인 정치·사회현상이 횡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2014년 4월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300명 남짓한 희생자를 내면서도 진상 규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 고위 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의 배경에 선주 일가와 대통령 측근의 ‘특별한 관계’가 지적되는 한편, 이를 추궁하는 유족과 언론인이 규탄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다만 일본과 다른 것은 그럼에도 굴하지

않았던 시민들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다는 것과 2016년 총선거에서는 여야당 박빙의 정치 상황을 낳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같은 해 여름, 명문 여자 대학에서의 부정 입학 적발·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10월 24일 그 당사자의 모친이며 대통령의 ‘절친’ 최순실이 연설 원고를 검토하고 때로는 지시를 내리는 ‘배후조종자’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 영상이 한 방송사에서 방영되었다. 이를 낚인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하는 수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죄하기는 했으나 자기변명으로 시종했다. 여기에 분노한 시민 3만여 명이 주말인 29일,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을 규탄하며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을 호소했고,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시작한 촛불혁명은 다음주에는 30여만 명, 그 다음주에는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 12월 초에는 약 232만 명에 달했다. 이쯤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발의되어 가결되자 촛불집회에는 궂은 날씨와 영하의 추위에도 매번 100만 명 정도의 시민이 결집하여 국회와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했다.

이 시민의 기세에 떠밀려 여당 내에서도 분열이 발생했고 탄핵 심판을 심의하는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탄핵 불가피” 분위기가 확산되어, 3월 10일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파면이 선고되었고 3월 말에 그녀는 구속·수감되었다. 그 와중에 다음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가 고지되었고 5월 9일, 촛불혁명의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맹세한 민주파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보수·중도와의 삼파전에서 41%대 24%대 21%)로 승리하고 바로 대통령에 취임했다. 단, 이 선거 결과는 미묘한 지지 정당의 세력도를 반영하고 있어 결코 촛불시민파의 압승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게다가 국회 내의 정당 분포는 크게 진보·중도·보수가 4대 2대 4라는 비율

로, 2020년 4월의 총선거까지는 바꾸기 어려웠다. 즉 소수 여당의 문재인 정권의 한계는 명확했고 박근혜 정권기의 보수·진보 대립을 기본으로 한 정치·사회 상황 아래에서의 정권 운영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까지가 촛불시민혁명의 제1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진보·보수 대립은 무엇을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서 김대중 정권 때의 2000년 6월에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성명에 대한 찬반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의 북한과의 적대·분단(혹은 분단체제)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크게 나누어서 적대·분단 아니면 대화·공존인데, 쌍방은 단순한 흑백이 아니라 각 당 내에도 다양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길은 국제적 환경에 제약되면서도 대화·공존에 힘을 싣는 길이었다. 그는 7월 6일 ‘신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에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는 국제 사회의 일치된 요구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조건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 등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향해 매진하고 있어, 트럼프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2~5월에 아홉 번, 7~9월에는 ICBM급 네 번을 포함하는 다섯 번, 합계 15번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였고, 9월에는 최대 규모인 6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상호 비난전은 세계를 흔들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 결의라는 국제적인 포위망 및 미국의

군사적 압력이 일촉즉발의 사태를 걱정케끔 하는 데 이르렀다. 이런 시점에서 11월 말, 북한은 최대급 미사일을 발사시키고 “핵전력의 완성”을 자랑했지만 이것이 남북한의 수면 아래의 접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까지가 촛불시민혁명의 제2단계였다.

2018년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 선수단 참가”를 밝히고 한국 측에 관료급 회담의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응하고 1월 9일 남북관료 회담을 통해 올림픽 관련 공동 행사의 큰 틀이 결정되었다. 그 위에 선수단 참가에 관한 다양한 조치가 IOC의 협력을 얻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평화제전’에 부끄럼 없는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것은 지난 기고에서 밝힌 대로이다(『아젠다』 2018년 봄호, 88~91쪽).

‘판문점 선언’으로 통하는 길은 이때 이미 거의 확정되어 있었지만 폐회식 직후인 3월 초 놀랄 만한 사태가 전개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개최 승낙이다. 그 후 두 달 반, 이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의제 등을 둘러싼 조율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며,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가 확정된 이후 트럼프는 두세 번 흔들다가 ‘개최’를 선택할 것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두 번이나 직접 회담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중 공존이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중규모 현(역주: 현縣은 한국의 ‘도’와 유사한 일본의 행정단위) 수준인 경제소국을 이끄는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센스가 발휘된 2개월이었다. 또한 취임 후 약 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으로의 행로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수완도 특필할 가치가 있다. 북미정상회담 예정일의 다음날인 6월 13일 한국에서는 전국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이즈음이 촛불시민혁명의 제3단계이며 이는 현재진행중이다.

한국 시민사회 및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일본

‘판문점 선언’에서 북미정상회담 및 한국의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는 포스트 분단시대로 향하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낳은 원동력은 미중 양대국의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촛불혁명을 일으킨 한국 시민사회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인식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한반도식 통일”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참가형’이라는 점이며, 그것도 단순한 ‘분단의 해소’가 아니라 ‘분단체제의 극복’을 자각하는 시민의 참여에 의해서야말로 남북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분단체제론)의 중요성을 여기서 지적해두고 싶다.

이 ‘분단체제론’은 이른바 북한의 핵 문제가 떠오른 1992년 전후, 1960년 후반 이래의 민주화 운동을 이론적으로 지탱해 온 계간지 『창작과 비평』의 편집인인 백낙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그 요점은 남북한의 수구 세력=기득권층은 ‘적대적인 상호의존관계’를 활용함으로써 각각 자국 내에서의 자기 권익을 유지·강화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그 분단체제의 극복이란 남북의 분단·대립상황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화해하고 연합 상황으로 전환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상호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 시민의 다양한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통해 ‘남북연합국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적대적인 상호의존관계’에 바탕을 둔 남북 수구 세력의 영향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6월 중순의 북미정상회담과 한국 지방선거의 결과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선거 결과는 출범 1주년이 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신임 투표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여, 본격적인 분권적 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촛불시민혁명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진다. 현재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80%에 이르고도 하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도권 외의 서울·경기 지역과 진보·보수가 박빙인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결과에 특히 주목하고 싶다. 한국전쟁 휴전 65년, 분단시대를 통해 권세를 이룩해 온 수구 세력이 얼마만큼 남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한국 시민사회의 향후 동향을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상황에 대해서도 눈을 뗄 수 없다. 특히 최근 북한 노동당 간부의 방중과 관련하여 개혁·개방 정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미·중이 협력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향후 양국 관계도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올가을에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이산가족 재회 등의 교류 및 경제협력을 향한 기반 정비는 진행될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은 북미정상회담에 달려 있지만, 이속고 중국을 더하여 4개국 간에 조인하여 ‘남북연합국가’로의 길이 본격화될 것이다.

한편 이 흐름을 거슬러 지금도 여전히 미·일 양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견지를 주장하는 세력이 뿌리 깊지만, 중국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제재는 어렵다. 어떤 의미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유무와 관계없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시대인식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이미 공유되어 가고 있다. 만약 미·일 양국 주도로 향후에도 제재를 견지할 경우,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남북 분단체제를 고집하는 수구 세력=기득권층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베 정권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수구 세력은 태평양 전쟁 이후 한결같이 그런 역할을 계속

수행해온 것이다.

생각해보면 북한의 핵 문제가 떠오르고 난 후부터 약 25년, 일본 회의로 대표되는 일본의 수구 세력은 남북 분단체제의 존속을 전제로 하고 한국·중국과의 화해·교류보다 분단·대립을 우선시해 왔다. 그리고 작년 가을 총선거에서 아소 부총리가 “북한 덕택에 압승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처럼 아베 정권은 북한에 대한 대립적인 자세를 통해 장기 정권을 유지해왔다. 단적으로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북한 붕괴론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권력의 사유화’를 늘 해왔다.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 체질이야말로 권력자의 일족으로 자라온 아베·아소 정권의 성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에게도 들어맞겠지만, 그들의 외교 전략에 의해 동아시아는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였고 포스트 분단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한국 시민의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어에 담긴 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일본 시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아베 정권을 쓰러뜨리고 외교 정책 전환을 바라야 할 것이다. 크게는 미·일 동맹 바라기가 아니라 미국도 포함한 인근 나라들과의 균형 잡힌 선린우호관계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도쿄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처럼 ‘평화제전’으로 삼을 기회로 보고, 북한과의 국교 수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준비 작업으로서 내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3·1 독립운동에서 호소된 ‘동양평화론’에 주목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동아시아의 평화 구상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역사를 돌아보아야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게 된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 등도 뿌리를 따져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 특히 민족적 저항을 상징하는 3·1 독립운동의 역사 인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남북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3·1 독립운동을 ‘동양평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볼 때, 실제 촛불 시민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이해할 수 있다. 근대사의 영역을 일본 국내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인식해보자. 현재 진행 중인 사태는 곧 남북한의 ‘외교전’에 패배해가는 아베 외교이며, 이로서 근대 일본 150년의 역사는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살림운동과 여성주의

생협운동과 여성주의

— 박임성아

좌담

미투운동이 불러온 질문

한살림 실무자들이 말하는 살림의 조직문화

— 로시오빠 링링 석탄이 여름 좋은날

feminism

생협운동과 여성주의

박임성아

1999년부터 행복중심생협(구 여성민주회생협)에서 상근하였고 현재는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위탁운영하는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여성의 직업능력 향상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oolsok@hanmail.net

근대 협동조합의 시초인 로치데일공정선구자협동조합 원칙의 제1조는 조합의 공개, 제2원칙은 표결에 있어 1인1표주의이다. 조합의 공개라는 건 지금으로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자발적인 가입과 탈퇴의 자유’이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다. 보통의 모든 영국 여성이 참정권을 획득한 해는 1928년이다. 로치데일은 이보다 84년 앞서 여성에게 동등하게 조합원이 될 권리와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협동조합의 6대 가치인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그리고 연대의 가치는 여성주의와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가치이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원칙과 가치에서 이미 여성주의와 맞닿아 있다.

꼬마돼지 베이브와 여성주의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꼬마돼지 베이브’라는 영화를 방영했다. 예전부터 좋아하던 영화인데 그 이유는 영화에서 여성주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감성이 여리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꼬마돼지 베이브의 이야기다. 양치기 개와 함께 생활하는 베이브는 양치기가 되고 싶지만 ‘삶의 순리’라는 이유로 거부당한다. 돼지는 열심히 먹고 살을 찌워서 식품 재료가 되고 양치기는 개만 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순리다.

벨 훅스는 “페미니즘(여성주의)이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¹⁾”라고 정의한다. 성차별주의는 소위 영화에서 말하는 ‘삶의 순리’와 같다. 성^성이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사회적 관념을 만들고, 그 관념에 따라 여성은 이래야 하고 남성은 이래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삶의 순리’라고 말한다. 이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관습, 제도, 법 등에 스며들어 우리를 제어하고 가로막는다. 그래서 여성주의의 시작은 ‘성차별주의를 인식하는 것’이다.

‘왜? 개만 양치기가 될 수 있는가’, ‘왜? 돼지는 양치기가 될 수 없는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 누군가의 사고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답을 찾는다는 것은 여성이 주체성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겠지만 주체적으로 사고할 때만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하는 자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1)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경아 역, 문학동네, 2017, 25쪽.

생협운동²⁾의 주체 - 여성(주부)

창립 당시부터 ‘여성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통합’을 선언한 행복중심생협연합회는 창립선언문에 운동의 주체를 ‘주부’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살림살이가 사람을 살리는 주체적 삶이 되기를 원한다. ... 우리의 일상생활을 창조적으로 이루어가려는 주체적 삶은 매일매일 식탁에 오르는 먹거리의 질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하자. 이것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가공식품의 생산과 포장, 나아가 외래농산물의 수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거대한 경제구조와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문제로서 혼자 개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조직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생활협동조합이 필요하다. 생활자료의 질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생산하며 공급하기 위해 소비자는 생산자들과 만나며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이 생활협동조합의 활동이며, 여기서 조직된 힘은 더 나아가 일자리의 창출문제, 자녀교육문제, 생활환경문제, 지역사회문제 등 생활의 전반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³⁾

-
- 2)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서, 의료, 대학, 공동육아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본 글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환경생활용품 등을 공급하는 구매생협을 말한다.
 - 3) 이이효재, 『한국여성민우회 20년사 여성 운동 새로 쓰기』 함께가는생협 창립에 부쳐, 2008, 264쪽.

“주부들이 이를 개인의 힘으로 가정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거나,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해결해 나가기 위해 민우회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중략)

이것은 단순한 먹거리를 나누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며 나아가 물질위주의 현대문명의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인 것입니다. 이 운동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부가 가장 심각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부들이 앞장서야 합니다.”⁴⁾

또한 한살림생협에서도 “생명을 낳아 기르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치유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생활을 화폐로 평가하는 시장시스템, 평균화시키는 행정시스템에 위탁하는 것의 위험을 자각한 주부들이 먹을거리를 매개로 생활을 자치해나간다는 운동전략”이라며 주부를 생협운동의 주체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⁵⁾

4) 「함께가는생활소비자협동조합 창립선언문」, 1989.

5) 한살림, 『한살림운동과 조합원노동의 이해』, 2005, (하승우, 『모심과 살림』 0호 “협동조합은 ‘충분히’ 여성적인가?”, 2012, 재인용)

주부는 어떤 존재인가?

사회가 진보하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육아와 가사노동에 대한 주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다.⁶⁾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를 통해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운동이고, 이러한 소비의 대부분은 주부가 책임을 주로 맡고 있는 가사노동과 육아, 돌봄이라는 재생산영역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안전한 먹거리를 시작으로 생활 전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바꿔내고자 했던 생협운동에서 주부는 생활의 문제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고, 가장 직접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체이다. 한편 여성운동에서 주부는 사적 영역에만 존재하고, 개별화되어 있어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존재였다. 여성운동의 대중화를 고민하던 한국여성민우회는 주부들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주부들이 살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 살림과 연관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주부들이 해결하고, 이러한 대중적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대중운동’⁷⁾으로 생협운동을 선택하였다.

당연히 모든 생협운동과 여성운동의 주체가 ‘주부’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부를 주체로 선택한 생협운동과 여성운동은, 이 ‘주체의 동일성’으로 인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생협운동 주체의 성장이 여성의 주체성 강화, 여성의 임파워먼트로 이어지는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6) 연령대별 남녀 경제활동 비중추이를 보면 2005년과 2016년을 비교해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이 30대에서 급속히 떨어지는 M자 곡선은 나아지고 있지 않다.(오은진, 『능력주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5쪽) 또한 가사노동시간은 기혼여성(3:09), 남성(0:38)로 여성이 남성의 5배 가까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주재선, 『2017 한국의 성인자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4쪽.)

7) 박영숙, 『한국여성민우회생협 15주년 자료집』

주부는 생협운동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사적 관심을 공적인 활동으로 전환

협동조합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타인과 협동해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운동이므로 당연히 스스로의 욕구를 인식한 주체들의 운동이다. 그러나 처음 생협에 가입할 때의 욕구는 지극히 사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

생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생협에 가입하는 조합원 대다수는 여성이며, 그들의 가입 동기는 대부분 가족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한다. 처음 가입할 때부터 뭔가 거창한 운동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하고자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가입한 여성들이 생협을 이용하면서 점차 변화하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중 식재료와 뭐가 다른 걸까?'에서 시작하다가 점차 농업 문제,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 등으로 관심이 확장된다.

예를 들어 평소 식용유를 구입하며 별 생각이 없었던 여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대두유가 GMO콩으로 만드는 것이며 GMO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이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또는 재배를 더 쉽게 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전자조작을 한 것임을 알게 된다면, GMO를 만드는 회사가 다국적기업이며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존처럼 별 생각 없이 식용유를 구입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생협에 가입하기 전에는 농촌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도 누군가 해결하겠지... 하고 생각했죠. 처음엔 그저 내 건강, 식구들 건강을 생각해서 과자, 빵, 인스턴트를 안 먹고 유기농 먹거리를 먹는 데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도시 사람들이 같이 하면 농촌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례 9>

개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생협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고민하게 해요.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 원인을 알게 되죠.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면서 사고가 자꾸 넓어졌어요. <사례 2>⁸⁾

생협에 가입하는 여성들은 남들보다 식품의 안전성에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생협은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므로 생협활동을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들은 ‘식품 안전’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내가 오늘 GMO대두유가 아닌 현미유나 유기농 대두유를 사는 것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사적 행동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이자 공적 행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듯 생협운동은 사적 관심에서 시작한 여성들을 공적 영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며, 자기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대안을 선택하는 주체로 성장시킨다.

8) 박성아, 『아렌트 정치행위론과 생활정치 -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2008. 29쪽.

가사노동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

다른 의미로 이 인식의 과정은 가사노동에 대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가사노동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다. 살기 위해 음식을 만들고, 안락한 잠자리와 주거 공간을 위해 집을 쓸고 닦는 가사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노동이고, 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세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하나는 가사노동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사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다. 오랜 시간 가사노동은 여성들이 전담해야 하는 노동이었고 경제적으로 환산이 안 되는 무급노동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낮은 위치에 놓여 있다. 여성운동 영역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꾸준히 요구하고 현재는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가사노동은 ‘집에서 논다’와 동일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가사노동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가사노동은 그 자체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어렵다. 음식을 만들고 치우고 집안을 쓸고 닦아도 다음날이면 다시 같은 노동을 해야 한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듯 인간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결과물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에서는 그러한 결과물이 남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가사노동은 사회적으로 재생산이라는 중요한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와 연결되지 못한다는 고립감을 가져온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업주부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박탈감에 시달린다.

주부로 살아간다는 게 무료하고 갑갑한 일이에요. 남편하고 얘기해도 한계가 있고 옆집아줌마와의 낯두리도 무의미하고...
<사례 7>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뭐 공부를 해도 채워지지 않고, 돈이 생겨도 반갑지도 않고.. 채워지지 않는 삶이 있었는데. (중략) 집이라는 게 감옥, 창살 같잖아요. 그 외로움이... (중략) 청소를 하면 저녁에 애들이 와서 어지르고 그러면 그 자리가 흐트러져 있어. 또 열심히 청소를 하고. 한 때는 수족관을 3개월이 멀다고 갈았어요. 한번은 잉어로 갈았다가 한번은 열대어로 갈았다가 한번은 붕어로 갈았다가... <사례 4>⁹⁾

그런데 생협을 만나고 조합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가사노동이 사회를 바꾸는 대안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부심은 여성이 지역활동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9) 박성아, 『아렌트 정치행위론과 생활정치 -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활동을 중심으로』 석사논문, 2008. 45~46쪽.

지역여성활동가로의 성장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 친구, 이웃, 학부모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적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 아이들, 남편, 시부모 등 사적인 이야기들이다. 이런 사적 이야기들은 어떤 뚜렷한 주제와 결말 없이 흘러가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생협 지역모임은 생협 운영, 지역 문제, 환경 문제, 농업 문제, 여성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 그 해결책을 모임 구성원과 함께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지역모임을 통해 여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막연한 문제들을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더 적극적인 여성들은 소비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 생협 운영에, 지역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지역여성활동가로 활동하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는 생협을 통해 성장한 수많은 여성들이 생협 내외부에서 지역여성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녀들이 갖고 있는 여성적 리더십이다. 전통적 리더십은 위계적 구조와 전제적 의사결정에 의존하는 가부장적 리더십이지만 여성적 리더십은 협동과 팀워크를 중시하고, 참여적 관리와 합의추구를 특징으로 한다.¹⁰⁾

벨 훅스는 페미니즘 운동 초기 사고의 전환을 위해 가진 의식화 모임에 대해, ‘의식화모임은 만남의 장으로서 소통과 대화를 중요한 제로 여기고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¹¹⁾고 말한

10) 김양희, 『동아비즈니스 리뷰』 91호, 성의 벽 넘어선 통합의 리더십이 혁신 이끈다, 2011.

11)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이경아 역, 문학동네, 2017, 38-39쪽.

다. 이것은 생협 지역모임의 운영원리와 동일하다. 리더십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하는데 생협의 활동은 여성들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참여,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여성들이 여성적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성장하는 토대가 된다.

생협운동 안에서 여성주의는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상으로 볼 때, 생협 운동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주부들이 주체성을 갖게 되고, 지역여성활동가로 성장하고, 여성적 리더십으로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공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

‘생협운동 안에서 여성주의는 진화하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첫째, 여성적 리더십이 여성주의 리더십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성주의 리더십은 ‘여성적 리더십’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현실의 권력 질서에 저항하고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권력 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정치적인 의지나 효과로서의 리더십을 의미한다.¹²⁾ 지역 문제, 농업 문제, 환경 문제처럼 여성 문제를 각성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생협활동가가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면 생협운동은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12) 김시진, 홍아정 『여성연구』 93호,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본 여성리더의 리더십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2017, 75쪽.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조합원들이 여성주의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생협 안에서도 은근한 성별분업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초창기보다 여성활동가들이 전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사업 분야에서는 남성 리더들이 주요 의사결정자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성은 조직 활동과 지역 활동, 남성은 경제사업이라는 성별 역할 분담이 생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혹시 우리 자신과 조직의 선입견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경제사업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생협의 조직문화가 지역모임이나 조합원모임을 제외하고 여성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 지역모임이나 조합원모임에서조차 성차별주의나 다른 차별적 시각은 없는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여성주의가 뿌리내렸다고 생각한 것이 안일한 생각이었고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성차별주의와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생협 조직 내에서도 성차별주의적 제도, 문화가 없는지 진단해보고 여성주의를 조직에 내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주의에 대해 보다 고민하고,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생협운동에서 여성주의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라건대,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행복중심생협연합회나 살림의료사협과 같은 여성주의 생협이 늘어나서 생협운동 전반에 여성주의가 확대되길, 동시에 현재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한살림, 두레, 대학생협과 같은 큰 생협들이 여성주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성주의에

대한 조합원 교육,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생협조직, 문화, 운동에 여성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처음 로치데일에서 시대를 앞서가 여성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었던 것처럼, 생협운동에서 주부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주체로 삼은 것처럼,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 사고의 전환, 운동의 진화를 이뤄낼 때 생협운동은 또 한보 진보할 것이다. 생협운동에서 여성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MeToo

미투운동이 불러온 질문

한살림 실무자들이 말하는 살림의 조직문화

참석 | 로시오빠(1년차, 남)
링링(7년차, 여)
석탄이(15년차, 남)
여름(4년차, 여)
좋은날(4년차, 여)

사회·정리 | 편집부

|| 참석자들은 한살림연합과 회원생협 소속 실무자들로, 발화자보다 해당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별칭으로 표기했습니다.

미투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사회 최근 미투운동이 불붙으면서 한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조직문화 혹은 집단 내 권력구조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보다 넓게는 여성주의라는 관점이 우리 사회 전반의 언어와 문화, 인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생협 혹은 한살림의 경우 사회 일반과는 다른 조직문화를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고 실제 다르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계기로 성찰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런 점에서, 실제 그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직문화는 어떤지, 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변화의 지점은 무엇일지 얘기 나눠보려고 해. 우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근의 미투운동 또는 여성주의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로시오빠 개인적으로 미투운동이 처음 등장했을 때 불안함이 있었어. 그동안의 관계에서 충분히 어떤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결국엔 남녀를 떠나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어왔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데까지 가는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조직 내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링링 미투운동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을 보면 어떤 전형성이 있는 것 같아. 가령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볼 때 보통 덮어놓고 쉬쉬하기 때문에 개별적 문제로 이야기돼왔어.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특수한 경우라고 여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미투운동을 통해 대체로 너무나 보편적이고 뻔한 루트로 간다는 것을 학습하는

것 같아.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옆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그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소박하게나마 생긴 게 아닐까 싶어.

여름 ‘미투’가 연극계, 문학계 등 일종의 영역별로 제기되었는데, 한살림에서는 공개적인 미투운동의 발언은 없었어. 그런데 (미투의 흐름이 한국 사회 전반의 현상이라고 할 때) 오히려 그런 발언이 있어야 정상이고 그게 가능한 곳이 더 열려 있는 조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누구나 얘기하고 부딪쳐서 결론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쉬쉬 하는 분위기가 있고 공론장에서 갑론을박 해볼 수 없는, 간혀 있는 토론 구조가 있는 것 같아. 왜 그런 발언을 못할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봤어.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조직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살림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링링 우리 조직이 윤리를 강조하는 여러 면이 있지만 결국은 사회의 비율과 비슷하게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봐. 문화 자체가 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름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상황에는 위계 관계에 의해서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가해자가 있다면, 우리 조직 내의 위계 관계는 조금 다른 것 같아. 가령 상급자의 권위나 인사고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지에 반하는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런 수직적이거나 고압적인 문화는 없다

고 할 수 있어. 반면에, 만일 시골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그 상대방이 아니라 동네 소문이 무서워서 움츠러들게 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폭이 좁은 동네 같은 느낌이 있어. 평등한 것 같지만 공동체가 주는 무서운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사회 비단 성폭력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고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 지가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 수직적, 권위주의적 문화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했는데, 다른 곳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링링 일반 기업문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라면, 한살림은 애초 출발부터 이념과 방향성이 있었잖아. 실제로 공동체주의를 지향하는 단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웃음) 그것과 별개로, 그런 지향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좋은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어.

여름 조합원이 대부분 여성이고, 가족을 중요시하는 정서, 이상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분명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획일적인 이미 지나 편견을 만들어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가령 지금 사회적으로는 성소수자 관련 문제라든지 여성주의와 관련한 진보적인 의제들이 다뤄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 어렵겠단 생각이 들어. 그런 점에서는 후진적이고 올드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링링 결혼과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사회에서 변화되고 있는 가치와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가치를 가진 생협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봐. 일례로 밥상 문화를 중시하고 같이 밥 먹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잖아. 꼭 4인가족이 아니어도, 밥은 자고로 여럿이 같이 먹어야지 하는 문화. 한편 지금 세태는 1인가구, 혼밥이 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물품적으로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같이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지향하는 건 아닐지라도.

좋은날 개인적으로는 이 공동체 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당연히 개인은 존중받아야 하고 동시에 직장동료, 이웃으로서 공동체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확장된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문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석탄이 공동체가 희미해지는 측면도 많은 것 같아. 규모가 커지면서 소속 팀이나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는 공동체로 있어야 서로 간에 관계가 잘 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꼭 공동체로 안 묶여 있어도 관계를 잘 맺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여름 폐쇄적인 게 아니라 언제든 다르게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입사 전에는 한살림이 농촌운동하는 보수적인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4년 정도 일하면서 안에서 본 느낌은 대한민국 평균 이상도 이하도 아닌 축소판 같

은 느낌이야. 지금은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초기에는 내 스스로 날이 서 있고 경계하느라 모든 관계가 불편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호칭 문제에서 언니라고 부르지 말고 OOO 대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 자리에서 말한다거나, 결혼 얘기를 물어올 때 딱 잘라 말한다거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은 있지만 마음 자체는 선하다는 게 보였어. 자기 가정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각자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나마 우리 사회의 경쟁적인 문화로부터 대안을 찾아서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어차피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동의가 되는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조금 바뀐 것 같아.

조직문화와 여성, 여성성

사회 한살림의 경우 사회 일반에 비해 여성적인 조직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

좋은날 우리 안에 군대 문화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보수적 문화가 있다고 생각해. 다른 조직을 경험한 실무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여기가 생각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해. 농업운동, 사회운동으로서의 진보적인 면이 있다면 조직문화에서는 확실히 보수적이고 아직 가부장적인 모습이 남아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젊은 여성이나 새로 들어온 실무자들은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조직문화가 그런 변화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

링링 연합과 회원생협 등 조직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부에는 군대문화와 형·동생 문화가 강하게 있고, 과거 운동권 남성 문화랄까, 여성은 없는 진보적 남성들끼리의 변형된 조직문화 같은 것들이 뿌리가 된 데서 특이점이 있는 것 같아. 보수적인 문화에 더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있고,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다른 조직들에 비하면 대체로 선하고 배려하려 애쓰는 마음이 많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남녀를 막론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 그래서 가족의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지원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 한편 업무에 있어서 수직적인 문화는 굉장히 강한 것 같기도 해. 그게 뒤섞여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는 것 같아.

로시오빠 조직의 여성성이라고 한다면 달리 말해 직장 민주주의 같은 것으로 얘기될 수 있을 텐데, 생협의 경우에도 사업 조직의 성격상 업무에서의 위계 질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다만 일상적으로 흔히 남성성으로 상징되는 권위적 문화의 척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실무자들이 퇴근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보는가라고 생각해. 여성성과는 반대되는 직장문화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라고 봐.

좋은날 그건 반드시 남성적/여성적 문화라기보다는 좀더 권위적인지 수평적인지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전반적인 문화보다는 개개인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

사회 그렇다면 일터로서 여성친화적이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좋은날 흔히 여자들이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판단기준으로 드는 것 중 하나가 육아휴직이 보장된다는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도.

링링 여성에 대해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건 ‘어머니’일 경우에 한정되는 것 같아. 모성과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고 그에 대한 지향이 있어서 관련해서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

좋은날 한편으로는 그게 ‘구식’이라고 느껴지기도 해.

링링 맞아. 구식의 여성존중이지. 최근에는 모성보호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해. 여성이 일하기에 위험한 직업은 모든 인간이 일하기에 위험한 직업이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기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모성보호 자체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일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만 보면 남녀 비율에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 일례로 당시 팀장회의의 구성원은 25명 중 여성이 1명이었어. 여성 실무자가 있는 팀은 총무, 회계, 홍보 분야 정도였고. 이후에 구매 영역에도 여성 실무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조금씩 남녀가 섞이기 시작했지. 대표나 상무 자리에 여성이 있다고 해서 여성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남녀 구분을 떠나서 다양성이 확대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치상으로 볼 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름 여성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은 조직에서 열린 인사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임금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신입 여성들은 연봉이 낮게 책정되어 있고, 남성들의 경우 미래를 내다보고 연봉을 고려할 때 다른 일자리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쪽에 여성 실무자가 늘어나는 경향과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

석탄이 그런 점도 이해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을 동일하게 뽑는다거나 성별과 무관하게 누가 더 뛰어난지를 보고 채용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하지 않을까? 채용 과정에서 보면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더 뛰어난 경우가 많으니까.

여름 그건 열려 있는 조직문화라고 할 수 있지. 예전엔 대체로 채용이 공급직군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뽑을 수 없던 환경이 있었다면 지금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

업무 공간에서 발견하는 조직문화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합원 활동가를 포함해 여성 구성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여성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같은 공간에 실무자와 활동가들이 같이 있다 보니 일반적인 기업 조직문화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링링 많은 여성 활동가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니 남성 실무자들이 굉장히 조합원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려움을 느끼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 그분들은 조직 내에서 많은 경험을 다양하게 거쳤고, 오랫동안 물품을 대하고 실제 많이 이용해온 만큼 웬만한 실무자들보다 연륜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령 일반 사회에서 50대 여성이 이렇게 확실한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사회적으로 환원시키기 어렵잖아. 반면 한살림 활동가들은 가정에서 살림하는 노하우가 활동 자체에 투여돼.

링링 그런 모습은 매장사업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

사회 그런 조직적 특성이 여성주의 문화로 이어진다고 말하긴 어렵겠지만 살림하는 여성들이 그러한 정체성으로 주요하게 역할을 하면서 조직문화와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좋은날 구매부서에서는 조합원 활동과의 접점보다는 실무 단위, 그리고 생산 조직과의 소통이 대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해야 할 일이 많고 수직적 관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어. 소위 ‘편하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달갑진 않아. 나는 경험이 없고 관계 자원도 많이 없는 여성 실무자인데,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선배는 지역 경험도 많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로시오빠 대체로 남성들이 사회생활에서 많이 취해온 방식인데, 똑같은 일을 할 때 여성 동료는 FM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면 권한이 있거나 연차 등이 많은 남성들이 선후배나 형동생 관계로 일을 풀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나도 예전에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기도 했고.

좋은날 내가 원하는 건 시스템대로 정리하는 방식인데 가령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맥으로 해결하고, 그 경우도 업무적인 정리가 아니라 친한 관계에서 서로 적당히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방식이 돼.

여름 그제 남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초기에 작은 규모에서 한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 같아.

좋은날 작은 조직에서는 그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 직급과 상관없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왔기 때문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처럼 조직이 커지고 구성원도 늘어난 상황에서는 거기에서 벗어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 대 사람의 관계로 해결하게 돼.

석탄이 서로 부담을 안 느끼게 만들려는 문화가 있지. 가령 타 팀과 업무 협의가 잘 되지 않을 때, 안 된 상태로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 싸우더라도 문제제기하고 소통하고 얘기하면서 조율점을 찾아서 합의하고 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논쟁을 꺼려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다는 데 대해서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는 개방적인 문화랄까. 적어도 평등한 상태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문화가 만들어질 필

요가 있을 것 같아.

그와 비슷하게, 조직이 예전의 권위적인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회의문화인 것 같아. 상위 직책자들에게 모든 정보가 주어지고, 그걸 바탕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들이 전달돼서 진행되는 방식이지. 모든 자료들을 공유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어간다면 좀 더 수평적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링링 전반적으로 단독 결정이 아니라 집단적 결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서로 얘기하고 소통해야 하니까. 그런 회의 문화를 바꾸는 게 곧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일 것 같아.

더 나은 조직문화를 위한 변화

사회 일반적으로 조직문화에서 권위주의 혹은 경직된 위계질서 등이 극복되어야 할 문화라면 그 대안으로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소통, 다양성 같은 요소를 꼽는데, 한살림의 경우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 혹은 온정주의 등이 강하게 있다는 점이 또한 중요하게 이야기된 것 같아. 장단이 있을 텐데,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볼까.

여름 그런 얘기가 공론화되었을 때, 공동체적인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웃음) 한살림은 사실 능력주의를 지향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두루 아우르고 내가 솔선수범해서 가는 데 우리

의 덕목이 있고, 어쩌면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람들을 많이 알고 관계 맺기를 지향한다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렇게 인맥과 문화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권장되는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끼기 힘든 여성 실무자들이나 소수자들이 점점 외곽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 그들끼리 연대하긴 어렵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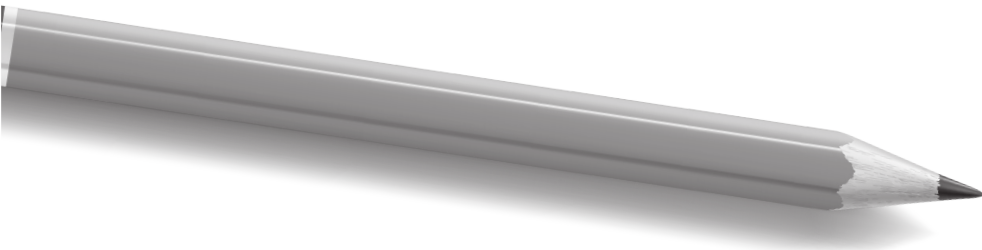
링링 한편으로 오래된 조직일수록 어떤 고착화된 문화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점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변화하고자 할 때 변화할 수 있다는 유연함이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여름 관계의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한살림이라는 일터에서 만난 동료로서 서로 신뢰하면 좋을 것 같아. 결혼을 했는지 애인이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정치 성향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그렇게 구분 지으면서 나랑 어떤 게 맞는지 찾아보고 싶고 그런 걸 모르면 불안해하는 게 결국은 신뢰가 부족해서가 아닐까? 굳이 사전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가까운 이야기부터, 가령 점심 같이 먹을래? 어떤 게 좋겠어?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차츰 알아가다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 업무에 있어서도 연차에 관계없이 서로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의 앞에 놓여 있는 것 중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좋겠어. 한 명 한 명들이 할 수 있는 가능성,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석탄이 그런 가능성을 보고 스스로 뭔가를 바꾸려는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는 흘러온 대로, 주어진

상황을 거스르려는 태도가 약했다고 봐. 훌륭한 리더 한 명에게 말
기지 말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여러 모임들을 만들어간다면 진짜 변
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공동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꾸 만들
어가는 것으로부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해. 막연히
무언가 위에서 억누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그보다는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다
양한 목소리들이 활기차게 드러나면 좋겠어.

사회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살림운동
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온 가치들이 여성주의에서 제기하는 변화의
흐름과 잘 만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러기
위해서 열린 태도와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하단 이야기로 맺을 수 있
을 것 같아. 사회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인 만
큼 어떤 것을 ‘보수(保守)’하고 또 ‘보수(補修)’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 



사회적경제기본법

- 필요와 절실함이 간과한 것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2018년 1차 포럼 발제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글.

정리 | **이보아**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총무. boah8596@naver.com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제안은 2014년부터 있어 왔고 이후 각 당에서도 제안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독자적 법안을 제출하는 대신 제안된 법안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논의해왔다. 지금까지 나왔던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제안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실체부터 파악하자

앞선 말씀대로 2014년부터 시작해서 4년 정도 숙성된 법인데 시간만 지나갔지 내용상으로 크게 발전은 없었다. 처음 제안된 당시에는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으로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했었지만 현재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이미 추진 중인데다 너무 과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이 정도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일 것이다. 찬성과 반대의 프레임이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분산된 채 집중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어떻게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인가에 초점을 뒀야 한다. 그 경우 기존에 검토됐던 이슈들 중 재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된 사항에 대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번의 국면

먼저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 현장의 입장이 크게 바뀌는 두 번의 국면이 있었다. 우선 초기 2014년도에는 현장과 조율하며 법을 제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벌어

좀 더 고민하면서 대응하려 했다. 그 당시 쟁점으로 많이 부각된 것이 사회적경제진흥원과 중앙자활 통합 문제, 주무부처로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사회적경제조직 범위 열거의 방식 등이었다. 이 중 사회적경제조직 범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 안에서는 열거하고 특정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복지전달체계에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의 수준이 근거법인지 실행법인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이 무엇인지가 모호했고, 정부 출연 없이 자활기금을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원으로 고려하는 것의 일방성 등도 문제가 되었다.

이후 2016년도로 오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이 현장의 문제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현실의 지배력을 갖게 되었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도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제대로 된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도 조속한 법 제정으로 입장을 바꾸었고, 몇 가지 쟁점은 조정되거나 합의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경제진흥원 구성에서 자활은 대부분 복지전달체계로 분리하고 자활기업만을 가져가는 것으로 되었고, 조직 범위에 대해서는 농·수·축협처럼 개별법으로 있는 조직을 열거하고 법으로 정하기 어려운 곳은 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는 열거주의와 등록주의 통합 방식으로 얘기되었다.

기존 쟁점 중 재검토가 필요한 것들

현재 법안 내용으로 보면 기본 원칙 중에 현실과 충돌하는 것이 2번(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과 3번(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 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이다. 2번 원칙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운영과 인증제도 부분이 있고, 3번 원칙의 경우 사회적기업은 아직도 1인 주주 기업을 인정하고 내부 거버넌스를 엄두에 두지 않고 있어 형식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중에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기업이 아닌 조직들이 있는데, 후자에는 사회투자지원재단 같은 중간조직은 물론이고 연합조직이나 연대조직도 있다. 이런 NPO들은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고 활동하는 전문조직인데, 사회적경제 조직이 되려면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NPO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규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을 기업 중심으로 보는 현상을 해소하고 열거주의로 가게 될 경우 현실성이 있는 반면에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기금 문제에서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정부출연 기금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기금 조성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사회적경제 균형 발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사업이 다 일자리 창출로 변질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기본법 취지에 어긋나고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주무부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위상을 가지려면 사회복지와 NPO를 망라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는 서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무부처만이 아니라 모든 중앙부처가 망라될 수 있는 다부처화로 가는 방법도 있다. 또한 지자체 협력과 지역계획이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달체계에서는 인증을 위한 행정업무가 중심이 아니라면 진흥원의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자치단체들 가운데 어떤 지역은 통합되어 있고 서울과 같이 기능적으로 분리시켜서 가

는 곳도 있다. 대구는 한 기관이 다 수탁을 받아 2개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획일적인 형태의 전달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변화된 현실,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 것인가

앞서 말했듯 처음 법안이 제안된 후 세월이 흘렀고 현실은 이미 많이 변했다. 법 제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비영리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원칙의 4번을 보면 비영리 성격을 권장하고 지향하고 있는데 법인격 중심으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구분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을 인증 여부로 서열화하는 것도 문제다. 이미 현실에서 서열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사회적기업인증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가자는 주장이 있다. 이는 지원제도와도 연동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의 목적 중심사업의 경우 노동통합형, 서비스 제공형도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진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지정제도와 지원제도를 총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인증과 지정 제도를 아예 사회적경제조직 등록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과연 정말 불가능할까?

또 정부 부처의 칸막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문제를 통감하면서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통합적이고 위상이 부여된 전담 부서가 설치돼서 적극적으로 분리해줘야 한다. 유사사업의 난립을 막고 자원낭비와 과다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낮은 위상으로는 힘들다. 예산

도 필요하다. 두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현재 수준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3섹터를 다 총괄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정도의 부처 위상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산 안정화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업기반을 안정화해줄 금융, 특히 NPO는 자금조달 방법이 실재론 없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금융의 목적성을 기업금융이 아니라 사회적목적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 금융으로 바꾸고 대상도 NPO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중간지원조직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지원조직도 현장 조직이 의존하는 것이 아닌 윈윈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고, 현장의 대표조직이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지원센터들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수탁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이윤과 영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윤리적 측면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들이 과도해서 연합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서로 물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보다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

끝으로 의견수렴 방식을 제안하자면,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패널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두고, 수렴방식에 있어서도 온라인이 발달되어 있으니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쟁점을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 어느 특정조직에서 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 기본법 제정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주체들의 연합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마지막 제안이다.

기본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선 올해 입법은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우선 기본법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지난 2014년도 논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다. 문보경 님 말씀처럼 이미 관련된 정부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지자체의 조례, 정책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오히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체계로 가는 게 필요해 보인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처와 체계 간의 연계가 없이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 중앙정부가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려는 목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지체계, 전달체계가 일관성 있게 만들어질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정책적 필요에 의해 법을 만드는 것 자체는 타당한 방식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은 필요하면 바텀업 방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 수립,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가야 하는데, 현장 의견을 이미 많이 수렴해보지 않았나? 이해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약간은 프로그램 입법적인 성격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정의와 핵심 원리에 집중해야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정의,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갖고 있는 핵심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외국의 사

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원리나 원칙, 정의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막중하게 책임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부분이라고 본다. 이러한 법이 만들어질 때, 적어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이며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질 것인지, 그 기본원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법인 중 회사법인이 빠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들어가는 지도 쟁점이고. 농협 등 지주금융회사 쪽은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전개돼서 범위를 설정했으면 한다. 다만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얘기할 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이런 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동의하기도 하지만 법을 만들 때 그 외의 방식을 택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열거할 수 있는 최대한 법적 근거나 행정적 근거를 갖고 있는 조직체들을 열거하고, 다시 기본 원리나 원칙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사회적경제가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율과 자기 영역 안에서의 규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와 범위, 기본 원리와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한 보완이라고 생각한다.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와 정부 기금의 확보 강하게 요구해야

그리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경우 반드시 민간 위원이 상임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오히려 실행위원의 성격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실제 법령상에서 실행위 성격을 가지고 작동하는 위원회가 많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위원회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계속해서 관 주도로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 체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사실상 사회적경제원을 컨트롤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기금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금융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아낼 수는 없더라도 명확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그를 통해 정부 기금을 만들거나 민간 기금들을 활성화하고 그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안에서는 그것을 빼는 방향으로 합의하는 것 같다. 따라서 오히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사회가치연대기금을 만드는 논의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기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기금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여러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좋게 말하면 설득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성하게 되면 그것대로 여러 정당성 시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넣어서, 필요한 만큼은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공공 우선구매제도의 경우엔 사실 여기 들어갈 필요는 없고 ‘사회

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서형수 의원실 발의)’에 그 내용이 들어가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법이 2개 다 통과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일단 놓자고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의 안은 필요하고 넣을 수는 있으나 5%는 좀 과도하니 절충하자는 방안이다. 전체 총량의 5%보다는 관련 특별법에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법 제정 논의는 충분히 성숙되었는가

앞서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입법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의 측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먼저 제정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었는가의 물음에 답하려면 국가 차원,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 과정이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 사회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비춰서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발의된 법안들의 체계와 내용이 과연 사회적경제의 본질과 사회적 유용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활성화 방안에 부합하는지, 이에 대한 논의가 한 방향으로 수렴되어서 나온 법안인지 등을 생각해봐야 한다.

먼저 논의의 과정은 국회에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앞에서 잘 말씀해주셨다. 간단히 보면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안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국가적 정책으로 통일시키고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서비스 부족 등을 해결해보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자율성, 자발성, 연대와 호혜로 유용성을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것은 사실 사회적경제의 본질과 다소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 등을 제도화하면서 사회적경제 전체의 틀을 제도화하는 다른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국가적인 여러 필요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의 전체 틀을 법으로 설계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운동이 성숙되었을 때 그 운동을 그대로 두기보다 정치적 필

요에 의해 흡수하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다. 19대 국회에서 현장의 필요 등이 간혹 논의는 되었으나 과연 현장의 사회적경제 운동이 많은 성숙과정을 거쳐서 논의된 내용인지,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진영의 한 목소리를 반영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안의 경우 공청회가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생략하고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다.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이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 극복해보려고도 했지만 역시 한 해 동안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래서 당시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는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소극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법안을 넘는 현장의 안을 만들자는 결정을 하고 연대회의 안을 만들어 각 정당에 교섭을 했고, 그래서 20대 국회 윤호중 안으로 정리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상당 부분 연대회의안을 수렴하긴 했다. 이 정도의 과정이 전부다. 수정보완은 되었으나 한국의 사회적경제 담론, 정의, 그 밖의 다른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

국가적 필요에 의한 추진

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정책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이 필요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20대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논의되면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기존의 연대회의 안을 다시 한 번 정리했다. 19대 국회 당시 연대회의 안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요구를 담다보니 역설적이게도 기본법이라는

형태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2016년 말에는 이를 정리해 기본법의 형태에 가까운 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민간 진영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만들어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볼 때 과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빠르게 제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진영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심의 표명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교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논의 과정에서도 국가는 이 법이 필요했다는 것이 드러났으나, 민간에서는 법안의 제정 필요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차원의 필요성, 긴급성은 여전히 논의해봐야 할 문제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된다고 할 때 법 내로 소속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 민간의 자발성, 자율성, 사회연대의 논리가 공공경제와 시장경제를 넘는 우리 사회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것인지, 그동안 경시되어 온 사회영역을 보다 건강하게 키워서 국가나 지역, 영리, 비영리 영역들이 조화롭게 작동하게 할 것인지 등 거시적 차원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금 법이 제정된다면 법 내 사회경제조직과 법 외 조직으로 나뉘는 텐데,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 내 조직들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양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중장기적인 사회적경제 발전과 한국 사회의 건강한 사회영역을 강화하는 데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가 역시 생각해볼 문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진영은 사실 해외에 비해 운동이 활발하고 성숙되어 있거나 연합조직이 체계적으로 결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민간 주도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관 주도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를 전망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에서 큰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적 필요에 의한 것인 만큼 민관의 논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1년 혹은 얼마간의 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정부 성과 창출을 위한 법은 진정한 사회적경제의 효과 가로막을 것

마지막으로 법안의 체계와 내용이 사회적경제의 본질과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었는지 평가해보겠다.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은 자발성, 자율성, 호혜성, 연대성, 민주성 등 특히 영리 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에서 비롯되고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를 어떻게 입법해야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 효과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율성, 연대성 같은 본연의 기본 원리에 기반해서 활동이 더욱 잘 되도록 국가가 조성자의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국가가 사회적경제 자체의 발전방향을 설정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이에 맞춰 활동하게 하는 부분들이 다소 많아 보인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국가들의 경우 사회적경제 운동이 성숙하고 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적경제 현장과 여러 교섭 등을 통해 법을 만들었지만 한국의 경우 그런 과정들이 미흡한 탓에

국가적 필요와 관점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틀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의 필요와 고민이 활동에 수용되지 못하고 정부의 필요에 따른 성과 창출에 몰두해 있다면 진정한 사회적경제의 효과는 묘연해질 수 있다. 유사 공공경제나 유사 시장경제로 활용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있어 다른 선진 국가들이 사회운동 강화를 통해 파생시키고 있는 사회적 연대와 신뢰, 그리고 협동의 패러다임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참고로 해외에서 사회적경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는 경우 그 체계와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노동자단체나 공제조합, 사단·재단법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상에 관한 규정을 두며, 정부담당기구와 당사자연대조직, 정부의 책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성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은 그와 달리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경제 조직들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서로 간의 연대를 촉진하고 나아가 한국 사회적경제 전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안들의 정의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는 이에 대한 공감대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하지만 결국 생산, 소비, 자산 활동까지 포함한 시장적 또는 비시장적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본질을 담아내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문제들이 있는 만큼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조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만 명확히 정리될 수 있다.

법은 사회 현상의 반영이지만 때로는 사회를 설계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특히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때로는 법이 다소 미흡해도 일단 법을 제정하고 후에 보완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등 법 제화된 영역들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의 본질, 그리고 사회 상황과 관련하여 체계와 내용이 심도 있게 고민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 민간이 주도했던 활동의 법적 효과조차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주) 대표)

.....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재 수준과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필요해

현 시점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고 본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상황이 늘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10여 년 동안 기업을 하다 보니 말 그대로 생존이 중요하지 거기에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규정 등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물음이 있다. 그냥 조직 자체로 생존하고 그 업을 지속해나가는 것 자체로 의미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고 발효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되고 혹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진다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단, 현장의 생존욕구에 기반해서 볼 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진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하면 법에 물리지 않고 법 위에서 우리의 활용 지점을 만들어갈지 등이 주요 고민이다.

법이 제정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형성되고 관계부처에 의한 예규, 지침, 집행규정, 그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조례, 지침들이 쭉 뒤따를 텐데 민간이 그것들을 다 주도해 나가고 끌어갈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그만큼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럴 만큼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조직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때 냉정하게 보면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대표조직이라고 누가, 얼마나 많은 조직들이 인정하고 있을까. 현장의 2만 개에 육박하는 사회적기업들 중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있다는 것을, 존재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재 수준이자 상황이다. 우리 요구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진다고보다는, 법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일종의 쇼 같다. 즉 민간의 요구나 주도로 되었다기보다는 정치적 쇼가 필요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것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형성되었을 때 그 속에서 개별 조직들이나 활동 단위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생존방식을 강구할 것인지가 오히려 현 수준에서 고민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 관도 민도 목동 입장에서 생각할 때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여부를 떠나서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 협동조합기본법 제도 안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정부조직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수단, 변화들이 많다. 피로감이 많이 든다. 보고 있으면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생각이 든다. 소를 키우는 것은 목동이든 보안관이 아니다. 목동들은 보이지 않는데 다들 소도둑 잡겠다고 보안관만 하겠다는 모습 같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논의 주체들 또한 다 보안관이든 목동은 아닌 것 같다. 진짜 소 키우는 사람들은

소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내가 소 잘 지켜줄게” 그러면서 떠드는 사람만 많아지는 상황이 되어간다. 그런 보안관도 생기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울타리를 쳐준다면, 그 울타리 안에서 소를 잘 키우기 위해 이런 지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실은 더 중요하지 않나.

여전히 공공이 현장을 보는 인식은 “앵벌이 하러 왔네”, “또 떼쓰러 왔네” 하는 느낌이다. 현실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파악하고 있는, 소위 ‘선수’라는 느낌을 주는 현장의 공공 비즈니스, 소셜 비즈니스 주체 역량이 보이지 않다 보니 제도 논의 자체가 조금 공허하다. 그래서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정부 정책이 더 앞서나가는 결과로 나타난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에게 맡겨놓고 기다리면 나올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거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어쨌든 선거를 통해 만들어지는 정부고 4년 뒤, 5년 뒤에 뭔가를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민간에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과정론을 펼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민간이 왜 결과 지향적이면 안 되나? 민간이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부도 정치도 주도할 수 있다. 그런데 민간이 결과로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공공의 집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시혜의 대상으로 머물게 되고 그에 쫓기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실행력과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결과지향성이 민간에 형성되어야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사회적경제 주체 관련 법령들, 공공구매나 사회적금융 등 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민간에 맡겨야 되겠다”는 단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민간의 제안대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집행될 것이다.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야 주도 가능

결국 앞으로 사반세기정도는 거쳐야 민간 영역에서도 앞서 말한 부분에 대한 역량이 쌓일 거라 본다. 사회적경제에서 지금 10년, 20년씩 그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한 조직이나 개인이 얼마나 되겠냐? 그만큼 활동한 활동가나 기업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최소 20~30%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아직 우리가 그런 토대나 역사를 거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끌려가는 것이다. 그 끌려가는 속에서 자기 성과와 실행력을 보이고 20~30년은 축적되어야 한다. 그때쯤 되면 사회적경제기본법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호혜금융 한살림펀딩의 의미와 과제

박종찬

한살림펀딩 P2P금융운용팀 팀장. (재)한국사회투자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에서 사회적 금융팀장, 경영기획부 선임연구원 등을 맡았다. 사회적금융의 실질적 적용과 운영에 관심이 있다. hsfundingpjc@hansalimfunding.co.kr

한살림펀딩,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호혜금융의 출발

한살림펀딩은 2017년 6월 한살림 미래기획단 ‘한살림 맞춤형 금융시스템 구축 및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17년 12월, 24개 한살림 기관들이 의결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2018년 5월 서비스를 정식 개시했다. 그동안 한살림 생산지들은 매년 소요되는 농산물 구매, 가공원료 매입,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다양한 필요자금들을 내부적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외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해왔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금융모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한살림재단의 집합투자 및 금융협동조합 연계형 내부 금

용시스템 모델 등을 고려하였고, 유사수신행위 및 공익재단법인의 집합투자 등 법적인 이슈 또는 유권해석상 논의될 수 있는 방법론들은 제외한 끝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P2P: Peer to Peer¹⁾ 모델을 도입하게 되었다. P2P금융은 2005년 세계 최초의 P2P금융 서비스인 조파 Zopa를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며, 국내에서도 2018년 기준으로 누적 대출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호혜금융 모델로서 한살림펀딩은 이러한 내부의 자금 수요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로부터 비자발적으로 배제되는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 현상을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외계층들이 제도권 금융에 포함될 수 있는 중간역할자로서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²⁾을 목적으로 한다. 즉 상업적 이윤에 근거한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용자의 ‘비적격성’, 금융기관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로 인한 ‘이용불가’, 낮은 금융이해도에 근거한 ‘금융문맹’, 금융상품 가격 및 특징 등이 이용자에게 적합치 않은 ‘지불불가능한 가격’ 등 금융소외의 4대 요소로 분류되는 제도권 금융에 대한 진입 장벽들을 투자자와 차입자 간의 호혜성을 통해 극복해 나간다는 역사적인 출발대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특히 한살림은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철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책임소비와 책임생산이라는 호혜적인 운영 철학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호혜금융의 실현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직으로 볼 수 있다.

1) P2P금융(Peer-to-Peer)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이다.(한국P2P금융협회)

2)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4. 4.

구분	내용
비적격성 (Ineligibility)	잠재이용자의 저소득, 고위험(높은신용등급)
이용불가 (Non-availability)	사회적 계층, 인종 등 공급자의 차별
금융문맹 (Financial Illiteracy)	금융계약 및 상품 정보의 복잡성 및 낮은 금융이해도
지불불가능한 가격 (Non-affordability)	금융상품의 가격·특징 등이 이용자에게 적합치 않음

<표1> 금융소외의 원인³⁾

국내에서 ‘금융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한 금융은 1960년대 신용협동조합(신협)과 마을금고에서 시작되어 1990년 신협의 성장을 통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IMF 이후 400개 이상의 신협 단위조합이 파산하고 2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그러한 기존의 지역금융기관들이 제도권 금융기관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로 인해 서민층의 대출자금이 부족해졌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나는조합, 사회연대은행 등 1세대 마이크로파이낸스⁴⁾ 기관이 설립되어 민간 차원의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소금융 등 민간 차원의 서비스가 정부 주도, 대기업 중심으로 변질되면서 민간 단위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 운영은 더욱 위축되고 관 주도적인 서민금융지원체계가 고착화하게 된다.

2013년에는 재정 건정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민·관 협력 자금조달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 출시

3)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4. 4.

4) 마이크로파이낸스 : 저소득층에게 대출, 저축 또는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소액규모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다.

되었으나, 이 역시 관 주도의 한계와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민간 재원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해 여전히 정책자금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더구나 201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금의 민간 위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포용금융에 대한 민간 단위의 참여와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이에 2018년 중앙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한국형 BSC(Big Society Capital) 모델인 사회가치기금⁵⁾을 통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육성과 자금 공급 확대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로써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자금조달 및 전달체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존 정책자금 공급기관과의 연계 및 보증기금, 새마을금고, 벤처투자, 엔젤투자 등 기존 자금조달기관 금융서비스의 연장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순수 민간 단위의 자조금융 주체들은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자금조달 유형에 있어 보조금, 기부금, 지분투자, 대출 등 다양한 민간 재원의 참여와 독립적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의 경우 보증 및 대출 일변도 양상을 띠는 것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현 시점에서 한살림펀딩의 출발은 순수한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도하는 자조금융의 출발로서 그 규모와 수혜 범위, 적법성 등에 있어 기존의 자조금융 및 관 주도적인 자금조달 사례에 비해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방향을 보여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영국 보수당 정부가 사회투자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휴먼예금과 4대 은행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도매은행으로 국내의 경우, 민·관의 재원을 토대로 모인 사회가치기금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금융기관을 통해 사회적금융 수요자에 공급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한살림펀딩의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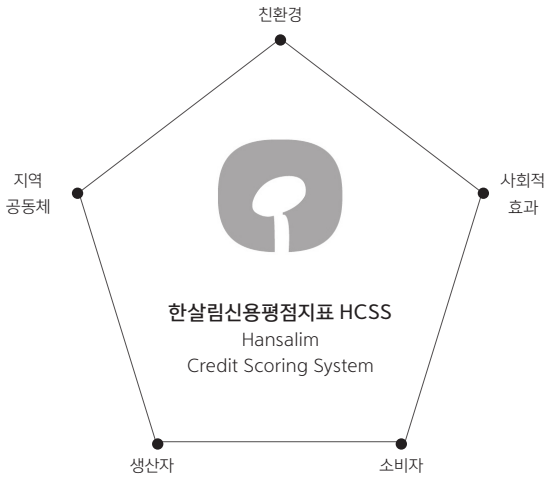
한살림펀딩은 모회사로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플랫폼을 운영하는 한살림펀딩(주)와 금감원으로부터 P2P연계 대부행위를 허가받은 자회사인 한살림대부금융(주)로 구성된다. 양자 간에는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확인증을 매매할 수 있는 원리금 수취 매매 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과 대부업법을 준용하여 투자자 및 차입자에 대한 이행사항을 따라야 한다.

생산자(대출) ↑ ↓ 금융 소비자 P2P플랫폼 금융 생산자 ↑ ↓ 소비자(투자) 소비자(투자)		한살림펀딩 플랫폼 농협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예치금 분산자산관리 <table><tr><td rowspan="3">호혜 투자 상품</td><td rowspan="2">수매,원료매입,시설,운영자금 1년 이하 동산/부동산 담보채권 신용채권, 만기일시상환</td><td>구분</td><td>금리(%)</td></tr><tr><td>금융권</td><td>1.5~2.2</td></tr><tr><td>금융취약계층 및 사회공헌프로젝트</td><td>한살림펀딩</td><td>4.0~4.5</td></tr></table> *세전금리기준 MONETA, 2018		호혜 투자 상품	수매,원료매입,시설,운영자금 1년 이하 동산/부동산 담보채권 신용채권, 만기일시상환	구분	금리(%)	금융권	1.5~2.2	금융취약계층 및 사회공헌프로젝트	한살림펀딩	4.0~4.5
호혜 투자 상품	수매,원료매입,시설,운영자금 1년 이하 동산/부동산 담보채권 신용채권, 만기일시상환	구분	금리(%)									
		금융권	1.5~2.2									
	금융취약계층 및 사회공헌프로젝트	한살림펀딩	4.0~4.5									
투자자(금융생산자) • 호혜투자자 : 한살림연합, 지역한살림 등 호혜 기관투자자 및 파트너기관 • 일반투자자 : 특정상품에 대한 제약조건 없이 금융권 예적금 금리이상의 수익실현		대출자(금융소비자) • 중저금리대출 : 한살림펀딩 금리 4.0~4.5% : P2P 평균 대출금리 14.57% : 대부업 평균신용대출 29% *금융위원회 대형대부업체기준 (2017) *한국P2P금융협회 2017.12기준										
한살림펀딩(주) 한살림대부금융(주)		한살림펀딩(주) 상품중계, 플랫폼운영, 신용평가 및 심사 한살림대부금융(주) 대출실행, 여신관리 /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표2> 한살림펀딩 플랫폼

이로 인해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준용하는 재무적 가치와 근거를 기본적으로 판단함과 아울러 차입자의 사회적 가치 및 기타 정성적인 기준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는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양자를 고려하는 복합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 연구는 주로 순수한 사회적 가치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SORI, IRIS 등을 토대로 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지표 SVISocial Value Index)와 사후 인센티브 방식(SK SPCSocial Progress Credit)에 대한 가치 측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의 직접적인 보정보다 별도의 성과측정 방식을 주로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한살림편당의 경우 대출과 투자 양 측면에서 심사에 대한 구조적 접근 방식을 고려하였다. 대출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기준인 1~10등급의 신용등급 판정 기준의 틀에서 고려하되, 경영자, 기업, 사업계획, 신용평가, 상환리스크 등 전 영역을 고려하여 1,000점 배점을 최종 환산 기준으로 평가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외에 신용평가 보정의 경우, 임의적·자의적 평가 기준을 최대한 지양하고 검증된 정성적 평가 기준인 캐나다 퀘백 사회적경제 사업체 적격성 기준 정성평가표를 준용하였다. 그에 따라 재무 등급과 비재무 등급을 통합한 신용등급 산출 모형과 위치별 점수환산표를 적용, 최종 환산하여 신용평점을 산출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배점 기준과 한살림의 자주인증 등 여러 관리 기준들이 충분히 평가 기준에 고려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기본평가영역

경영자역량, 기업역량,
사업계획, 신용평가,
상환리스크

② RISQ 정성평가영역

사회적목적,
지역사회공동체,
경영팀, 이사회, 인적자원,
시장, 운영 등 10개 항목

③ 최종평점산출

- 보장신용평점
(@: ②+신용평가)
- 종합등급산출
(①+②+@)
: 신용등급판정기준(금감원)
: 1~10등급/1,000점/
AAA~D

<표3> 한살림펀딩 평가지표 개요

향후 과제 및 방향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사업은 대부업이라기보다는 핀테크사업으로서 별도의 신산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현재는 별도의 규제 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대부업이라는 굴레에서 비금융상품으로 간주되어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높은 원천징수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권의 업권간 칸막이가 높아 P2P플랫폼업체의 선대출 금지 등으로 자기자본대출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살림펀딩이 호혜와 연대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자 대안금융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살림펀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내부 조합원 및 기관들을 넘어 외부 투자 등으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일반 금융보다 정성적 기준 등 고려 요소가 많은 사회적 금융 영역은 오히려 더 많은 심사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연계형 투자⁶⁾ 유치, 농협·신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공동사업 등 협력요소를 발견하여 호혜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투자완료 상품 중 종합평점등급 및 지원기관 선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살림펀딩에 도입할 경우 생산자들의 다양한 자금 상황에 다른 자금 조달 및 사회공헌형 호혜사업 연계를 통해 대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준영, 「사회적 자본시장과 성장자본: 보조금 연계형 사회영향투자」, 2014. 참고)

GMO에 잠 못 이루는 밤

‘논-지엠오 프로젝트’를 통해 본 미국의 Non-GMO 운동



장순철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실무자. 기후변화, 자원·에너지 고갈, 식량·농업·생태위기로부
터 밥상·농업·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살림의 주요 정책과 의제를 기획하고 대안을 모색
하고 있다. hellowjk@hansalim.or.kr

국민의 삶과 떼놓을 수 없는 기본권이기에 국민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먹을거리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먹을거리 선택권과 알권리는 GMO 표시제 독소조항이 드리운 어둠 속에 묻혀 있다.

국내 GMO 수입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GMO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이 GMO 표시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우리 밥상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MO 표시 예외·독소조항으로 인해 시장에서 GMO 표시 물품을 찾는 일 역시 쉽지 않다. 생산업체 대부분이 GMO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개정 청원 요구에 정부는 통상마찰과 물가상승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며 GMO 자율표시마저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GMO 표시제 재개정 법안마저 GMO 수입·가공 대기업들의 강력한 로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논-지엠오 프로젝트Non-GMO Project는 세계 최대 GMO 생산·수출국인 미국에서 국가 차원의 GMO 표시제 시행을 이끌어내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Non-GMO 운동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상식을 깨는 논-지엠오 프로젝트 설립 주체와 지향

GMO 표시제는 우리나라를 포함 세계 64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도입하려는 국가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까지 북미 지역은 GMO 표시제 무풍지대라 할 만큼 GMO 표시제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미미했다.

이에 2007년 ‘논-지엠오 프로젝트’라는 조직이 탄생했다. 특이한 것은 정부나 NGO 주도로 추진되는 것과 달리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내추럴 그로서리 컴퍼니The Natural Grocery Company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 있는 빅 캐럿 내추럴 푸드 마켓The

Big Carrot Natural Food Market이라는 두 복미 식품업체가 합심해 Non-GMO 물품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점이다. 두 회사 모두 논-지엠오 프로젝트 설립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Non-GMO 활동을 펼쳐왔다. 내추럴 그로서리 컴퍼니는 자사 매장 161개를 통해 식품제조업체들이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편지쓰기 캠페인’을 벌였다. 픽 캐럿 내추럴 푸드 마켓은 1년 이상의 연구 끝에 독자적으로 ‘Non-GMO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모든 GMO 혹은 이로부터 생산된 물품은 유기농 생산(재배·제조·가공) 원칙과 양립할 수 없으며,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이것은 논-지엠오 프로젝트가 GMO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GMO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Non-GMO 물품 개발과 정보 제공,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의 구매를 통한 Non-GMO 시장 확대, 생산자들의 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논-지엠오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누구나 먹을거리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Non-GMO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 Non-GMO 물품 구매력을 통해 생산·유통·소비 방식을 바꿔 나간다.
-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Non-GMO 공급체계를 만들고 지켜나간다.
- 다양한 유전적 유산을 지켜나가는 것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생태다양성에 필수적이다.
- 토종종자 확대를 꾀하고, 농민 스스로 품종을 선택하고, 키우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표준화된 Non-GMO 검증시스템을 통해 GMO 오염 위험을 줄이고, 유기농업을 돕는다.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지향과 표준위원회

논-지엠오 프로젝트에서는 유기농산물이 GMO에 얼마나 오염됐는지, 논-지엠오 프로젝트에 참여한 생산업체들의 물품들이 얼마나 안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검증하고 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GMO로부터 안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GMO 오염 허용치와 검사·분석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여겨 볼 게 있다. 논-지엠오 프로젝트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감독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인증 관련 의견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표준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인증 기준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2010년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트레이드마크인 ‘나비 인증’ 표시를 한 물품이 처음으로 출시됐다. 이후 GMO 관련 전문가부터 생산·제조·판매·소비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 중인 표준위원회는 GMO 관련 기준을 만들고, 여러 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논-지엠오 프로젝트 표준위원회는 GMO 시험, 인증, 자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검증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초기에는 1년 6개월마다 Non-GMO 인증 기준을 바꿨지만,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표준위원회에서는 인증 기준을 마련한 후 6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회에서 검토·표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 10여 명이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표성을 갖춘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 권익과 정책을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 그리고 투표권이 없는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기술관리자와 직



원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GMO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먹어야 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이러한 믿음으로 기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운영 철학이다. 논-지엠오 프로젝트는 이러한 노력과 성장에 힘입어 Non-GMO 물품과 정책에 있어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나아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GMO 관련 기술과 정보들을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아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 새로운 인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주저하며 관망하고 있는 생산자들로 하여금 논-지엠오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Non-GMO와 유기농 두 날개로 나비 훨훨 날다

세계 최대의 식량·GMO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식량·종자주권에 대한 이해가 낮아 채종이나 토종종자,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낮은 편이다. 반면에 논-지엠오 프로젝트 물품의 1/4이 유기농 일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유기농산물이 성장할수록 Non-GMO



농산물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50여년간 유기농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전환된 것은 고작 1% 가량에 머물고 있다. 이런 이유로 “Non-GMO운동보다는 로컬푸드운동, 유기농운동이 더 맞지 않은가?”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GMO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고려해 논-지엠오 프로젝트에서는 GMO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 차원에서 로컬푸드, 유기농운동과 연계된 형태로 Non-GMO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논-지엠오 프로젝트 인증 농산물 가운데 25%가 유기농, 나머지 75%는 관행 농산물이다. 관행 농산물에도 논-지엠오 프로젝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논-지엠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의 성과는 소비자들이 논-지엠오 프로젝트 인증 표시인 나비를 찾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논-지엠오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물품 종류도 2011년 3,300개에서 2017년에는 5만여 개로 늘어났다. 14,000여 소매점과 3,600여 생산자가 함께하고 있는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시장규모도 2011년 20억 달러에서 2017년 현재는 250억 달러로 성장했다.

여기서 잠깐! 왜 나비를 논-지엠오 프로젝트 인증라벨로 사용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GMO 작물 제초제인 글리포

사이트 등으로 벌과 함께 나비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비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은 물품 개수에 따라 다르다. 여기에 논-지엠오 프로젝트와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인증검사기관인 푸드체인 ID FoodChain ID, NSF 인터내셔널 NSF International, 웨어 푸드 컴스 프롬 Where Food Comes From IMI Global, SCS 글로벌 서비스 SCS Global Services 등에서 GMO 함유 여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 기관마다 비용 또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GMO 물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은 편이라 많은 생산·가공업체들이 비용이 들더라도 물품에 Non-GMO 표시를 붙이기 위해 논-지엠오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추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나비 인증을 받는 데는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꿀의 경우 벌집을 중심으로 6.4km 반경 내 관행농지가 없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벌의 보충사료(당류)가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하고 있다. 또 GMO 고위험 원재료인 옥수수나 대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정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터라 인증을 받기 위한 소요기간이 늘어난다. 참고로 나비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기농의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고, GMO 오염 여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Non-GMO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 논-지엠오 프로젝트에서는 유기농에 대해서도 Non-GMO 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초창기에는 미국유기농협회에서 논-지엠오 프로젝트를 경쟁자로 여겨 곱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유기농의 약 35% 정도가 Non-GMO 인증을 함께 받고 있다.



민간 주도의 GMO 자율표시와 Non-GMO 운동의 확산

논-지엠오 프로젝트와 더불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의 생활협동조합 PCC Puget Consumers Coop의 Non-GMO 정책과 소비자운동 역시 미국 전역에 GMO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GMO를 피하기 위한 PCC의 노력은 유전자조작기법을 이용한 호르몬이 사용되기 시작했던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만큼 PCC는 GMO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고수하며 많은 활동을 펼쳐 왔다. PCC에서는 정제된 당류와 기름을 포함 유전공학으로 생산된 식품, 유전자편집과 합성생물학 등의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식품, 복제된 동물 또는 복제된 동물의 재료로 만든 축가공품, GMO 사료로 키운 축산물과 그 축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GMO 원료를 사용한 사료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GMO로 규정하고 있다.

PCC는 이러한 식품들에 GMO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소비자 조합원과 함께 유기농업에 유전자공학이 허



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농무부에 편지쓰기 청원운동을 펼쳤다. 또, 주민투표 결과 입법에는 실패했지만 2013년에는 워싱턴주에서 유전자조작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GMO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Non-GMO 운동의 일환으로 1999년부터 미국 북서부지역의 생산자 및 목장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유기농지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지트러스트 활동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품이 가공단계를 거칠수록 투명성(먹을거리 안전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에 비해 사료는 가공생산 이전 단계에 사용되고, GMO 사료를 먹은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최종품에서 GMO 검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료의 투명성(안전성) 확보는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단계까지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면서 축산물, 축산가공품, 사료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사료의 주원료로 쓰이는 옥수수, 콩의 대부분이



GMO라는 점에서,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유전자조작 미생물 등으로 생산된 원료나 고위험 GM곡물이 포함된 사료를 급여해 생산된 고기, 계란, 우유 등을 가공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래서 논-지엠오 프로젝트 인증이 미국의 다른 Non-GMO 인증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료'다. 유전자조작 미생물 등으로 생산된 원료나 고위험 GM곡물을 사용한 동물사료를 급여해 생산된 고기, 계란, 우유 등을 가공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논-지엠오 프로젝트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원료를 사용한 가공품과 가공품 원료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Non-GMO 사료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스크래치 앤 팩 Scratch and Peck Feed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설립해 미국에서는 보기 드물게 Non-GMO 인증(2012년)과 유기농 인증(2013년) 모두를 취득한 첫 번째 사료기업인 스



래치 앤 펙에서는 사료 원재료에 대한 세부정보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GMO 위험군인 옥수수나 대두에 대해서는 GMO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꼼꼼한 검사와 원료수급의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GM곡물이 혼입될 수 있는 만일의 경우를 고려해 0.9%를 비의도적인 혼입 허용치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순환농업을 위해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지역 농민들에게서 구입하고, 좋은 원료 공급처인 유기농지 보전을 위해 생산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사료 단백질 공급원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두는 GMO 고위험군이라 이를 대신해 미국 남서부 해안에서 잡히는 생선 부산물과 완두콩을 대두 대체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스크래치 앤 펙이 지향하고 있는 Non-GMO 정책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넘어 경축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 농지보전, 사료자급률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욱 각별한 의미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알 권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법’,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전 세계 GMO의 40%를 생산·수출하고 있는 GMO 종주국 미국. GMO를 가장 많이 수입·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된 한국. 양국이 각각 다른 의미에서 ‘GMO 대국’이 됐다. 그리고 판박이처럼 두 나라에서 GMO 표시제를 더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독소조항을 통해 개악이 이루어졌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2001년 식품의약국FDA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GMO 표시를 해왔고, 각 주마다 민간 주도로 GMO 의무표시제 도입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14년 5월 버몬트주에서 GMO 의무표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시행 일주일 전, 몬산토 등 GMO 관련 기업들의 집요한 로비로 상원에서 연방 차원의 GMO 의무표시제 법안이 제출됐고,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2016년 7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서명했다. 그리고 2018년 7월 GMO 의무표시제가 미국 전역에서 시행됐다.

새롭게 시행된 미국의 GMO 표시제가 언뜻 보기에는 더 강화된 것 같지만 좀 더 파고들면 2017년 개정된 우리나라 GMO 표시제처럼 독소(예외)조항을 담고 있다.

새롭게 공시된 법률에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GMO와 동물, 과당의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비의도적인 혼입치 역시 논-지엠오 프로젝트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치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설정해 놓았다. 특히, 생산자가 GMO 표시를 하되 소비자는 그 GMO 표시를 확인할 수 없도록 법안에 ‘미국 전역에서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육류 등 제외). 다만, 그 표시는 포장지에 GMO라고 표시하는 방법 외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독소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소비자가 물품 정보를 보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QR코드를 읽어야 한다. 이 바쁜 세상에서 누가 일일이 QR코드를 찍어볼까?

QR코드로 대체 표시가 가능하도록 한 GMO 표시법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인들은 이 법안을 ‘어둠의 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미국인의 알 권리를 부인하는 DARK: Deny Americans the Right to Know 법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GMO가 주재료이든 부재료이든 가리지 않고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시제가 한결 나아진 것 같지만 실상은 퇴보했다는 게 맞을 것 같다. 개정법에는 식용유, 간장, 증류주, 참치통조림 등 수차례 가공해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독소조항을 새로 담았다. 이에 따라 ‘원재료 중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라는 개정 전 규정도 삭제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GMO 표시대상이 아닌 다른 모든 식품에는 그 식품이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와 같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자율표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 소비자들이 GMO 사용여부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개정된 GMO 표시제 자체가 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Non-GMO는 GMO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안



보와 미래세대의 밥상, 생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이다. GMO 표시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선택권 및 알 권리와 관련이 깊다. GMO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DNA나 단백질 검출 결과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조작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GMO를 식품원료나 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원료 기반의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인된 제3자 검증을 거쳐 Non-GMO 표시를 민간 자율에 맡기는 GMO 자율표시제를 허용하고, 아이들의 건강은 국가의 미래인 만큼 대만처럼 학교·공공급식에서 GMO를 퇴출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먹을거리 알 권리와 선택권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GMO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깊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낼 수 있다. 

기후변화와 초고령화 - 농업·농촌에서 길을 찾다

한국농촌사회학회 학술대회 풍경 그리기

박지은

사회학 연구자. 모심과 살림 기획자문위원. 「씨앗으로부터」 저자.

batgirl97@hanmail.net

한국농촌사회학회는 지난 5월 18일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기후변화와 초고령화-농업·농촌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2018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¹⁾ 김철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와 초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다. 농촌사회학회는 이에 대한 해답을 농업·농촌에서 찾고자 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미래가 농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

1) 한국농촌사회학회와 글로벌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연구센터(SSK) 주최로 대한지리학회, 건국대 친환경식자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원마운트, 모심과살림연구소가 후원하였다.

문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구절벽의 현실화, 농촌초고령화 사회의 진단과 대응 △기후변화와 농업기술, 시민행동 △농민의 것은 농민에게 : 개헌과 농민권리 △기후변화의 도전과 대응 △농식품 가치사슬에서 노동, 지역, 생산, 유통의 변화 △농업농촌의 대안적 접근 : 농생태학,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등 총 6개 세션을 통해 17개의 논문이 발표됐다.

무엇을 이야기했나

먼저, 작년과 달리 눈에 띄는 점은 학계 및 연구소의 기존 참가자들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 현장 전문가들의 면면이다. 농어촌네트워크 상생 김광남, 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 김정열,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 이훈,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기형,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박미정, 정영이, 플무농업학교 환경농업전공부 오도, 젊은 협업농장 정민철 등이 토론을 통해서 이론 중심 연구들의 다른 축을 드러나게 만들었다.

둘째, 현실 대응과 관련된 주제 선정의 다양성이다. 기후변화와 초고령화를 주제로 한 발표자들 및 토론자들의 언어를 살펴보면, 귀농귀촌, 지역농업, 농민권, 종자권, 지역 노동력, 생산구조 변동, 농생태학, 사회적 농업, 도농공생 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한살림을 비롯하여 농민단체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이슈와 쟁점들도 다각도로 소개되었다.

인구절벽의 현실화, 농촌초고령화 사회의 진단과 대응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7세'. 65세 이상 경영주가 전체의 40.3%에 달한다.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의 초고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으로 지역 단위 청년농 육성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청년농 육성을 농정의 중요 목표로 삼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중이다. 청년 지원이라는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향후 더욱 확대될 사업이기 때문에 청중의 관심이 뜨거운 주제였다.

진명숙(전북대)은 '귀농귀촌인 주도단체의 현황과 특성'을 주제로 진안군에서 귀농귀촌인 그룹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이들이 향후 토착그룹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화합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갈 것을 주문했다.

박지은(전남대)은 충북 괴산군 불정면 복숭아 생산조직들과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를 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30여 년간 '전 지구적 상황 아래 지역농업 재편과정'을 추적하며 농민 주체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농민들의 가족 구성, 노동력, 작목, 농기계 보유 등 다방면에서 달라진 상황 속에 실질적 생산력을 담보하면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젊은 농민들에 주목하고자 했다.

기후변화와 농업기술, 시민행동

정은숙(국립농업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하다고 설명하며,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기후적응형 신농법 개발에서 기후적응형 신품종 개발, 온난화 대비 열대·아열대 작물의 도입 및 재배기술 개발, 중북부 남부지역 식량작물 작부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상기상 피해방지 강화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는 석유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인 차원에서 추진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다. 건축주의 오랜 학습을 바탕으로 일반인에게 적용 가능한 비용과 기술에 초점을 두었다. 이훈(살둔 제로에너지하우스)은 제로에너지하우스가 농촌에서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기의 질과 거주쾌적성을 위한 건축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엄은희(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는 동남아시아의 월경성 연무 이슈의 발발과 해결 과정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의 황사 및 미세먼지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무 발생의 당사국이자 가장 큰 피해국인 인도네시아는 2016년 구체적 정책수립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집행하였고, 그 결과 연무 및 화재 발생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

기후변화의 도전과 대응

미안 사비르 후세인(Mian Sabir Hussain(건국대))은 파키스탄의 편잡 지역에서 밀과 쌀의 생산성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으며, 강우량과 온도 변화가 유의미한 관계라고 밝혔다.

허인혜, 임수정, 이승호(건국대)는 1980년 이래 4대 작물(옥수수, 밀, 쌀, 콩) 재배 지역에서 기온상승이 탐지되었으며, 기후 영향이 수확량 변화율의 10% 이상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벼 수확량과 기후요소의 관계에서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일조시간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강수량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농식품 가치사슬에서 노동, 지역, 생산, 유통의 변화

이상울(대구가톨릭대)은 농촌 노동력 공급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일 지자체나 사설 인력공급의 한계를 지적하며, 권역 노동시장으로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지자체별로 확대 시행할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제도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조영국(협성대)은 세계 2위의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의 닥락 지역에서 국영기업이 외국계 기업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 조치들을 검토했다.

채수호(한국유통혁신연구원), 김윤두(건국대)는 노동패널 분석을 통하여 소득 재분배 및 빈곤 완화 효과, 농민 소득 상승 효과, 환경적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분석했다.

농민의 것은 농민에게 : 개헌과 농민권리

윤병선(건국대)은 자본에 길들여진 영농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농업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만들어야 할 농업의 가치는 자본의 농업 지배에 대한 대항력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열(비아캄페시나 동남동아시아 국제조정위)은 농민의 권리 중에서도 여성농민의 권리에 대해 강조했다.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보다 농촌에 강하게 남아있는 가부장제 시스템을 언급하며, 유엔인권이사회 농민권리선언문 조율 과정에서도 여성농민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민권리선언 쟁점 사항들 중에서도 한국 정부는 특히 종자에 대한 권리에서 종자 판매권을 국제법과의 충돌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농민권리선언 19조에는 ‘농가가 저장한 종자나 번식시킨 것을 저장, 사용, 교환, 판매할 권리’를 적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씨앗이 농산물로서 교환되고 있지만, 향후 기업들이 종자권 보호를 주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박경철(충남연구원)은 충남도 토종씨앗 보존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토종 씨앗 보존 및 유지에 관한 정책과제, 토종씨앗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소득보전직불금의 필요성, 로컬푸드와 연계된 판매촉진, 교육 및 학교급식과 연계한 활동, 토종씨앗 나눔 행사 등을 강조했다.

농업농촌의 대안적 접근 : 농생태학, 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

윤수종(전남대)은 전지구적 경향에 직면하여 식량주권과 생태적 고려에 근거한 생산체계 개념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농민, 비정부기구, 일부 정부 및 학술기관이 주도한 현대적 농생태 과학 및 토착지식체계 적용 등 새로운 접근법 및 기술은 여러 농촌 공동체들에서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토양 및 물을 보존하면서 식량안보를 향상시킨다. 한편으로 기술적 또는 환경적 의지만으로는 농생태학에 기반을 둔 농업을 보급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속가능한 농업 주도권의 시행을 제한하는 정책, 제도, 시장, 연구개발 의제에서 농생태학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관행농업으로부터 유기농업으로의 전격적 전환 혹은 농생태학적 요소들을 관행농업에 결합하는 방식 등의 사유와 실천이 한국농업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방향설정자가 될 것이다.

김정섭, 이정해, 김경인은 충남 홍성군 장곡면의 사회적 농업 사례를 탐구했으며,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농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분석했다. 사회적 가치를 잃어버린 기업형 혹은 경영자형 영농양식으로부터 ‘농민영농양식’으로 전환하는 실천에 대해 제시했으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경쟁력 코드를 사회통합으로 재코드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 활동뿐 아니라 돌봄의 장소 혹은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상상은 농산물 생산의 지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지층을 관통하는 새로운 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기석(마을연구소)은 마을·지역공동체 사업의 책임주체를 설정하는 과제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민간자조·자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귀농인과 원주민이 상생하는 ‘도농공생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회공동체 융합플랫폼 전환모델’을 설정했다.

이날 제시된 의제들 중에서도 특히 농정 현안을 반영한 연구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및 농민들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존재했으며, 토론자뿐 아니라 발표자와 청중 사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광남(농어촌네트워크 상생)은 농촌과 지역소멸 문제를 농촌에 국한된 채 접근해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과 관련해 “3년 지원해서는 정착이 어렵다. 3-5-10년제로 바꿔 실효성을 높이되, 거품 농사꾼이 되지 않도록 애초부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년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철(젊은협업농장)은 ‘사회적 농업의 의미를 듣고 보니 자신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서 좌중이 폭소와 함께 공감의 박수를 보냈다. 젊은협업농장은 2011년 설립 초기부터 웹페이지에 교육과 교류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학술대회의 다른 발표들에서 파악한 문제의식들을 함께 엮어서 지금과 같이 고령화·대농화되는 농촌에서 사회적 농업이 새로운 방향의 틀거리가 되어 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박미정(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경남 지역을 사례로 들며, 전반적으로 대농화하는 젊은 농민들의 현실에서도 농생태학적 실천을 접목하거나 혹은 점진적 유도를 통해 확산시킬 수 있을 때 새로운 대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토론했다. 대농화 경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농민층 분해 이론부터 생계형 대농, 기업농과 경영형 대농 등의 개념들이 제시되었고, 이들은 어떤 주체들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쟁점이 되었다.

생각해볼 과제

이날 대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논제들은 생각해볼 과제를 던져준다.

농촌의 새로운 주체 형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농촌은 고령화되었으며 농민은 소수자가 된 현실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들은 어떻게 재생산될 수 있을까. 새로운 청년농 육성 역시 시급한 과제이지만, 현재 농촌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젊은 농민들에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귀농의 특성상 도시에서의 일자리와 달리 농촌에 대한 정서 혹은 관심, 목적의식성과 관계의 연결이 의미 있는 준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적 지원만으로 농촌 정착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주체들을 새롭게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 생태학적 접근을 유도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농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실천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주체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인정하는 실험과 시도들로부터 ‘농촌이 살 만하다’는 희망이 움틀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농민과 종자권 연구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는 가능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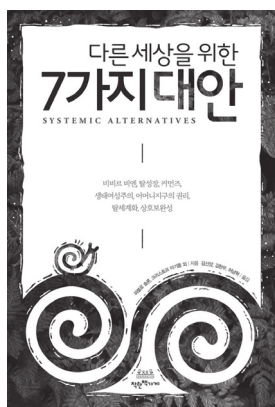
한국은 종자등록권자 및 특허권자들에게 의미 있을 정도로 시장이 커지지 않아서 현재까지 인도 사례에서처럼 종자권 갈등이 심각하지는 않다. 그러나 시장형성의 조건, 즉 기업의 농업 진출, 자본 및 기술 투자, 규제 완화 등의 조건이 맞물릴 때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특히 현행법에서 자가채종 종자는 농민의 농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 자가채종권의 예외를 보장하는 것과 비교해도 후퇴되어 있다. 즉, 기존에 농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운동 진영에서 진행했던 ‘씨앗 나눔’ 운동은 농민의 권리, 즉 ‘자가채종한 종자를 보존·사용·교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요구로 재사유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국립농업과학원은 기후 적응형 신품종 개발, 온난화 대비 열대·아열대 작물의 도입 및 재배기술 개발, 중복부 및 남부 지역 식량작물 작부체계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이상기상 피해방지 강화로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국제적으로 생태학적 접근의 연구그룹들에서는 농민의 토착지식과 접목하여 지역과 땅에 적응된 종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현장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간 한국에서는 학계와 활동가 그룹들이 긴밀히 연계된 전문성 있는 작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연구영역은 여전히 국가 중심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져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 및 연구소의 기존 참가자들 외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농민, 현장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농업 현실이 고착되어 버릴 것 같은 현실에 대한 한계선의 감각들을 균열시킬 수 있는 논의들이 진전되길 희망한다. 

다른 세상을 위한 대안, 다른 삶을 위한 질문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파블로 솔론, 크리스토프 아기통 외 지음

김신양, 김현우, 허남혁 옮김

작한책가게, 201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은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시대의 위기를 ‘시스템 위기’로 규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비전으로 비비르 비엔, 탈성장, 커먼즈, 생태여성주의, 어머니지구의 권리, 탈세계화, 상호보완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다양한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속에서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위기에 제대로 맞설 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그러한 다양한 비전들 사이에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이 곧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저자 특별 좌담회에는 저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프 아기통이 참석하여 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좌담회에서의 저자 발언 내용 중 일부와, 세 역자들이 각각 비비르 비엔, 커먼즈, 어머니지구의 권리에 대해 실천적 사유 또는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화두, 대안적 논의와 연결지어 다룬 글을 실는다. - 편집자 주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을 엮다¹⁾

크리스토프 아기통 Christophe Aguiton

프랑스텔레콤 노동조합 출신으로 다른세계화운동가이다. 지은 책으로 『세상은 우리 것』, 『21세기 좌파』 등이 있다.

시스템 대안Systemic Alternatives을 찾다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20년 전 세계사회포럼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솔론 재단(볼리비아), 남반구 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 아탁ATTAC, 프랑스, 국제금융거래과세를 위한 시민행동 단체 등 각기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세 기관이 세계사회포럼에서 만나 논의하며 시스템 대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다. 세계사회포럼은 2001년에 브라질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에 생태운동, 여성운동, 노동조합운동, 정당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이 만났다. 다른 운동과의 만남은 다른 문화와의 만남이기도 한 만큼, 서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예를 들면 나는 프랑스 사람이고, 데카르트적 사고체계 안에서 사람은 사람이고 자연은 자연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여겼는데, 인도 사람들은 산과 물, 자연에게도 기본권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서로 다른 운동의 만남이 서로 다른 문화의 만남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세상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 남미의 현실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다. 1999년 무렵부

1)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특별 초청 좌담회 내용(착한책가게 제공)에서 발췌, 재구성

터 남미 여러 나라에 진보정부가 들어섰고, 그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 임금노동자들의 여건이 좋아졌다거나 빈곤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든가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정부가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정부임에도 과거의 생산주의·채굴주의(자원을 무분별하게 채굴해서 계속 경제를 유지하는)와 단절하지 못하고 그를 답습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현재 좋지 않은 결과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는 좌파들의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진보적인 좌파 정치세력들(스페인의 포데모스, 그리스의 시리자, 미국의 샌더스, 영국의 제러미 코빈 등)과 남미의 좌파 정부들은 여전히 옛 모델을 답습하고 있다. 이들이 대안과 관련해서 보인 행보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했다.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을 찾고 있었다. 바꿀 수 없다면 실제 대안이 아닌 거다. 20세기 초부터 등장한 대안적 사상과 사건들, 예를 들어 독일 사민주의나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베트남 혁명 등이 있었지만 실제로 세상을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상은 아니었고, 좀 더 나은 대안이라 생각했던 북유럽 사민주의도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독트린(교의)이 필요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한 조각들을 하나씩 찾고 있었고 그 일부가 이 책으로 나왔다.

생산주의, 국가주의, 서열주의와의 단절

7가지 대안들이 하나의 공통된 논리로 연결되어 내적인 정합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거기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생산주의와의 단절’이다. 기존에 정통 좌파나 케인스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과의 단절이 ‘탈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나왔다.

둘째는 ‘국가주의와의 단절’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진보적이거나 좌파적인 사상들은 계획경제와 국가의 분배 등 국가가 중심이 되어 사회를 바꾼다고 생각해왔는데, 국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커먼즈Commons’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운동 또는 투쟁에서의 서열 문제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세계를 바꾸는, 운동 안에 일종의 서열주의가 있었다. 그런데 노동계급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주체들과 운동들이 있으며, 이들 사이에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중요한 투쟁이라고 보는 것이다.

7가지 대안에 대한 논의와 교육의 확산

이 책이 발간된 후에도 여전히 남미의 사회운동에서는 생산주의가 대세이다. 남미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빈곤 투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석유를 채굴해야 한다는 논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책을 발간하면서 전 세계 사회운동진영뿐만 아니라 지식인층에서도 관련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책에 담긴 아이디어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이다. 현재 ‘탈성장’, ‘비비르 비엔’ 등 각각의 주제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사회운동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에서, 또 다른 사회운동 쪽에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있다.

현실에서 대안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

이 책의 저자는 4명인데, 각각의 주제에 대해 먼저 해당 주제의 기원은 무엇인지, 그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쟁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썼다. 지금은 이것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며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사례와 더불어 조사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첫째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투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둘째로는 노동에 관한 것으로, 임금노동이라는 노동의 방식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셋째로는 비아 캠페시나 같은 농민단체와 함께하는 것으로, 먹거리주권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넷째는 다른 에너지 모델로서 재생에너지 모델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노동, 먹거리, 에너지까지 각각의 중요한 현실의 문제에서 이 시스템적 얼터너티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것이 어떤 진전을 이루고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오는 10월 벨기에에서 열리는 아시아 유럽 피플 포럼AEPF에서 이 두 번째 프로젝트의 결과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할 예정이다. 

‘비비르 비엔’, 참된 삶의 철학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 사회적경제를 학문과 실천의 영역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연구와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등을 썼다. shinyangkim@hotmail.com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 아니 그보다 ‘잘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이 책의 첫 장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나 잘 살기 위한 조건에 대해 말하기 보다는 사람으로서, 한 생명으로서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고 있다.

비비르 비엔 *Vivir Bien*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잘 살기’이지만 사실 그 말이 묻는 건 ‘참된 삶’에 관한 것이다.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면서 따라야 할 도리. 하지만 그 도리라는 게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상정하진 않는다. 나(사람)를 둘러싼 환경, 그 환경 속의 살아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들, 심지어 땅속과 바닷속의 것들과 하늘

위에 있는 새와 구름과 보이지 않는 공기와 떨어지는 빗방울까지 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이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이다.”

길게 인용한 글은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을 발간하며 쓴 율진이 서문에서 가져왔다. 이 책을 번역하리라 마음 먹은 것은 이 책의 첫 장을 여는 비비르 비엔을 읽으며 느낀 감흥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오랫동안 찾던 것은 세상을 분석하기 위한 이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삶의 철학’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념은 그 논리나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다수와 소수 등으로 나누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힘의 논리, 옳고 그름의 논리, 너와 나를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논리였기 때문이다. 한쪽 편을 들어야 하기에 한쪽을 버려야 하는. 이런 논리에서 공존, 공생,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나와 너는 지구의 아이

비비르 비엔의 철학은 나와 나를 둘러싼 외부세계를 구분하여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따지는 이념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나는 나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비비르 비엔은 현재 존재하는 것이 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도록 한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나의 눈은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게 된다. 나의 눈은 그

것들의 지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아우르며 보기에, 현재는 변함없지만 내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 훨씬 풍성해지는 것이다. 나는 지금을 살고 있지만 그 한시적인 순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성과 발전과 소멸을 품으며 살 수 있다.

이러한 눈은 ‘파차마마Pachamama’, 즉 ‘어머니지구’라는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인간중심적, 인종주의적, 특정한 성 중심으로 사고할 때 사람과 자연, 인종과 인종, 남성과 여성은 갈등하고 대립하는 존재가 되어 전쟁이 발생하고 억압과 지배가 생겨난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열린 시각, 보다 확장된 시각인 코스모비전cosmovision을 가진다면 나의 시야는 우주적인 지평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일지라도 그 영역에만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며, 내 존재를 품는 것은 전체로서의 파차마마, 즉 어머니지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은 나와 공존하는 것이니 마치 내가 아주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것 같다. 뽕족하게 튀어나온 못에도 위험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뽕비는 지하철에서 내 팔을 툭 치고 지나가는 남성에게 적의를 느끼지 않고 그의 아이 적 모습, 그가 노쇠할 때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게 되니 어찌 지금의 그를 탓하겠는가? 함석헌 선생이 ‘인간 혁명의 철학’이라는 피흘리지 않는 혁명을 이야기한 까닭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장일순 선생이 ‘나락 한 알 속의 우주’를 말한 것도 같은 이치일 것이다. 그분들이 이미 이야기한 것들이지만 비비르 비엔을 접했을 때 더욱 아프고 새롭게 다가온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비비르 비엔의 철학을 지키고 살아 온 남미 안데스공동체들이 겪은 역사와 그들이 처한 삶 때문일 것이다.

피억압자의 삶의 철학이 모두를 위한 새로운 삶의 철학이 되기까지

북미의 인디언들이 그랬듯이 남미의 인디언들 또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 총과 칼을 들고 이 풍요로운 대륙을 찾은 서구인들은 평화로운 아이마라부족과 케추아부족을 단지 벌거벗은 야만인, 아니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보았다. 그러하기에 그들을 사람으로 대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길들이고 부려먹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자연과 공존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돌보고 협동하는 그들의 정신과 문명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정복자들의 눈에는 그곳의 땅이 품은 금과 은과 고무와 같은 자원만 보였고, 그것들은 짐승의 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끊임없이 약탈해갔다. 그것을 캐기 위해 학대받다 죽은 목숨의 뼈는 묻혀있는 보석보다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복자의 운명은 더 강한 정복자에 의해 끝이 나는 법. 20세기 들어 남미의 각국은 새로운 서구 정복자들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정치적인 예측의 길을 걷게 된다. 2차 대전 후 독립은 했지만 서구에 의한 정복은 ‘자유무역’이라는 경제논리로 계속되었다. 온 나라의 자연은 먹고살기 위한 경제의 이름으로 파헤쳐졌으나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빛은 늘어만 갔다. 선진국의 길은 남미의 길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개발 모델이 필요했고, 다른 정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때, 애초의 정복자들의 논리와 이념이 한계를 드러냈을 때,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겪고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삶을 지킨 안데스 공동체들의 삶의 철학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위 진보적인 정부라고 하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는 비비르 비엔의 비전이 헌법으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역사는 돌고 돌

아 정복자들이 억압했던 부족의 삶의 철학이 이제 예속을 끊고 자율적인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념이 된 것이다. 세상사 알 수 없다지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공동체의 삶의 철학이 국가의 이념이 되고 그것을 정치인이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었을 때, 비비르 비엔은 온전한 의미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랑과 연민이 세상과 맞서게 한다

비비르 비엔은 조화로운 삶, 숭고한 삶, 혹은 내적인 평화를 가지는 삶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조화로운 삶, 평화로운 삶은 연민을 가진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것들이 다치고 상하고 피해를 입는 것에 아픔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나의 아픔이 무기력한 감정이 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치유의 행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그 조화를 깨트리고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에 맞서려는 의지도 생긴다.

나의 왼팔이 다치면 아픈 것은 나이든, 어머니지구의 아이인 우리에게 너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와 개의 굶주림과 공포 역시 나의 상관 없는 일이 아니다. 어디 살아있는 것들과의 관계만이 그러할까? 내 몸의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나기까지 나는 정성껏 내 몸을 돌봐야 하듯, 우리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산과 강과 바다가 더럽혀지면 깨끗이 씻겨주고 닦아주어야 할 것이고, 파헤쳐져 상처를 입으면 덮어주고 새싹이 돋아나게 영양분을 주며 돌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남미에서 비비르 비엔의 정치는 이렇게 돌보고 치유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못했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정치도 결국 과거의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참된 삶의 철학이 아니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었다. 그리고 단시간 내 쉽게 돈을 구하는 방법은 그토록 비판을 받아온 자연 자원의 채굴이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땅을 파면 돈이 되는데 누가 노력해서 땅과 밭을 일구고 경작하려 하겠는가? 당장 뭘 해야 하는데 언제 공동체를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허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며 기다릴 것인가? 권력은 짧는데 언제 비비르 비엔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를 돌보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랬을 것이다. 정치를 지배의 수단으로 보니 숭고한 삶, 내적인 평화를 이루는 삶, 전체인 어머니지구에서의 조화로운 삶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이기에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정치에 사람이 없고, 삶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연민이 없기 때문에 비비르 비엔은 법의 문구로는 표현되어도 정책으로는 표현되지 못하고 외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른 세상’은 ‘다른 나’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것을 만들려면 부정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분명히 그려져야 한다. 저항할 것이 무엇인지, 참여하고 돌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가 분명히 대비되고 선명하게 그려져야 한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 있는 것을 활용하되 극복해야

할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남미의 진보정부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그러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살리는 정치, 삶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죽음의 정치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기존의 보수, 우파, 신자유주의 정책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된 까닭이 어디 정부에게만 있겠는가? 비비르 비엔의 비전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삶의 철학일진대 헌법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그것의 실현 주체를 정부로 두고, 정부에게 맡기고 의존하고 기댄 이들 또한 공모자들이다. 숭고한 삶, 조화로운 삶은 정치적 기획을 넘어선다. 그러한 삶의 이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와 나를 둘러싼 우리가 공동으로 지켜갈 때, 그리고 공동체를 넘어 사회로 확장되고 국경을 넘어 이웃 나라의 다른 '나'들과도 공유할 때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듯, 다른 세상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잉태하는 나의 삶의 철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묻는다. 

지구라는 공유지에서 잘 살기 위한 커먼즈 사용법

허남혁

농업·먹거리 지리학자.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싼 대안에 관심을 쏟으며 연구하고 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를 썼고, 『로컬푸드』(공역), 『먹거리 정책』(공역) 등을 옮겼다.

hurnh@naver.com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미세먼지 문제나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모두 공기와 바다가 오염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공기와 바다는 공유지이다.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소유권을 부여할 수도 없다. 공기와 바다를 통해 전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서 우리 도시의 공기와 앞바다를 관리할 책임도 있다. 지구상의 공기와 바다는 우리 모두가 관리해야 할 커먼즈commons이다.

1968년 개럿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논문에서, 공동목초지처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유지(커먼즈)

는 이용자들에게 개별적 소유권을 주고 관리하지 않는 한 무주공산이 되어 결국엔 망가진다고 주장했다.¹⁾ 즉, 자본주의의 핵심인 사적 소유권만이 공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이다. 이 논리는 1970년대 후반부터 기승을 떨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 논리로 작동해왔다.

하지만 정치학자 엘리너 오스트롬이 전통적인 소규모 공동체들이 농어업(목초지, 숲, 농업용수, 어장)과 관련하여 개별적 소유권이 아니라 공동체적 규범에 의거한 관리체계를 잘 작동시켜 커먼즈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해온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가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공유지의 비극보다는 희극의 사례들이 더 많으며, 오히려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같은 외부 동력이 그러한 관리체계를 무너뜨려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개별 이용자들이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며 자연자원 같은 물질적 커먼즈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지식 커먼즈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리눅스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나 위키피디아 같은 지식아카이브 등은 소규모 지역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인터넷 기술에 힘입어 커먼즈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1) 1998년 그는 사이언스 지에 다시 글을 쓰면서, commons 앞에 unmanaged라는 형용사를 빼뜨린 것이 자신의 과오라고 술화하였다. 즉, “관리되지 않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썼어야 했다는 것이다. 커먼즈 일반에 대해 그렇게 주장한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본 것이다.

공유지의 사유화와 저항의 역사

사실 커먼즈의 해체와 사유화는 자본주의의 역사 그 자체이다. 영국에서 농촌의 평민commoner들이 공동체적으로 관리해오던 공유지가 근대 산업혁명의 여명기에 접어들자 지주들의 인클로저로 인해 점차 사유화되고 평민들은 도시의 노동자로 전락한 역사 말이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공유지(커먼즈)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하지만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땅이자 자원으로써 권리를 보장받아 왔다. 535년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공기와 물, 바다, 해안은 인류 공동의 공유물로 이를 이용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고 선언하였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이 보장한 핵심 조항 중 하나는 커먼즈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조선도 건국 초기부터 산림천택 여민공지山林川澤 與民共之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즉, 일부 왕실 숲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숲, 하천, 연못의 사용권을 백성들에게 개방하여 먹거리나 생필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 원칙이 왕실이나 귀족들의 횡포로 무너지게 되면 백성들의 반란이 뒤따랐다. 귀족들의 횡포를 피해 공유지인 숲에서 활동한 13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의적 로빈후드나 16세기 조선 중기 의적 임궽정을 바로 이런 사례로 볼 수 있다. 임궽정은 황해도 갯벌지대라는 커먼즈에서 자생하는 갈대를 이용해 생필품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해왔던 고리백정이었는데, 왕실이 이 땅을 불법으로 사유화하면서 터전에서 쫓겨나게 되자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다양한 사유화의 사례들은 우리의 공분을 불러일으킨다. 상수도나 철도의 민영화로 인해 큰 수익을 올리게 된 사기업과 엄청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제3세계 국민

들의 문제나, 마을 차원에서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공유지(법적으로는 국유지)를 2000년대 들어 식량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국적기업들에게(국가의 양허에 의해) 빼앗기는 농지수탈land grab의 문제, 그리고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농부들의 노고에 의해 개량되어 온 종자들이 점차 다국적기업들의 사유물로 전락하고 농민들은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현실이 그러하다. 제3세계 지역들의 생물다양성 자원을 가지고 생명특허를 얻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다국적기업의 이야기를 담은 반다나 시바의 『자연과 지식의 약탈자biopiracy』가 나의 첫 번째 역서가 된 것도 그래서였다.

커먼즈 운동의 시작과 이론의 정립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인터넷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글로벌 커먼즈의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커먼즈 운동이라고 부를 만한 중요한 실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자본주의적 사유화(특허)와 협력적 지식기여(공유지식)를 통한 혁신이 서로 충돌되는 지점이었다. 이들은 오스트롬의 이론을 활용하여 커먼즈 운동 일반론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활동가들을 규합하였다. 또한 저명한 사회이론가들이 커먼즈 개념을 정립하고 자본주의 이후를 탐색할 수 있는 사회이론으로 정립해 나갔다.

<유형>

자연, 농업: 농지, 숲, 목초지, 갯벌, 바다, 관개, 종자, 물, 공기 등
지식, 문화: 문화예술, 사진, 도서관, 백과사전, 학술논문 등
사회, 도시: 보건의료, 사회복지, 도시공간, 주거, 사회적경제 등

<규모>

지역: 전통적 공동체들의 자연자원 관리 사례
도시: 도시 커먼즈 사례
글로벌: 인터넷 공동체 사례

이러한 커먼즈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커먼즈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들이 중요하다.

- 1) 커먼즈는 과거의 생각처럼 단순히 자연자원(공유자원)이나 땅(공유지)이 아니다. 커먼즈는 자원 + 공동체 + 사회적 규약을 통칭한다.
- 2) 따라서 커먼즈의 창출,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커먼즈에 물질적 토대를 두고 있는 공동체community이며, 또한 공동체 성원들이 커먼즈를 가꾸어돌봄caring 나가는 데 기여하는 일상적 노동과 실천행위커머닝 commoning이다. 즉, 명사 커먼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사 커머닝이다.

3) 커먼즈는 ‘국가 vs 시장’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서, 제3의 대안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시장 모두 커먼즈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4) 커먼즈에서 중요한 것은 소유방식이 아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방식(커머닝)이 중요하다.²⁾

농업·먹거리 운동과 커먼즈

대표적인 커먼즈 이론가와 운동가들의 글에는 농업과 먹거리 관련 사례들이 가득하다. 농업을 통해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을 가장 대표적인 커먼즈와 커머닝의 사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생협, CSA나 농민시장,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개선 같은 대안먹거리운동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가꾸어가는 커머닝의 사례들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농민들이 농자재 공급관계로 다국적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토종종자 보전과 오픈소스 종자운동³⁾, 농기구·농기계의 DIY(오픈소스 농업기술 Farm hack) 등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 지역공동체자원농업(CSA)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CSA에 참여하는 농장은 사유농장이지만, 이들의 농지를 소비자들과 함께 지역의 커먼즈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3) 종자 역시 생물학적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특허를 통해 기업에 사유화되어 있는 종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료 소프트웨어 보급처럼 농민들이 무료로 사용가능한 종자를 확대해 나가는 운동으로,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개인 육종가 38명, 종자기업 61개가 참여하여 415개 품종을 사용할 수 있다. <https://osseeds.org>

최근 들어 전 세계 도시들에서 확대되고 있는 도시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의 사례들 역시 국가나 시장 어느 한쪽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커먼즈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논리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벨기에의 겐트Ghent시는 도시 커먼즈 운동과 대안먹거리운동, 도시푸드플랜이 서로 교차되고 있는 흥미로운 곳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농업과 먹거리 이슈는 생산 측면과 소비 측면 모두가 커먼즈와 연결되어 있고, 커머닝할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생산자는 농업자원(농지, 물, 숲, 종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 먹거리를 생산할 권리를, 도시 소비자는 좋은 먹거리를 먹을 권리를 갖고 있다. 유엔과 FAO에서 말하는 먹거리권right to food 역시 처음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먹거리에 접근할 권리만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농들의 생산권과 시민들의 소비권 모두를 포괄하면서 확대되었다. 2015년 체결된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협약 역시 도시먹거리정책의 핵심을 시민들의 먹거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본다.

통합적 프레임으로서의 커먼즈

시야를 더 넓혀보면 농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숲과 바다의 문제도 포함된다. 일본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사토야마里山, 마을산, 사토우미里海, 마을바다 운동은 바로 마을이 함께 가꾸어야 할 마을 뒷산과 마을 앞바다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어업의 핵심이라고 본다. 결국엔 바다와 공기, 생명체들이 하

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지구는 하나의 커먼즈이고, 지구에서 나오는 우리의 먹거리 역시 네것 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커먼즈 운동이 대안농업·먹거리 운동 진영에 주는 커다란 힘은, 이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커먼즈를 창출하고 수호하는 다른 분야 활동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도시의 다양한 커먼즈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 커먼즈 운동은 도시공간, 주택과 부동산, 도시환경, 에너지, 교통, 도시농업과 먹거리, 사회적경제, 문화예술 등 각 부문별 활동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라는 커먼즈를 더 확대하고 가꾸어 나가는 커다란 목적과 연결시켜 준다.⁴⁾ 더 나아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 세계의 도시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게 해준다. 커먼즈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상상하게 해주는 사고와 실천의 통합적 프레임이 되고 있다.⁵⁾ 

4) 커먼즈 운동과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공유(共有)라는 한자어를 공유하고 있긴 하나 그 실체는 상당히 다르다.

5) 관련하여 더 읽어볼 책으로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새로운 공유의 시대를 살아가는 공유인을 위한 안내서』(데이비드 볼리어, 갈무리, 2014),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엘리너 오스트롬,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제이 월재스퍼, 검동소, 2013), 『커먼즈 전환과 P2P: 입문서』(P2P재단, 지식공유지대 e-commons, 2018, 인터넷 공개 www.ecommons.or.kr), 『마그나카르타 선언: 모두를 위한 자유 권들과 커먼즈』(피터 라인보우, 갈무리, 2012), 『혁명의 영점: 가사노동, 재생산, 여성주의 투쟁』(실비아 페데리치, 갈무리, 2013 - 특히 농지, 먹거리, 전세계 여성농민운동을 다루는 11장과 커먼즈와 여성주의를 다루는 12장), 2018 커먼즈네트워크 워크숍 <지금, 여기 커먼즈> 자료집(<https://goo.gl/JCqPJD>) 등이 있다.

4대강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지구법의 정신을 담은 녹색 개헌을 생각한다

|| <프레시안> 칼럼 “MB가 겨우 잡범이라니! 4대강 사업과 환경권”(2018년 3월 25일)을 수정한 글임을 밝힙니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 에너지전환, 도시정치, 대중교통, 거버넌스의 민주화 등에 관심을 갖고 글을 쓴다. 『정의로운 전환』,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와 혁명의 순교자』 등을 썼고 『GDP의 정치학』 등을 옮겼다. nuovo90@hanmail.net

지난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다수의 국민들이 기뻐했고 또 안도했다. 이른바 적폐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뿐 아니라, 법이 만인 앞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는 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만인 앞에서 평등한 법이라는 규범이 확립되기까지 아직도 갈 길이 먼 한국이기에 그러한 반응들을 충분히 이해할 만하지만 그러나 만

인 앞에서, 즉 모든 사람 앞에서만 평등한 법으로 족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좀 한가하고 때 이른 질문이 아닌가 할 테지만, 사실 이 질문은 그의 죄값을 제대로 따지는 데에도 중요하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한 내용을 살펴보면 좀 보잘것없이 없다. 형량과는 별도로, 죄목과 혐의의 성격으로 따지자면 그는 여전히 잡범이다.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죄목은 십수 가지에 달하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잡스러운 것들이라는 뜻이다. 특히 그의 범죄들 중 가장 나쁜 범죄라 할 수 있을 4대강 파괴 사업은 구속과 기소 내용에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고 관련된 죄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집권 중에 또는 퇴임 후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고발이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수사가 안 된 것도 아니었으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혐의의 대부분은 4대강 사업의 기획과 실행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건설사 담합, 뇌물수수, 부실공사 아니면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적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었고, 이런 것들은 그를 감옥으로 보낼 수준의 사법적 문제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4대강 사업은 그가 받은 것으로 적시된 뇌물 총액인 100억 원 정도에 비할 수 없는, 2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을 낳았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강물 속과 강변에 살던 수많은 동식물이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생되었으며, 강과 더불어 살던 수많은 농민과 어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직접적 피해자들 외에도 병병하게 차오른 녹조라떼 호수를 보고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간 수많은 국민들이 있었다.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피해

오로지 개인의 고집과 토건 욕망으로 4대강을 황폐화한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잡범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률적 측면의 이유로는 두 가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정치지도자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 자체에 대해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특히 핵발전소 건설, 새만금 간척,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 이른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토건사업에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기 어려운 한국의 환경 관련 법제도와 연관이 있다. 이런 성격의 사업들일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지역공동체에 영향을 끼치고 일단 시행되면 복구하기도 극히 어렵다. 하지만 법률이 정한 바의 형식적인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치고 나면, 엄청난 시위나 극한적인 투쟁을 벌이더라도 되돌리기 어렵고 사후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발전시설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19개 법률의 인허가 과정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서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희생을 낳았고, 개정 또는 폐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법체계상 불합리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조항의 세부적 문제 이전에 법철학 또는 법상식 차원의 문제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재산상의 피해와 결부되는 구체적인 피해자가 없으면 법률적 침해나 위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즉 4대강 사업으로 직접 재산권을 침해받은 지주나 농어민에게는 토지 등 재산이 수용되더라도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지만, 그런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할 수 없으면 어떤 권리도 주장하기 어렵다. 지울스님이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알려진 2004년의 ‘도

룡농 소송'에서 천성산의 도룡농이 법률적 원고가 될 수 없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던 것처럼, 4대강에서 쫓겨난 단양쪽 부쟁이나 모래무지는 피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도룡농 소송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물인 도룡농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 도룡농이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신청인 단체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따라서 신청인이 ‘도룡농’인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자연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송이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미국과 같이 객관소송에 가까운 시민소송제도를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상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사후에 현행법의 근거로 입증가능한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는 새로 입법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적 태도를 갖는 재판부가 다른 무엇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4대강 사업으로 수사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고발하는 뉴스에 많은 비난 댓글이 달린다 하더라도, 그런 부작용들로 인해 형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뇌물 액수나 횡령 건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땅과 하천, 동식물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흔을 남긴 사업 자체는 그대로 합법적인 것으로 남을 것이다.

지금 ‘녹색 개헌’이 필요한 이유

남북미 비핵화 정세의 급진전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개헌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변화한 사회적 환경과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은 무척 중요하다. 지난해부터 개헌안에 권력구조 변경뿐 아니라 노동권, 환경권 같은 기본권을 심화해서 담기 위한 논의와 제안들이 나왔다. 그런데 이 기회에 개헌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즉 “만인 앞에서만 평등”할 뿐만 아니라 “만물 앞에서도 평등한” 헌법과 법률을 이야기해 본다면 어떨까?

그러한 논의와 사례들은 이미 있다. 2009년에 작고한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는, 모든 권리는 실은 인류에게 부여된 것이고 다른 형태의 비인간적 존재들은 인간에게 도움이 될 때만 고려된다는 문제를 숙고하며 ‘지구법Earth jurisprudence’을 주창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생태계의 순환이 중심이 되는 원리 또는 가치를 법체계로 수용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강금실 변호사 등이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지구법의 문제의식은 21세기에 와서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 미국 뉴햄프셔주의 반스테드 마을은 “자연 공동체와 생태계는 반스테드 마을 안에서 존재하고 번영할 수 있는, 빼앗을 수 없는 근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생태계는 습지, 개천, 강, 대수층, 기타 물 시스템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유사한 결의들이 채택되었다. 이런 조례들은 자연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고, 인간의 재산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008년에 제정된 에콰도르 헌법은 지구법의 아이디어를 더 큰 범위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담아낸 대표적인 ‘환경헌법’으로 평가

받는다. 이 헌법의 7장은 자연의 권리에 할애되어 있는데, 자연 또는 안데스 원주민들이 지구 또는 대지를 일컫는 ‘파차마마Pachamama’는 그 존재에 대해 포괄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 공동체, 인민과 국가는 자연의 권리를 위해 공권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자연은 복원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복원은 영향받은 자연 생태계에 의존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대하여 국가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보상할 의무와 별개의 것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종의 절멸, 생태계의 파괴 및 자연적 순환의 불가역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하여 예방하고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었다.

이런 지구법의 개념과 내용이 우리 헌법에 있었다면 4대강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 위헌임을 지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복원(재자연화)을 미루고 있는 것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토건 사업의 입안 자체가 더욱 신중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고, 우리의 틀거리가 너무 협소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개헌안에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생명권과 환경권이 명시되었다고 알려졌다. 공해 문제에 대처하는 것으로서의 환경권 개념에서 국민의 기본권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개헌안이 ‘녹색 개헌’이라 평가될 정도로 전향적인 것인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개헌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고, 헌법에서의 변화 또는 개헌 과정에서의 논의들 모두가 이후 환경 관련 법률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이라도 더욱 과감한 구상과 제안은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과 같은 생태계 파괴를 헌법과 법률로 막을 수 없었던 일은 역사에 마지막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삶의 정치’를 찾아서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 프로젝트

백연재

호주국립대학 아시아태평양지역학부(College of Asia and the Pacific,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박사과정. 동아시아의 농촌공동체 운동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
yonjae.paik@gmail.com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

저는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호주 연구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동아시아의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Informal Life Politics in East Asia)’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¹⁾ 일반적으로 정치라고 하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정치를 떠올리고, 사회 변화를 위한 정치적 행동에 있어 정부와 국가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정작 현실에서는 제도권 정치가 보

1)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Informal Life Politics in the Remaking of Northeast Asia: From Cold War to Post-Cold War’이며 호주 연구위원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rvivalpolitics.org>

통 사람들과 그들의 삶의 문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정치에 대한 이러한 우려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분열은 현재 국가라는 공동체가 과연 구성원의 복지와 안전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합니다. 국가정치를 통해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꼭 국가정치를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 - 우리말로로는 추상적이거나 ‘삶의 정치’라고 하겠습니다-를 상정하고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정치’의 활동은 저희 프로젝트에서 붙인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라는 말처럼 새롭고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상관없이 무수히 다양한 형태로 함께 협력해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모두 정치적 활동이라 부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는 나날이 그 영향력이 커지는 국가정치가 사람들의 삶의 문제와 점점 멀어지거나 오히려 그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들을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성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비료가 도입되기 이전의 전통 농업으로서의 유기농업을 사회운동이었다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나 국가가 주도한 새마을운동과 녹색혁명 이후 화학농업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유기농업은 하나의 사회운동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총 6명의 연구자가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고 이렇게 동아시아 6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정치의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보통 외국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할 때

정부의 활동과 정책, 그리고 이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 여러 나라에서 공동체 단위의 연구를 동시에 하는 작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주요 연구 프로젝트가 된 경우는 꽤 예외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같이 연구를 하게 된 까닭은, 냉전시대 이후 지속되는 군사적 대립과 급격한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자율성은 국가 정치와 시장경제의 영향력에 의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비례하여 사람들이 공동체적 협력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이 국가들 간 공통점이 많을 뿐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분단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가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이 각 나라의 국가정치에서 공동체 공간을 제약하고 삶의 문제를 경시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의 발생과 처리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 자세는 국가정치가 점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삶의 정치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도록 하였습니다.²⁾

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주 및 동아시아 지역의 학자와 활동가를 초청하여 세 번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물은 다음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Morris-Suzuki, Tessa and Eun Jeong Soh, Eds. 『New Worlds from Below: Informal Life Politics and Grassroots Action in Twenty-first Century Northeast Asia』, ANU Press, 2017. (위 책은 ANU Pres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press.anu.edu.au/publications/series/asian-studies-series/new-worlds-below> "https://press.anu.edu.au/publications/series/asian-studies-series/new-worlds-below") 두 번째는 Cliff, Tom, Morris-Suzuki, Tessa and Wei, Shuge. Eds. 『The Living Politics of Self-Help Movements in East Asia』, Palgrave Macmillan, 2018.입니다.

이러한 국가와 공동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의 형태와 공동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저희 연구의 관점과 가장 가까운 것은 가라타니 고진(棚谷行人)이 제시한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³⁾ 가라타니 고진에 의하면 하나의 사회(사회구성체)에는 그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지배적 ‘교환양식’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원시적 씨족공동체는 증여-답례라는 호수적(호수적 互惠的) 교환양식이 지배적이 되고, 국민국가라는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재분배가, 그리고 시장경제에서는 화폐를 통한 상품거래가 주된 교환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각각의 교환양식은 그것을 정당화하는 가치체계에 의해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국민국가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원시적 공동체의 호수적 인간관계를 제약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의한 재분배와 시장을 통한 상품 거래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반대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으로 인한 (또는 국가와 시장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공동체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종래의 호수성에 기반한 인간관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환양식 및 가치체계의 복원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호수적 인간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원시적 공동체로의 회귀가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겠습니다만)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작동하는 교환양식과 가치체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환양식과 가치체계를 갖춘 공동체여야 한다는 점에서 가라타니는 이것을 아직 출현하지 않은 미지의 사회형태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르자고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다루고 있는 공동체 사례들이 대부분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3) 가라타니 고진.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 역, 도서출판b, 2007.

시장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안적 가치체계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가라타니의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라타니 자신이 이후 ‘어소시에이션 운동’을 통해서 세계의 나라들이 국민국가들을 버리고 동시에 ‘세계공화국’을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가라타니가 생각했던 어소시에이션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거대 체제였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 프로젝트는 가라타니가 주장한 호수적 인간관계는 소규모 공동체를 넘어서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 안에 존재하는 소규모 공동체 운동들과 그것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향과 ‘인포멀 라이프 폴리틱스’의 개념이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의되었던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의 일부였던 만큼 연구자별로 진행한 개별 사례들이 위에 설명된 개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않습니다.

국가별 사례를 통해 본 삶의 정치

일본

일본 사례는 프로젝트 책임자인 테사 모리스-스즈끼 Tessa Morris-Suzuki 교수께서 맡고 있습니다. 모리스-스즈끼 교수는 일본 근대사 전문가로 일본 경제사로부터 일본 북방 아이누족 문제, 재일교포 북



후쿠시마 토와 지역의 시민방사능측정소 내부

송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다수의 저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방사능 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가 막힌 후쿠시마현 토와(東和) 지역의 농부들 이야기입니다. 사고

후 일본 정부는 정확한 피해 조사보다는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더 집중하였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든 살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사능 안전 기준치는 지나치게 높아서 오히려 주민과 소비자들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한때 유기농업으로 유명했던 이 지역의 농산물은 판로가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 장비를 구입하여 지역 내 토양 방사능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생산 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부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자체 기준을 통과한 농산물만 판매하도록 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치 이하의 미량이긴 하더라도 어쨌든 방사능에 오염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피해 지역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통한 이런 노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가노현의 모치즈키(望月) 지역의 사례로 1980년대 이후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자급자족적 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이러한 운

동의 뿌리에 1910~20년대 일본 문단의 자유민권운동 모임인 ‘흰 자작나무 파(白樺派, 시라카바 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 이 지역에서 평화교육, 향토예술, 지역병원 운동 등을 펼쳐온 전통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 사례로는 인류학자인 톰 클리프Tom Cliff 박사가 중국 농촌지역의 마을 기금을 연구하였습니다. 마을 기금은 노인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되거나 젊은이들의 학자금, 응급 환자의 의료비 등으로 쓰이는데, 부족한 국가복지를 대신하는 한편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는 물질적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 등록을 하고 정부 규제를 따르라는 지



안휘성 비산 마을 풍경

방 정부와 마을이 자율성을 유지한 채로 계속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는 안휘성에 있는 비산碧山 마을이라는 곳인데, 오우닝歐寧이라는 작가이자 활동가가 주도하고 있는 자립자치 이상농촌 운동입니다. 중국에서 날로 심해지는 도시화를 되돌리고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오우닝은 2011년부터 비산 공동체를 통해 도시민이 농촌에 돌아와 정착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비산 공동체가 추구하는 ‘자립자치’의 정치적 의미를 문제 삼은 중국 정부가 2017년 2월에 오우닝을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함과 동시에 수도와 전력을 차단하면서 이 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대만

대만의 사례는 역사학자인 웨이 슈거魏舒歌 박사가 공랴오貢寮 지역 주민들의 핵발전소 반대 운동이 기존의 대정부 시위와 다르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연구로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지역 내 유기농업 운동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내의 농촌에서 유기농업과 생태관광을 연계하여 고령화되어가는 농촌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사례인데,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가치관이 생태계와 인간의 공존, 농민과 소비자 간의 협력 등 새로운 가치관으로 교체되는 것은 ‘모심과 살림’ 독자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일 듯합니다.



대만 공랴오 지역의 산비탈 논

몽고

몽고 사례는 우짐친Ujimqin이라는 중국 내 내몽고 지역에서 공장 폐수로 인한 초원의 하천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을 사회학을 전공한 우치랄트 박사가 연구하였습니다. 초원의 하천과 지하수 오염은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개발을 위해 공장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목축을 생업으로 해온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우치랄트 박사는 일본의 시가滋賀 현립대학 연구팀과 함께 주민들에게 수질오염 검사기구를 보급하여 주민들이 직접 하천과 지하수 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한 곳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중국 내 환경오염은 지방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라 주민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치랄트 박사는 문화혁명 하방운동 시절 이 지역으로



몽고 초원의 오염된 연못과 그 가운데 양의 사체를 보여주는 주민

파견되었던 당시 지식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NGO와 함께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외부 지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부의 시선을 의식한 지방정부가 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주민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북한의 사례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인데, 그 이유는 본 프로젝트에서 찾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활동을 외국인이 관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2년 동안 프로젝트를 맡았던 소은정 박사의 경우,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탈북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

로 연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정치학을 전공한 소은정 박사는 북한의 장마당, 폐기발 등과 같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합법도 불법도 아닌 비법적 경제활동 속에서 주민들이 종래 배급경제 시절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러한 비법적 활동을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습니다. 후반부 2년을 맡은 로버트 윈스턴리-체스터Robert Winstanley-Chesters 박사의 경우 영국 국적의 지리학자로, 압록강 하구 신도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 활동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어렵게 현장 조사를 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협동조합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 등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유기농업 운동의 역사와 공동체 운동

마지막으로 제가 맡은 한국 유기농업 운동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유기농업 운동 연구는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대안운동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대안교육이나 대안에너지 등 공동체 중심의 운동들에서 유기농업을 통해 지역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모습을 보면서, 유기농업 자체에 공동체 운동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침 호주 캔버라에 연구원으로 와 계시던 정만철 박사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환경농업단체 연합회 최동근 사무총장께 소개받아 정농회, 가톨릭농민회, 그리고 한살림에서 초창기 유기농업 운동을 하신 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또 미에현에 있는 일본 애농회/애농학교와 북해도 낙농학원대학, 고베에 있는 청년학생센터 등을 방문하여 한일간 유기농업교류에 대한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970년대 녹색혁명이 절정에 달하던 시절에 유기농업 운동을 시작한 정농회의 초창기 역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1980년대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고통받던 농민과 소위 식탁공해에 위협받던 도시민들 사이에 도-농공동체를 조직해서 생명운동을 시작한 한살림운동에 대한 것인데, 특히 유기농업 운동에 흐르고 있는 공동체 정신의 뿌리와 그것의 계승, 실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정농회와 한살림운동에는 각각 그 뿌리가 되는 농촌운동의 역사가 있습니다. 정농회의 경우 일제시대인 1920~30년대 개신교와 천도교 등 덴마크 농촌운동을 모델로 농민 교육 및 협동조합 등을 통해 농촌근대화를 이루고자 했던 이상촌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 중 한 곳이 민족주의 교육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배출한 평안도 정주의 오산학교인데, 정농회와 초창기부터 밀접하게 협력해오고 있는 풀무학교는 바로 그러한 오산학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입니다. 풀무학교 설립자인 이찬갑 선생께서는 오산학교 설립자이자 종증조부인 이승훈 선생을 도와 오산학교에서 협동조합 및 청년회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이후 오산학교의 정신을 잇기 위해 주옥로 선생 및 지역 분들과 함께 1958년 흥동에 세운 농업학교가 풀무학교입니다. 풀무학교에서도 평민교육과 협동조합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많은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지역에서 묵묵히 노력한 끝에 오늘날 흥동은 유기농업과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한국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충남 홍성 홍동마을의 오리농업 (사진 출처: 주형로 정농회장)

다. 정농회 창립을 주도하고 양주의 풀무원 공동체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한 원경선 선생도 풀무학교 분들과 함께 협력하며 이러한 이상을 공유하였고, 한국 내의 이런 운동은 다시 애농회를 통해 일본의 유기농업 운동과 연결되어 양 단체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1995년부터 정농회와 애농회가 지속해오고 있는 교류회가 단순히 유기농업을 넘어 평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교류회 장소가 양국 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히로시마, 제주도, 오키나와, 후쿠시마 같은 곳이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경쟁적이고 대립적인 국가 간 관계를 자율적인 농촌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살림운동의 뿌리에 1960년대 이후 가톨릭 원주교구에서 지학순 주교님과 장일순 선생께서 여러 활동가분들과 함께 힘을 쏟았던 농촌개발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1994년 유기농실천 전국협의회 모임에 모인 유기농업 실천가들

일 것입니다.⁴⁾ 지금도 한살림에 남아 있는 공동체 운동의 모습은 특히 사단법인이 되기 이전의 초창기 한살림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1970년대 가톨릭농민회 활동과 정농회의 유기농업 운동이 국가가 주도하는 중산체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1980년대 한살림의 도농공동체 운동은 농산물이 오로지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소비자와 농민이 가격을 통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농공동체 안에서 시장질서를 극복하고 공생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 다. 단순히 상품으로서의 먹거리가 아닌 생명으로서의 먹거리를 나눔으로써 한살림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파는 생협운동을 넘어서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신뢰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

4) 한살림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1970년대 원주교구의 신협, 협동조합, 농민회 활동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계신 김소남 박사께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 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렇게 공동체를 통한 사람 사이 관계의 변화야말로 한살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업화와 도시화 위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남북분단 상황은 정치적·경제적으로 중앙집중화되고 상대적으로 지역과 공동체의 자율성은 제한 받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유기농업 운동과 그 배경을 이루는 농촌공동체 운동의 역사를 통해 제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농촌 근대화 와 그에 이어지는 상업화에 대응하여 공동체를 통해 농업과 농민이 주체가 되는 자율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삶의 정치의 흐름입니다. 이런 운동의 중요성은 국가정치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변화를 가져오는 조직운동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국가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물론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우리가 공동체 수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조차 국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자칫 국가정치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은 국가정치의 공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 정치의 공간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관찰글쓰기를 하는 이유

유영희

심리학과 조선시대 유학 사상을 공부했고 고려대, 안양대, 경인교대 등에서 동양사상과 글쓰기를 강의했다. 2018년 현재 팟캐스트 “질문하는 인문학”을 진행하고 있고, 동작 50+센터 등 사회기관에서 <질문하는 인문학>과 <삶을 가꾸는 관찰 글쓰기>를 강의하고 있다. 지난 5월 『나를 발견하는 관찰 글쓰기』를 펴냈다.

formago@hanmail.net

글을 쓰고 싶은 이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글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대개 ‘못 쓰기 때문’이라고 한다. ‘못 쓰기 때문’에 싫어한다면, 그 사람이 글을 잘 쓰게 되면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글쓰기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당초 글은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하지만,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진화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감정과 생각을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쓴다. 글을 못 쓰는 사람에게도 자기를 표현하고 남과 소통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런 사람들도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글을 ‘못 쓴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쓰는 행위 자체가 서툴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장의 꼴을 잘 갖추지 못한다든가 글의 구성이 허술하다든가 하는 것은 쓰는 행위 자체가 서툰 경우이다. 그러나 나는 글을 잘 못 써요 할 때의 의미는 이보다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경우가 더 많다. 문장의 꼴이나 문단의 짜임새 걱정은 그 다음 일이다. 그래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써야 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1차 과제이다.

여기서 무엇을 써야 할지도 모르면서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욕구를 해결할 방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도 쓰고 싶은 글 쓰고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

글을 쓸 때는 대상이 있다. 대상에 대한 관심이 나를 글 쓰는 길로 이끈다. 대상은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며,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일 수도 있고, 생명이 없는 사물일 수도 있다.

보통 글을 쓴다고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각이나 감정을 갖는다면 분명히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있겠지만, 글쓰기가 대상을 쓰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글쓰기가 내 생각이나 감정을 풀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글쓰기가 어려워진다.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막막하다. 그러나 대상에 대해 쓴다고 하면 막막함은 많이 사라진다.

그런데 대상에 대해 어떻게 써야 할지 하는 문제가 다시 등장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을 묘사하라는 것이다. 묘사하기란 사진 찍듯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의문, 글이란 나를 표현하는 것인데 왜 대상을 드러내라고 하는가?

따지고 보면, 같은 대상을 사진으로 찍는다 해도 사진의 느낌이 다르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더 달라진다. 글로 쓴다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묘사하기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주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소통을 위해서 글을 쓴다는 점이다. 나를 표현하는 것도 소통의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나와 소통할 수도 있고, 다른 이와 소통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주관성을 전면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대상을 묘사하는 것이 소통을 위해 더 효과적이다.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묘사하는 글쓰기의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2017년에 만난 수십 명의 수강생들은, 대상을 묘사하는 글을 쓰다 보면, 대상과 가까워진다고 말한다. 관찰하고 글을 쓰면서 뜻밖의 효과를 만나는데, 그것은 대상에 대한 애정이다.

어느 수강생은 오래 살던 집을 떠나 이사 온 낯선 집, 새 집에 적응하지 못해 먼저 살던 집을 그리워하던 순간, 관찰 글쓰기를 만나면서 새 집에 대한 애정이 생겨났다고 한다.

현관을 열면 미끄러질 듯 반짝이는 바닥 위로 가지런히 연분홍색 구두와 흰색 슬리퍼가 놓여있고 입구를 들어오면서 중문을 열면 붉은색 파벽돌에 우리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어서 ‘여기가 우리 가족의 공간이다’라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듯하다.

모든 공간이 모델하우스처럼 보기 좋게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치 생활하는 공간이 아닌 구경만 하는 집처럼 모든 것이 낯선 이곳에서 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곳은 주방 옆 작은 베란다 공간이다.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조그마한 흰색 테이블과 하얀 플라스틱 의자도 놓아두었고 한쪽 벽면에는 여인초라는 초록 잎사귀들이 시원하게 뻗은 식물이 네모난 회색 화분에 잘 자리 잡고 있다.

또 맞은편 벽에는 작은 선반을 세 개나 달아서 첫 번째 칸에는 붉은 장미꽃 화분을 까만 플라스틱 담긴 그대로 두었고, 두 번째 칸에는 시집 몇 권과 소설책 두어 권을, 세 번째 선반에는 집들이 선물로 받은 와인 서너 병과 소주 두 병 그리고 장미향이 나는 향초를 두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원의 초록 나무들과 식물들이 눈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한다.

- <나의 공간>, 최○○

이렇게 베란다라는 작은 공간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내 생각을 쓰려고 할 때는 ‘우리 집 베란다가 보면 나는 아직도 낯선 기분이 든다’ 이 정도로 끝나고 할 말이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조차도 생각이 안 나서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찰 글쓰기는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단박에 해결해준다.

대상 관찰과 자기 표현

같은 대상을 본다고 해서 그들이 보는 것이 같은 사실은 아니다. 또 같은 사실을 본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같은 느낌을 갖는 것도 아니다.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는 것, 그 다름이 바로 자신의 표현이다. 평소 생각하는 패턴, 가치관 등이 대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숨길 수 없이 빠져 나온다.



65,8 X 51,5 cm. Apprentice Workmen Carrying Water. 1866. oil on canvas.

Tretyakov Gallery, Moscow, RussiaTroika. oil on canvas.

출처: 바실리 페로프의 작품세계 Ⅱ [1851~1869]- Vasily Grigoryevich Perov 작성자 ohyh45

위 그림은 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 사실주의 화가 바실리 페로프의 “물을 나르는 견습공들”이라는 작품이다. 수강생들에게 그림의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이 그림을 함께 관찰하였다. 대부분 아이들

이 고단해보인다고 했지만, 짓궂고 장난스럽다고 보는 수강생도 있었다. 같은 그림을 보아도 사실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아이들이 고단해보인다고 하는 수강생 사이에서도 생각이 달랐다. 절망적으로 보는 이도 있고, 희망을 보는 이도 있었다. 수레를 미는 시간이 새벽인지 저녁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렇게 같은 대상을 보아도 무엇을 보았는지 다를 수 있다.

<“트로이카” 명화를 보고> (조○○)에서는 “앞에서는 3명의 아이들이 수레를 끌고, 뒤에서는 지칠 대로 지친 아버지가 수레를 밀고 있다. 매서운 겨울 날씨와는 거리가 먼 얇은 옷차림과 기진맥진한 모습은 삶의 고단함이 서려있다. 아이들과 앞에서 함께 가는 강아지만 생동감이 있다.”고 한다. <수레를 끄는 세 남매> (김○○)에서는 “언덕길을 오르는 수레를 미는 중년 남성의 팔뚝에서 수레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앞에서 끄는 세 남매의 표정은 밀어주는 힘이 대단해서인지 오히려 가볍게 느껴진다.”고 한다.

이에 비해, 아이들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본 글도 있다. <트로이카> (김○○)에서는 “그림 속 삼 남매는 역설적이게도 매우 행복해 보이고 사랑이 그림에 묻어나 보였다. 왜냐하면 순간의 육체적 고통은 힘들어도 지나가 먼 훗날 기억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이끌어 주었던 사랑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고 한다.

이렇게 세 글이 같은 작품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런 차이는 글을 혼자 썼다면 발견하기 어렵다. 같이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글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서로 글을 나누는 경험은 같이 쓰기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한 대상을 보았을 때 자기가 본 어떤 것이 바로 자신의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 프레임에 따라 대상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작품을 보는 관점이 곧바로 글쓴이의 평소 생각 패턴이나 가치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자료로 삼는 것이 좋다.

자기 이해를 위한 감각 관찰 글쓰기

좀 더 직접적으로 자신을 알려면 자기를 관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자신을 관찰할 때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 막막하다. 자기를 관찰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각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느끼는 촉각이나 미각, 청각 등의 감각을 관찰하면 좋다. 우리가 대상을 보고 묘사할 때는 시각을 사용한다. 시각은 외부로 향한 감각이다. 반면, 촉각이나 미각, 청각은 자신을 향한 감각이다. 시각에 비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직접적이다. 아래 감각을 관찰한 글 두 편을 보면, 감각 관찰이 자신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나는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왼손으로 턱을 괴었다. 새끼손가락에 보드라운 낫볼 끝이 걸쳐졌다. 낫볼 끝 피어싱이 아직도 바깥바람만큼 선드렸지만 손바닥에선 열기가 올라왔다. 손바닥이 한쪽 목덜미를 완전히 감싸 쥐자 손목이 뒤쪽으로 꺾였다. 뜨듯해진 목덜미에서 살짝 잔땀이 났다. 눈이 스르르 감졌다. 손목 끝에 남아있던 힘이 팔을 타고 내려가 어깨 위쪽으로 올라갔다. 왼쪽 팔 전체가 조금씩 빠근해지고 손끝이 저려왔다. 손바닥으로 받친 턱은 서서히 아래로 미끄러졌다. 볼살이 조글조글해지고 턱살이 팽팽해졌다.

턱을 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개가 조금씩 왼쪽으로 기울었다. 낫

날에 걸친 안경도 고개를 따라 조금 기울었다. 답답한 마음에 오른손으로 안경을 살짝 들었다 놓으니 몸 전체가 기운 것이 느껴졌다. 허리는 대각선으로 휘어지고 양쪽 어깨는 굽어졌으며 어깨 중심은 왼쪽으로 옮겨가 있었다. 갑자기 자세가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턱 아래 놓인 손을 빼내고 자세를 고쳐 앉았다.

가끔은 그렇게 마음도 턱을 괴었나 보다. 적당히 뜨듯한 손바닥이면 그저 턱을 괴고 눈을 감았나 보다. 그럴수록 마음의 중심은 기울어져 갔지만 나는 자세를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흰 허리와 빠른 어깨를 뒤로 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자꾸만 기울어져 갔다. 그러다 툭 고개가 떨어지고 나서야 턱 아래 놓은 손을 빼내고 귀찮은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는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이었다. 어딘가 없어진 채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었다.

- <턱을 괴는 시간>, 원○○

이 글은 책상에서 턱을 받치고 있는 현재 모습을 묘사하면서 평소 마음의 습관을 확인했다. 촉각뿐 아니라 청각이나 미각을 관찰해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눈을 감고 키세스 초콜릿을 하나 집어 들었다. 먼저 키세스 겉 포장지를 손으로 만진다. 꼬리처럼 달린 미끄러운 작은 종이는 떼어낸다. 포장한 종이를 벗길 때 작은 금속이 부딪치는 미세한 소리가 난다. 금속같이 만져지는 종이는 얇은 은박지 같다. (중략)

반쯤 녹자 쪽쪽 빨게 된다. 엄마젖을 빨던 다섯 살 때가 떠오른다. 다섯 살 때까지 젖꼭지를 빨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매달렸던 그 시절이. (엄마는 나를 41살에 낳았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젖은 거의 나오지 않고 쪼그라들었지만 심심하면 찾는 장난감과 같았다. 소꿉놀이는 해가지면 팽개치지만 엄마젖은 질리지 않는 따뜻한 장난감이었다.(후략)

- <키세스 초콜릿을 먹으며 떠오른 기억들>, 박○○

위 글을 쓴 수강생은 “미각, 청각으로 쓰는 글쓰기에서 내가 자세히 알지 못했던 ‘나’와 ‘내 주변’을 만났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자신의 감각을 관찰하는 글쓰기는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유는 이해에서 온다

마지막으로 관찰 글쓰기의 효과는, 치유의 힘을 갖는다는 것이다. 관찰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한다. 관찰력과 집중력은 비례한다. 집중하는 과정에서 먼저 치유의 효과가 일어난다. 정신이 한곳으로 모아지면서 일종의 몰입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몰입의 효과는 명상에서도 말하고 있다. 사마타 명상이나 위빠사나 명상에서 강조하는 것은 집중을 통한 몰입이다.¹⁾

다른 방면의 치유 효과는 대상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치유는 위로나 공감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온다. 어찌면 이해가 치유에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이해는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깊이 관찰하면 대상을 바르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대상과 불화는 부정확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관찰은 인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²⁾

관찰을 하면,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대상을 이해하게 된다.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애정이 생긴다. 자신을 관찰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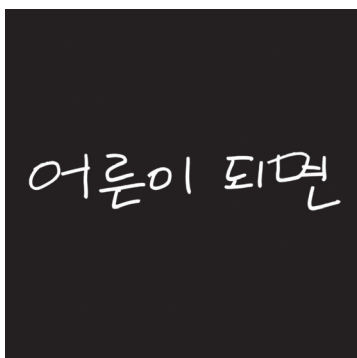
1) 전현수, 『정신과 의사의 체험으로 보는 사마타와 위빠사나』, 불광출판사, 2015

2) 물론 한계는 있다. 인간의 안구에는 시세포가 없는 맹점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상이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가 인간을 ‘눈먼 시계공’이라고 비유한다. 아무리 관찰한다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관찰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을 관찰하면 다른 사람, 생명을 가진 다른 존재를 관찰하면 그 존재를, 생명이 없는 존재라면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된다. 관찰 글쓰기가 치유의 힘을 갖게 되는 원리다.

관찰 글쓰기를 하다 보면, 글을 못 쓰는 사람이 글을 쓰게 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대상과 가까워진다. 

밀어내지도 밀려나지도 않는 삶을 꿈꾸며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장혜영, 2018.

김유미

사진을 공부하다가 장애인이동권 투쟁을 접하면서, 사는 게 많이 바뀌었다. 노들장애인
야학에서 상근자로 일하며 온갖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 slowdada@gmail.com

“만약 누군가가 13살의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딴 산꼭대기의 건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야 해. 그게

네 가족들의 생각이고 너에게 거절할 권리는 없어. 이제 다 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야.”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은 감독이자 언니인 장혜영의 목소리로 진행된다. 감독의 한 살 어린 동생인 장혜정은 열세 살이 되던 해에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졌다. 가족과 동떨어진 공간에서 낯모르는 이들과 만나 18년을 함께 지냈다. 동생과 떨어져 살면서 어른이 된 감독은, 뒤늦게 어린 동생의 마음이 어땠을지 들여다본다. 언니는 동생 스스로 그 삶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동생을 동생이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와 함께 살아보기로 결심한다. <어른이 되면>은 ‘생각많은 둘째언니’¹⁾ 혜영이 동생 혜정을 사회로 데리고 나와 함께 생활한 6개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상은 감독이 동생과 함께 살기 위해 구한 방 두 개짜리 집으로 이사하는 날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시설에 있을 때 혜정이는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면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라고 내게 물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어른이 되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들었을 말이다. 나 역시 주변 어른들로부터 좀 더 크고 나서 어른이 되면 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 하지만 시설에 살던 혜정은 서른이 될 때까지도 ‘어른이 되면 할 수 있어?’라는 물음 속에 붙들려 살았다. 어른의 나이가 되었지만 어른이 아닌,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시설이라는 아주 특별한 시공간에 머무른 탓이다.

1) 감독 장혜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명.

함께 살기 위해 서로의 시간이 필요하다

서른이 되어 다시 사회로 돌아온 혜정은 언니가 마련한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간다. 언니의 도움을 받아 혼자서 깨끗하게 세수하는 법을 익히고, 스테이크를 스스로 칼로 썰어서 먹는 법을 연습한다. 언니와 함께 마트에 가고,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언니의 친구들을 내 친구로 만들어가며 자신의 자리를 조금씩 넓혀나간다. 혜영은 동생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 자원을 찾고 시도해본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찾아가 전문가와 상담하고, 지역 사회 안에 동생이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다닌다. 동생이 자신이 없는 공간에서도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지만, 동생을 받아주는 공간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어려웠다. 동생이 시설에서 나오기 전부터 점 찍어두었던 프로그램을 확인해보니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살아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는 식으로, 바로 되는 일이 없었다.

“혜정이가 시설로 보내지기 전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늘 혜정과 함께 있었다. 혜정의 곁에는 늘 누군가가 필요했기에 혜정의 언니가 된다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었다. 혜정이는 온전히 우리 가족의 책임이었고 우리 가족의 뒤에는 누구도 없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왜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되어야 할까. 혜정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는 나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혜정이 언니의 시간이다. 혜정이를 시설에 보낸 대가로 얻어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진짜

나의 시간을 나는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다시 혜정이
언니의 시간을 살기로 했다.”

일상을 구성하는 일의 중요함에 대하여

나는 혜정과 ‘혜정이 언니’ 혜영을 내가 일하는 노들장애인야학에서 만났다. 언니와 함께 야학에 온 혜정은 며칠간 야학 수업을 참관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은 장애를 이유로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다. 1993년에 개교한 노들야학은 주경야독하는 기존의 야학들과 다른 특성이 있다. 학생들의 대부분이 낮에도 밤에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점인데, 평생을 사는 동안 직장 문턱은커녕 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집 안에서 삼사십년을 살아온 사람부터 혜정처럼 20년, 30년을 시설에서 살다 뒤늦게 사회로 나온 이들이 모인 공간이 노들야학이다. 낮과 밤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졸업하는 학생이 매우 드물다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야학에서 처음으로 글자를 배워보고, 처음으로 술을 마셔보고, 처음으로 여행을 가봤다는, 그 처음에 관한 감동과 좌충우돌들이 노들야학 20년 역사를 기록한 <노란들판의 꿈>이라는 책 속에 잘 기록돼있다.

장애인운동에서는 혜정처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사회로, 동네로 복귀하는 과정을 ‘탈시설’이라고 부른다. 이번 학기 노들야학의 재학생은 70명쯤 되는데, 이 중 1/3 정도는 탈시설한 사람들이다. 나는 탈시설의 과정에서 중요한 대목이 일상을 구성하는 일이라고

본다. 반복적인 거부와 오랜 대기의 경험이 반복될 때, 오라는 곳이 없고 가야 할 곳을 모르겠는 막막한 일상이 펼쳐질 때, 나는 야학이 그 막막한 시간을 버티는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그리고 이런 거점들이 다양하고 풍부해질 때, 나는 중증장애인이 갇히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본다. 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갈 곳이 필요하다. 그것이 꼭 장애인만을 위한 기관일 필요는 없다. 장벽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하다. 나는 노들야학을 통해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배웠다.

“보통 ‘일상’이라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 속의 그렇고 그런 날들 중 하루’를 뜻하지만 노들에서 말하는 일상은 그 의미가 전혀 달랐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이란 가져본 적 없는 어떤 하루들, 그러니까 그들의 빼앗긴 인생이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외출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것은 제 몸을 던져 싸워야 겨우 얻을까 말까한 결코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었다. 노들의 가장 중요한 투쟁은 바로 이 일상을 만들고 지키는 일이었다. 이 작고 사소한 일상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나간다.” - 홍은전, <노란들판의 꿈>

좋은 시설이 아니라 탈시설이어야 한다

장애인운동에서 ‘탈시설’은 오래 사용되어온 개념이 아니다. 탈시설이 운동으로 조직된 것은 2000년대 중후반 무렵이다. 이전까지는 한두 개인의 탈출에 가까운 모험적 실천이 있어왔다면,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탈시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건은 2009년 경기도 김포에 있던 장애인거주시설인 석암베데스다 요양원의 생활인 8명이 집단 퇴소를 한 일이다. 살 집이 없었던 이들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집을 풀었다. 짧게는 6년, 길게는 28년 동안 그 요양원에서 줄곧 생활했던 이들인데, 퇴소 당일 이들의 짐은 옷과 이불을 싼 보따리 몇 개씩이 전부였다. 이들은 그 상태로 공원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탈시설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두 달 동안 거의 매일같이 서울시장을 쫓아다니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접거하고 농성한 끝에, 서울시로부터 장애인자립생활가정을 도입하고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게 된다.

누군가는 의아할 것이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생활하는 당사자들이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면 되지 않는가.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지역사회 환경이 미비하고 위험한데, 시설에서 지내는 편이 당사자에게 더 낫지 않은가. 탈시설 운동은 이런 질문들 속에서 논쟁에 휩싸일 때가 잦다. 하지만 내가 만난 당사자들의 입장은 시종일관 자명했다. 시설에 있으면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삶’의 연속이고, 집단수용소 생활과 다르지 않은 삶이며,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감금이 이뤄지고 있다고,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그 질문을 되돌려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 마”라고 일침을 놓는다. 이는 2013년 출판된 탈시설 장애인들의 인터뷰를 담은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장혜영은 올해 초 한 방송사가 마련한 공개강연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촌촌한 격리의 프랙탈로 짜여 있다’고 이야기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나와 다른 것,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 약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분리해 어딘가로 격리시키는 것을 보고, 겪는다. 내가 격리시키기도 했다가 격리되기도 하는 경험들을 오가며 격리를 삶의 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철학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 사회를 살고 있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동생이 시설로 보내질 때에도, 아 그런 삶도 있는 거지 뭐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격리 이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늘 혜정이를 돌봐야 했던 어린 시절 나는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하지만 어느 날 혜정이가 시설로 사라졌을 때 내게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그저 혜정이의 빈자리가 마음속에 동그랗게 남아있었다. 나는 혜정이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래서 일부러 멀리 떠나보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먼 곳에서도 혜정이의 빈자리는 늘 내 곁에 있었다.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나의 삶 역시 내 것이 아님을 나는 아주 멀리 가서야 알게 되었다.” - <어른이 되면> 장혜영의 나레이션

격리의 사회철학에 반기를 들자

나는 시설이라는 공간이 우리 사회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시설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사회가 격리시킨 것이 인간의 어떤 면인지 혹은 어떤 인간인지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장애의 영역만이 아니다. 삶의 과정 중 많은 부

분이 추방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점점 그 대상이 확장돼 가는 느낌을 받는다. 최근 어느 기사에서 노인들이 사망 전 평균 22개월을 요양원에서 보낸다는 통계를 보았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의 고민 속에서 격리가 이뤄지던 시절에서 격리를 하나의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시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장애, 노화, 다름, 약함에 대한 구별 그리고 그것을 일상에서 밀어내야 잘 살 수 있다는 판단이 한 시대의 지혜처럼 이야기되는 것이, 나는 무섭다. 약한 것들을 밀어내지 않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삶의 현실, 사회의 구조가 이 판단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이 또한 씁쓸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탈시설 운동이 이런 격리의 사회철학에 반기를 드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곳을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자는 다짐 같은 것이라 여긴다. 다른 것, 아픈 것, 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인간 생태계를 회복해나가려는 의지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한다.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금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은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더욱이 혜정과 같이 시설에서 청년기를 특수한 형태로 고립되어 보낸 사람의 경우 다시 사회로 나와 적응해 나가는 일은 만만치 않다. 본인은 본인대로, 주변은 주변대로 변화와 적응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 내가 경험한 탈시설은 주거지를 옮기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 중증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조로 사회 전체가 변화해 나가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많은 수가 발달장애인이다. 탈시설의 흐름에서도 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보다 어려운 과제로 다뤄진다. 그렇다고 해서 못할 건 없다. 시설은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

스웨덴은 한국처럼 장애인복지정책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운영해오던 나라였다. 하지만 스웨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었던

칼 그룬발트가 거주시설과 전문병원에서 이뤄진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비윤리적 의료실험 등을 폭로하면서 스웨덴 내에 탈시설 여론이 형성돼 갔다. 1985년 스웨덴 국회에서 탈시설 선언이 이뤄지고, 1997년에 「특수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법」이 제정되면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장애인 시설이 강제로 폐쇄되었다. 스웨덴은 시설 폐쇄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정비해나갔다. 스웨덴은 이제 아무리 중증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

둘째언니 장혜영의 말대로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는 있다”. 나는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다른 선택을 해나가길 바란다. 밀어내고 밀려났던 사람들이 다시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 좋겠다. 더 이상 누구도 밀어내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섞여서, 서로를 탐색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법을, 지혜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나는 <어른이 되면> 속에서 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연약함 그 아름다움을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보았다. 그 연약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을 응원하고 함께 살아가고 싶다.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렵지 않아 / 상냥함을 잃어가는 것이 두려울 뿐 /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연약하다는 것은 용감하게 산다는 것 한 가닥 실바람에도 온 마음을 내주는 것”(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

언니는 동생과 함께 노래를 지어 부르며, 쉽지 않은 일상을 계속
굴러나간다. 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곧 책으로도 출판된다고 하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이야기와 만나면 좋겠다. 

한살림재단 생명밥차

이선미(한살림재단)

공익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는 올해 5월부터 ‘생명밥차’ 사업을 시작했다. 매달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다양한 활동에 식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밥차를 직접 보내기도 하고 식재료나 식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핵심은 시민사회 활동 현장에 한 끼 ‘밥’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다.

지금까지 5월 2건, 6월 3건, 7월 2건 총 7건의 활동과 함께했다. 생태공동체 모임, 환경토크콘서트, 사회복지단체 운동회, 지역 청소년 돌봄 카페, 중증장애인 캠프 등에 때로는 밥차를 때로는 유기농 쌀과 식비를 지원했다. 생명밥차 덕분에 건강한 밥상에 대해 인식했다고 하고, 행사가 더욱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동안은 식사를 준비하느라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던 활동가들이 식사 준비의 부담을 덜게 되어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생명



5월 15일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원주시민포럼에서 주최한 '환경토크콘서트'에 밥차를 지원했다.
협동조합 밥통과 연대하여 준비한 밥차에 대한 행사 참가자들의 호응이 컸다.

밥차의 밥을 먹은 아이들은 학교 급식이 이렇게 나오면 너무 좋겠다고 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재단의 큰 영광이자 기쁨이다.

하지만 사실 감사 인사는 우리 재단에서 할 일이다. 무작정하고 서투르게 시작한 일에 관심을 가져 주고 사업에 지원해 준 이들 덕분에 한살림재단은 비로소 공익재단으로서 첫걸음을 내딛은 느낌이다. 우리 재단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아주 많이 감사하고 있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기금을 모아 준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 분들이야말로 생명밥차가 가능하게끔 한 주역이다. 이들 후원자들이 있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우리 재단의 꿈이 공허한 말로 끝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다. 생명밥차는 한살림재단이 후원자를 대신해 진행하는 것뿐으로, 모든 칭찬과 고마움의 표현은 온전히 후원자의 몫이다.

7월 15일까지 8월 생명밥차 접수를 받고 있다. 7월 23일부터 9월 접수가 시작되고 이후에도 매달 이어질 예정이다. 신청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현장에 더 건강한 밥을 전하



6월 2일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에서 주최한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하하호호 명랑운동회'에 밥차를 지원했다. 남녀노소가 골고루 참여한 행사로, 참여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 싶다. 생명밥차가 설 틈 없이 달리면 좋겠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생명밥차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 그 운행을 딱 멈추면 좋겠다.

한살림재단 생명밥차는 세상을 살리는 밥의 힘을 믿고 시작되었다. 앞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살림재단 홈페이지 <http://hansalimfoundation.org>
 후원문의 foundation@hansalim.or.kr, 02-6715-9456

누구든 와서 무엇이든 배워가는 학교

황진영((사)무위당사람들 사업팀장)

2011년 4월, 소박한 열망을 자양분 삼아 장일순을 존경하는 후학들이 원주에서 무위당학교를 세웠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꿈꾸며 걸어온 지 올해로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덧 지역사회에서는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대중의 교실로 자리를 잡았다. 원주 인근 도시에서도 수업을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오곤 한다. 그렇게 문턱을 드나든 이가 지금까지 700명이 훌쩍 넘는다.

무위당학교는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매 기수마다 표제를 선정한다. 생명사상과 협동운동을 더욱 폭넓은 분야에 적용하는 데 목표를 둔다. 민주주의, 공동체, 역사, 언론, 예술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풀이하는 중요한 열쇳말들



이 그간 무위당학교에서 다뤄졌다. “우리 시각이 정치에서부터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연대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운동은 가속화되고 더 깊이 제대로 정착이 되는 거지요.” 무위당이 남긴 격언이 무위당학교에 고스란히 녹아든 셈이다.

무위당학교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2018년 7월 기준 각 지역 한살림, 생협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도로 고양·파주,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성남·용인, 제주, 춘천, 충주·제천에서 무위당학교가 열렸다. 이 같은 흐름에 힘입어 지난 5월에는 무위당 24주기 행사의 일환으로 무위당학교 전국포럼이 마련됐다. 본래 실무자 간 연대를 강화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예상 외로 무위당학교를 주목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자리가 모자랄 만큼 성황을 이뤘다. 주관하는 단체는 각기 다르더라도 모든 지역의 무위당학교는 장일순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그런 면에서 이번 ‘무위당학교 전국포럼’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요즘 무위당학교는 연구소 설립 논의가 한창이다. 학기제의 한계



를 극복하고 학습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함이다. 연구소 설립에 앞서, 교수와 학습자간 토론이 가능한 형식의 심화세미나가 올 하반기부터 개설된다. 기존의 역할과 앞으로의 책임을 얼마나 적절히 챙겨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최근 크게 유행 중인 콘텐츠가 있다.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혹은 ‘백색소음’이라 부르는데, 넓은 음폭을 가져 일상생활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소리를 일컫는다. 이를테면 빗소리, 파도소리, 대화소리와 같은 것들이다. 집중력을 향상시키거나 편안한 심리상태를 유도한다는 속설을 토대로 네티즌 사이에 인기가 높다. 무위당학교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기능도 어쩌면 ‘백색소음’과 유사하지 않을까. 익숙하면서도 거슬리지 않는, 나직하고도 정직한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살아 생전 보잘것없는 조 한 알에 스스로를 비유하며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았던 무위당 장일순의 가르침을 이제 무위당학교를 통해 실현할 차례다. 

무위당학교 홈페이지 www.muwidang.org

무위당학교 페이스북 www.facebook.com/muwidangschool

적정기술 · 도시농업 · 반GMO · 탈핵 · 탈탄소문명……
세상과 사회를 수산해 사람과 자연을 돌보이게 하고 시간과 공생하는

《삶의 기술》, 그 두 번째 이야기



태양은 축제

삶의 기술, 두 번째

크리킨디센터 하자작업장학교 청년작업장 · 크리킨디센터 전환교육연구소 | 10,000원

...

태양은 우리에게 '빛'이라는 선물을 차고 넘치도록 줍니다. 우리는 태양이 주는 것만 가지고도 풍성하고
흥겨운 축제를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현혹되어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 썼습니다. 축제는 더 화려해졌지만, 그것은 즐겁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야 우리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태양의 선물을 생각해 냈습니다.
태양의 선물을 선용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이 난 숲에서 모두 허둥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크리킨디처럼 먼저 나섰습니다. 태양은 축제입니다.

태양이 마련한 풍요롭고 품위 있는 잔치에 초대합니다.